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보완수사



우수사례집

☀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보완수시
우수사례집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해야만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가명) 님 -



발간사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검사들은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민생범죄 사건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정치적 사건에서 가혹한 수사를 하며 표적·왜곡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권력자는 관대하게 수사해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조만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게 됩니다.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개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물론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죄는 잡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 21.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보완수사는 너무나 일상적 업무라 보고가 안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인 77건을 이 사례집에 담았습니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법무부 검찰개혁추진 TF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간을 비롯하여,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법무부장관 정 성 호

contents



1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18P

1 [문맹 할머니 예금 가로채기 사건] 20P

80대 문맹 여성노인 돈 빼돌리던 가사도우미 경찰 속이다 검찰에 덜미

2 [사망 피해자의 마지막 증거 사건] 22P

피해자 사망으로 묻힐 뻔한 성폭행범죄, 남겨진 필적과 음성파일로 들통

3 [숨겨진 불법촬영물 강간 사건] 24P

스토킹 범죄 뒤 숨은 몰카협박과 성폭력,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져

4 [피해자 사망 후 뒤집힌 불송치 사건] 26P

성폭력 피해여성의 피맺힌 恨 검찰 보완수사로 풀려

5 [지적장애인 집단성폭력 사건] 28P

한 마을주민들의 추악한 범죄, 경찰 피했지만 검찰에 덜미

6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31P

경찰이 외면한 10대의 집단성폭력, 검찰이 입증

7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사건] 38P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보완수사로 덜미



8 [사회초년생 14억 강통전세 사기 사건] 41P

경찰이 놓친 14억 강통전세 사기 꼬리 검찰이 잡다

9 [고교 후배 성노예 사건] 43P

여자후배 성노예화한 20대 남성 경찰 수사망 빠져나갈 뻔하다 검찰 그물망에 잡혀

10 [친족상도례 법리오인 사기 사건] 46P

지적장애 아내 등친 남편 풀어줄 뻔한 경찰수사 검찰이 바로잡아

11 [16년 전 노래방 방화 살인미수 사건] 48P

처벌 피할 뻔한 16년 전 시너 테러 검찰 보완수사로 재판 회부돼

12 [형제 간 상해치사 불송치 사건] 50P

경찰 초기 부실수사로 풀려날 뻔한 형제 살해범

13 [240억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52P

서민 477명 등친 240억 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검찰 보완수사로 전모 드러나

14 [체육관 사지마비 아동 상해 사건] 54P

3년간 방치된 체육관 아동 사지마비 사건,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가 인과관계 규명

15 [피해자 사망 후 다이어리 필적감정 사건] 58P

사망한 피해자의 일기로 추악한 성범죄 입증한 검찰 보완수사

16 [지적장애인 사주 살인 사건] 62P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난 지적장애인 청부살인 교사범의 교묘한 범행 수법

17 [부산 돌려차기 사건] 65P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성폭력'임을 공판 단계에서 밝혀낸 검찰 보완수사

18 [100명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사건] 71P

보이스피싱 처벌의 패러다임을 바꾼 검찰의 보완수사

2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74P



1 [공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 사건] 76P

범죄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 억울한 누명 벗겨준 검찰의 보완수사

2 ['한우 허위제보' 5성급 호텔 무고 사건] 80P

양심 품고 5성급 호텔 무고해 오보 나간 것을 밝혀낸 검찰수사

3 [4천만 원 합의금 노린 꽃뱀 무고 사건] 82P

"성폭행 당했다" 4천만 원 뜯어낸 꽃뱀 일당, 검찰 꼬리 밟혀

4 [비접촉 자전거사고 운전자 무죄규명 사건] 84P

자전거 피해갔는데 살인누명 쓸 뻔한 트럭 운전자 구한 검찰수사

5 [가해자로 몰린 집단폭행 피해자 사건] 86P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경찰수사를 바로잡은 수사

6 [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규명 사건] 88P

미성년 의붓딸들 성폭행범 될 뻔한 가장을 구한 검찰

7 [위법수사 마약사범 석방 사건] 90P

경찰 위법수사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 인권을 지켜낸 검찰수사

8 [무속인 가스라이팅 아동학대 사건] 92P

가스라이팅 당한 경우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최초 사례 만든 검찰

9 ['주저흔'이 밝혀낸 살인 누명 사건] 94P

'주저흔'으로 한국어 서툰 외국인의 살인누명 벗겨준 검찰

10 [아내 사기 공범으로 몰린 남편 사건] 96P

아내 사기극 공범으로 구속된 남편도 피해자였음을 밝혀낸 검찰

11 [탈북민 잠입·탈출 무죄규명 사건] 100P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몰린 북한이탈주민 억울함 풀어준 검찰

12 [허위신고 외국인 스토킹 사건] 102P

"스토킹 당했다"는 여성 말만 믿고 외국인 남성 구속한 경찰의 잘못 바로잡은 검찰

3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104P



1 [현직경찰 불법게임장 유착비리 사건] 106P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찰과 업자의 유착비리 줄줄이 캐낸 검찰수사

2 [경찰관 뇌물수수·수사기밀 유출 사건] 108P

성매매업주와 결탁한 비리 경찰의 뇌물수수 경찰이 놓친 것을 검찰이 잡아내

3 [경찰관 허위자백 강요 사건] 110P

승진 위해 마약사범에 허위자백 강요한 경찰, 검찰 수사에 덜미

4 [경찰간부 사건무마 뇌물수수 사건] 112P

뇌물 받고 사건 무마를 알선한 경찰 간부, 숨방망이 처벌로 넘어갈 뻔했다가 검찰수사로 구속돼

5 [동료 경찰관 수사무마 비리 사건] 114P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과 제 식구 감싸던 경찰을 밝혀낸 검찰수사

6 [경찰관 고소사건 7건 암장 사건] 116P

형사사건 전산망에서 사라진 7건의 비밀은?

7 [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 종합세트 사건] 118P

거액 뇌물 받고 범죄세탁 해준 경찰 비리종합세트가 말해주는 것

8 [골프장 뇌물수수 음주측정 무마 사건] 122P

음주측정 거부 3차례 불송치 사건 뒤에 뇌물 경찰 있었다

9 [사기범죄 공소시효 도과 사건] 124P

8년간 수사 뭉개 공소시효 넘긴 경찰, 검찰 시정조치 요구로 문책

10 [경찰 구속기간 도과 송치 사건] 126P

구속기간 넘겨 상습 스토킹범 풀어준 경찰, 신속한 영장 재청구로 추가 스토킹 피해 막은 검찰

11 [가평 계곡 살인 사건] 128P

검찰 재수사로 가스라이팅과 적극적 살인 밝혀진 이은해 사건

12 [2,400억 코인 자금세탁 및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 132P

2,400억대 범죄수익 자금세탁 일당, 이들로부터 뒤통 받고 수사편의 제공한 현직 경찰서장을 검찰이 구속기소

4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136P



1 [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138P

경찰은 아내의 거짓 자백에 속아 송치, 검찰은 남편의 무면허 뺑소니 운전 밝혀내

2 [교통사고 기록 속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 140P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사건을 검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라는 것을 밝혀내

3 [13세 아동 성매매 둔갑 성폭행 사건] 142P

경찰이 미성년 성매매로 송치한 사건, 성폭행으로 밝혀져

4 [미성년자 절도 배후조종 사건] 144P

경찰에선 단순 차량털이, 검찰에선 배후 사주범이 있음을 밝혀내

5 [불법 사행성게임장 '바지사장' 사건] 146P

사건현장에 있던 '진짜 사장'까지 잡아낸 검찰

6 [4년간 '바지사장' 내세운 환경법규 위반 사건] 148P

'바지사장'의 허위 자백에 4년째 영긴 경찰수사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낸 검찰의 과학적 보완수사

7 [아파트 주차장 내 쇠파지 강도살인미수 사건] 150P

'문지마 폭행'으로 송치된 '쇠망치 테러', 사전 계획된 강도살인미수 사건임을 밝힌 검찰

5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 154P



1 [전화번호로 찾은 시효임박 사기범 사건] 156P

경찰이 해결 못한 공소시효 임박 사기사건, 검찰이 전화번호 추적으로 해결

2 [9년 만에 밝혀진 사기범 누명 사건] 158P

진범의 거짓진술에 9년 허송세월한 경찰, 그가 동종 범죄 상습범임을 밝혀 자백 받아낸 검찰

3 [경찰의 이중 공소시효 도과 사건] 160P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 검찰에 들통

4 [공소시효 3일 전 잡은 무보험 운전자 사건] 162P

공소시효 만료 3일 앞둔 사건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한 검찰

5 [공소시효 임박 1억 원대 사기 사건] 164P

9년간 잠자던 1억 사기사건, 공소시효 12일 전 검찰이 해결



6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166P



1 [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 168P

"120억 상당 비트코인 있다"며 경찰 속이려던 사기범죄, 검찰 보완수사에 철퇴

2 ['메뚜기형 사무장병원' 연쇄 사기 사건] 172P

경찰이 개별 수사하던 7개의 '사무장병원' 사건 병합해 '메뚜기형' 실체 밝혀낸 검찰 수사

3 [다가구주택 4채 연쇄 전세사기 사건] 174P

경찰의 개별 수사사건 4건 묶어 20억 원대 전세사기 주범 구속시킨 검찰

4 [13개 흩어진 사건 병합 100억 코인사기 사건] 176P

경찰이 수사하던 13건, 검찰의 통합수사로 100억대 가상자산 사기로 밝혀져

5 [143억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사건] 178P

전국 7개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사건, 검찰이 하나로 꿰어 143억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 구속

6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180P

'세 모녀 전세사기' 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피해 밝혀 범죄규명

7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폐를 가한 사례 182P

1 [아동학대범 도주·은신 추적 구속 사건] 184P

경찰은 단순상해로 불구속, 검찰은 아동학대범으로 구속

2 [감금·협박 강제합의 사건] 186P

경찰은 합의로 불구속 송치, 검찰은 감금·협박 밝혀 구속 기소

3 [합동준강간 사건] 188P

경찰 불구속 송치한 형제의 준강간범죄, 검찰 증거 찾아내 구속기소

4 [연인 행세 금원 편취 사기 사건] 190P

6명 여성 올린 연애사기범, 검찰의 종합수사에 철렁

5 [대규모 불법사금융 조직 사건] 192P

경찰은 “3천만원대 불법 대부업”, 검찰은 “33억원 규모 불법 사금융 조직범죄”



8

사건 해결에서 사회적 회복으로 정의의 완성을 이룬 사례 196P

1 [서울대 노숙자 사건] 198P

절도범으로 체포된 서울대 노숙자, 딱한 사연 밝혀낸 검찰 도움으로 새 출발

2 [JMS 교주 성폭력 사건] 202P

JMS 교주의 상습 성폭력,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협력해 징역 17년형 끌어내

3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208P

6남매 키우며 뱃속 아기까지 둔 이주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검찰에 덜미

4 [친부의 자녀 상습학대 사건] 210P

친부의 상습 학대에 자살 시도까지, 검찰이 추가 학대 밝혀내고 피해아동 보호

5 [계부의 의붓딸 성폭력 및 자녀 학대 사건] 212P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의 친자녀 학대까지 밝혀내고 친권상실 청구로 가족보호에 나선 검찰



9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 214P



1 [경찰 2회 불송치 후 고소인 사망한 6.2억 횡령 사건] 216P

檢, '고소인 사망' 문힐 뻔한 6억대 횡령 전모 밝혀

2 [게임프로그램 개발 투자 사기 불송치 사건] 220P

경찰 못 밝힌 게임프로그램 개발 투자사기, 검찰이 밝혀내

3 [오피스텔 분양사기 불송치 사건] 222P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오피스텔 분양사기 검찰의 보완수사로 해당 건설업체 대표 구속

4 [변호사법위반 등 불송치 사건] 226P

경찰이 놓친 '로비 명목' 금품수수, 검찰 보완수사로 수갑 채워

5 [아파트 수분양자 인도청구 방해 불송치 사건] 228P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300세대 아파트 입주 방해사건, 검찰은 배후 증견건설사 대표 기소

6 [가정폭력 무고 불송치 사건] 230P

국제 결혼한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무고한 국제결혼 브로커, 경찰 수사 피했다가 검찰에 덜미

7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불송치 사건] 232P

허위 영수증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금융범죄를 밝혀낸 검찰

1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피해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그 진심으로 정의의 방향을 세워갑니다.

겪은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나 정확한 진실이 드러나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치유 될 때가 진정한 사건의 종결입니다.



- 1 문맹 할머니 예금 가로채기 사건 20P
- 2 사망 피해자의 마지막 증거 사건 22P
- 3 숨겨진 불법촬영물 강간 사건 24P
- 4 피해자 사망 후 뒤집힌 불송치 사건 26P
- 5 지적장애인 집단성폭력 사건 28P
- 6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31P
- 7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사건 38P
- 8 사회초년생 14억 강통전세 사기 사건 41P
- 9 고교 후배 성노예 사건 43P
- 10 친족상도례 범리오인 사기 사건 46P
- 11 16년 전 노래방 방화 살인미수 사건 48P
- 12 형제 간 상해치사 불송치 사건 50P
- 13 240억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52P
- 14 체육관 사지마비 아동 상해 사건 54P
- 15 피해자 사망 후 다이어리 필적감정 사건 58P
- 16 지적장애인 사주 살인 사건 62P
- 17 부산 돌려차기 사건 65P
- 18 100명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사건 71P

**검사나 금융감독원이
모텔로 가라고 하나요?
보이스피싱입니다.**

1. 범죄의 연쇄단이 지금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있습니다.
3.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 (대부분) 검사,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범죄 중 하나라도 해결된다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서 112에 신고하세요.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12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립경찰청 112 콜센터에 전화)

80대 문맹 여성노인 돈 빼돌리던 가사도우미 경찰 속이다 검찰에 덜미



글을 못 읽는 80대 여성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던 40대 가사도우미가 경찰수사는 따돌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가사도우미 A씨는 2018년 3월~2020년 2월 24개월 간 80대 중반의 여성 B씨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B씨가 문맹이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B씨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잠시 슬쩍해 B씨 은행계좌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을 빼돌렸다. 자동화기기(ATM)에서 84회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인출했고, 14회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본인 및 가족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가 직접 돈을 인출하고 이체한 것”이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대구서부지청)은 3가지의 의문점을 발견했다.

첫째, B씨가 문맹에 고령임에도 혼자서 ATM 인출과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을까. 둘째, 설사 가능하다 해도 일반적 노년층과 달리 너무 자주 인출과 이체를 한 것 아닌가. 셋째, 경찰의 초동수사가 참고인 조사와 기본 거래 내역 확인에 그쳐 누가 ATM에서 돈을 인출했고 그 돈들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은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A씨와 그 가족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피해자 B씨의 돈이 그들 계좌로 흘러들어 갔음을 발견했다. 또 B씨와 은행에 동행해 B씨가 실제 거래

은행의 ATM에서 현금 인출과 계좌 송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A씨와 B씨에 대한 대질조사로 인출과 이체 시점과 경위를 조사한 결과, A씨의 진술에 여러 허점이 있음을 밝혀냈다.

A씨는 결국 2023년 7월 검찰에서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맹·노령으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의 실체를 경찰이 놓쳤으나, 검찰이 계좌 추적, 현장검증, 대질조사 등의 보완수사로 실체를 밝혀낸 사건이다.



[1-1] [문맹 할머니 예금 가로채기 사건]

문맹인 고령자의 예금 1억 3,0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한 사안에서, 계좌추적, 은행 현장검증 등 적극 보완수사하여 직구속 기소한 사례 (대구서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집안일을 돕는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범죄 피해를 보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점을 악용하며, 범죄를 당해도 자녀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신고를 꺼리는 심리까지 이용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 23. 7. 25. 서울신문 「문맹 노인 계좌서 야금야금...1억여원 등친 나쁜 가사도우미」 등 보도

피해자 사망으로 문힐 뻔한 성폭행범죄, 남겨진 필적과 음성파일로 들통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한 10대 여성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바람에 풀려날 뻔했던 남자친구의 범행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당시 18세이던 A씨는 9개월간 교제해왔던 19세 남자친구 B씨에게 머리카락을 잡힌 채 자신의 집으로 끌려가 커터 칼로 위협받으며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수사 시간을 끝다가 피해자인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비극적이게도, A씨는 2023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모친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핵심 진술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며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먼저 A씨 유족과 면담을 통해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A씨의 휴대전화와 피해사실이 기재된 일기장 원본을 제출받았다. 필적 감정을 대검에 의뢰해 일기장의 글이 A씨 본인 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주변에 성폭력 피해상황을 이야기한 음성파일을 복원해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 B씨를 소환 조사해 그의 주장이 A씨 일기장 및 휴대전화 음성파일과 배치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런 물적 증거를 토대로 2024년 12월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사망으로 직접 진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남긴 일기와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장기간 수사와 자식을 잃는 슬픔으로 심신이 지친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고, 범죄 피해자 유족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다하였다.

●
●
●
< > ↺ 🔍
↗
☰



[1-2] [사망 피해자의 마지막 증거 사건]

강간 사건이 접수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사안에서 검찰이 모친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필적 감정, 휴대전화 음성파일 확보 등 직접 보완수사 후 혐의 규명하여 기소(원주지청)

성폭력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가해자와 사회 시스템이 함께 만든 '사회적 타살'에 가깝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이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기댈 곳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법의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5. 1. 21. 연합뉴스 '피해자 숨져 불송치된 성폭행 범인...검찰 과학수사로 기소' 등 보도

스토킹 범죄 뒤 숨은 몰카협박과 성폭력,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져



경찰의 느슨한 수사로 스토킹 범죄로만 치부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심층 수사로 몰카 협박과 성폭력 및 금품 갈취까지 얹힌 복합적인 성학대 범죄임이 밝혀졌다.

20대 여성인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과거 몰래 촬영된 은밀한 사진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2024년 3월부터 3개월간 18회나 성폭행을 당했다. 또 대학교 조교로 채용된 뒤에는 B씨로부터 “300만 원을 주거나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몸으로 때워라”라는 협박을 받고 100만 원을 갈취당했다. B씨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해 A씨를 감시하다가 A씨가 연락을 끊자, 주거지와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참다못한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스토킹 혐의만 밝혀냈을 뿐 “촬영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진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성폭행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B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촬영물을 삭제해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가 경찰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노트북과 클라우드(외부 서버 저장소) 같은 다른 저장매체까지 확보해 파일 유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둘째, 실제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렇게 믿게 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상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경찰은 2025년 2월 피의자 B씨의 노트북을 추가로 압수해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을 확보했고, 촬영물 이용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송치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의 계좌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공갈 협박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5년 5월 범죄피해자센터에 지원을 의뢰해 A씨에게 생계비 지급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B씨 구속 전 심문기일에 A씨가 B씨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B씨는 구속기소됐다. 경찰의 아쉬운 법리 해석과 미온적 대처로 덮일 뻔한 성폭력 범죄 피해의 전모를 밝혀내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차단한 수사였다.

[1-3] [숨겨진 불법촬영물 강간 사건]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고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만 송치하고 주요 범죄인 강간 및 촬영물이용강요 혐의는 불송치한 사건에서, 재수사 요청으로 불법촬영물 등 객관적 증거 확보하고, 금전거래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 후 혐의 규명하여 피의자 직구속 기소(마산지청)

스토킹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종종 더 강력한 범죄의 예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스토킹 사건을 단순 괴롭힘으로 치부하여 경시할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 성폭력, 금품 갈취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신속하게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 가해자를 구속기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여성의 피맺힌 恨 검찰 보완수사로 풀려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경찰 수사에 막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자 죽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여성의 한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풀렸다.

여성 직장인인 A씨(29세)는 2년 전인 2023년 6월 직장 상사인 B씨(4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그의 차량과 집에서 원하지 않은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사건 직후부터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B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상호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두 사람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실시했다. 검사결과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 경찰은 이를 토대로 그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닷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추가 진술확보가 불가능해져 그대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다.



A씨 유족의 요청으로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심리생리검사 기록을 살펴보다 핵심 쟁점이 아닌 질문들과 주관적 용어가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심리생리검사 결과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정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와 B씨의 직장에서 실시한 감사 자료나 성폭력 상담 기록,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등 중요 증거들을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했다.



검찰은 직장 감사 자료를 확보해 A씨의 진술 일관성을 확인했다. 또 A씨의 직장동료이자 전 남친인 C씨로부터 A씨가 사건 직후부터 피해 상황을 털어놓은 반면 B씨는 사내에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검찰은 여기에 A씨의 유족과 고소대리인(변호사)이 법정에서 사망한 A씨를 대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2024년 3월 법원은 B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소 당사자인 피해자 사후에도 과학적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음을 밝힌 동시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존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뒷받침한 사건이었다.



[1-4] [피해자 사망 후 뒤집힌 불송치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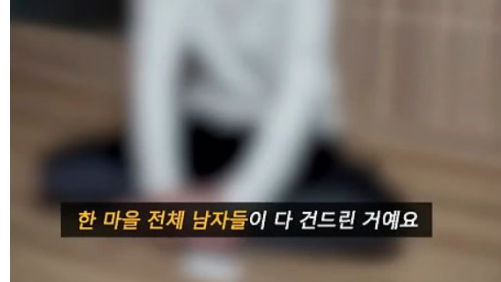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비판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사건 전면 재조사,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피해자의 명든 사진 등 확보하여 실체 규명한 후 피의자 직구속 기소

지인들 사이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아동·장애인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발생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 등의 경우 경찰이 조사한 서류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은 피해자를 절망에 빠뜨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걸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검찰청 등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보호를 위해 추가 취재나 언론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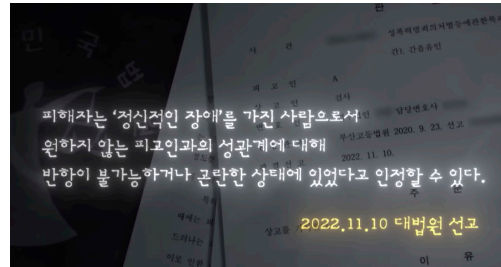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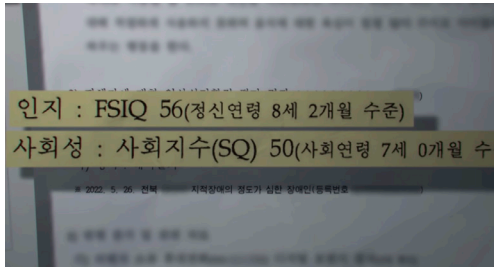
한 마을주민들의 추악한 범죄, 경찰 피했지만 검찰에 덜미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오랫동안 성폭행 및 추행을 저질러온 마을주민 7명이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왔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50대 여성 A씨는 10여 년 전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말과 행동이 어눌해지면서 지능이 8세 어린이 수준으로 떨어진 후천적 지적 장애인이었다. A씨는 2022년 남편이 사망한 뒤 딸에게 2015년~2022년 같은 마을에서 사는 다수의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냈고 딸은 이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중 CCTV 영상에 찍혀 범행을 시인한 1명만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진술이 불분명하고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지적 장애인 맞춤형 진술 청취와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또 나이나 지위 외에도 SNS 접촉 빈도 등으로 인해 성추행 및 성폭행에 항거하기 힘든 사정을 수집하고 제시하여 자칫 묻힐 뻔한 추악한 범행을 규명한 사례이다.

● ● ● < > ↺ 🔍

↗ ☰

[1-5] [지적장애인 집단성폭력 사건]

마을주민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였으나 피의자 중 1명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 공범 전원을 인지 후 기소하고, 피해자 지원까지 연계 (장흥지청)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저항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놓고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범죄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3. 5. 3. 조선일보 「남편 지인 12명, 지적장애 여성 성범죄 의혹...마을에선 무슨 일이」 등 보도

경찰이 외면한 10대의 집단성폭력, 검찰이 입증

중학생 시절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신고하면 유폐하겠다고 협박했던 남녀 일당 4명이 경찰의 솜방망이 수사로 처벌을 피할 뻔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18년 8월 당시 14세였던 A씨는 동성 친구의 사주를 받은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A씨의 동성 친구 B씨는 이를 불법 촬영하고 신고하면 유폐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까지 저질렀다. A씨는 힘겨운 후유증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죽이고 살다가 5년 7개월 뒤인 2024년 2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개월이나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 A씨의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대전지검)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4일 만에 경찰의 재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4개월간 직접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자 이를 반박할 목격자 조사나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또 피해자 A씨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점만 문제삼을 뿐 피의자들의 과거 행적이나 교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보호관찰 기록과 교도소 점견 기록 등 유관기관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핵심 목격자의 상세한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또 보호관찰소와 교도소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들의 성향과 범죄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특수강간과 보복 협박 등 일부 피의자의 여죄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 진술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및 학자금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5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주범 B씨(22세)를 구속기소하고 B씨의 사주를 받아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 학대 범죄 발생 후 7년 만이었고 신고 접수 후 17개월 만이었다.



[1-6]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미성년 가해자들이 또래 피해자를 집단 강간·성학대한 사건에서 경찰이 주요 혐의를 불송치하였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한 후 주범 1명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조치 (대전지검)

모든 범죄 피해가 그렇지만, 특히 어린 시절 성폭력 범죄의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범죄피해를 밝혀내는 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 25. 7. 10. 경향신문 「남학생 동원해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7년 만에 가해자들 재판행」 등 보도



정연수(가명)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오늘 저는 검·경 수사 시스템을 직접 겪어본 피해자로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2월경 6년 만에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수차례 진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려는 노력 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대응으로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2월부터 불송치 결정이 난 12월까지 총 4차례나 조사받았으나 경찰은 제출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떠올리기 힘든 기억을 떠올리며 증거물이나 사건에 대해 설명해도 이를 전혀 숙지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로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물어보고 왜 피의자들과 진술이 다르냐며 따 지는 것이 되풀이되면서 저는 고통스러웠던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뱉어내야 했습니다.

주범인 피의자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을 속이고 해외로 도피하여 지명수배결정까지만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를 협박·희롱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주범을 포함해 다른 피의자들의 전과까지 합하면 수십 개가 넘어갔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검찰 수사 단계에서야 확인된 사실입니다. 조희만 하면 확인 가능했던 내용임에도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렇게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 송치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사이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가해자들은 모두 출소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수감되어 있어 안심하고 고소했던 저는 그들이 출소한 후 '2차 가 해'에 노출되었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 검사 가 신속하게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시킨 후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제게 직접적인 보복을 했 을 겁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질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느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발생지인 집의 구조를 그림으로도 제출하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탔는지, 집안 가구의 배치는 어땠는지, 거실 창문으로 보이던 풍경은 무엇이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속 끌려갔던 제게 그 집이 누구 집이냐는 질문만 했습니다. 마치 납치당한 피해자에게 납치 장소가 어디인지를 기억해 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사를 경찰이 해야 하는데, 피해자인 제게 피해 입증을 위한 수사를 떠맡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선 제 진술을 확인하고 구조가 비슷한 아파트 사진과 피의자 거주지 등을 대조하면서 결국 사건발생지가 누구의 집인지 특정해 냈습니다. 수사를 피해자가 해야 한다면 수사기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랬던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추가적으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그저 제게 이전까지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확인만 한 채 처음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처음엔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 진술이 다르다며 불송치했던 것인가요? 만약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고 검사는 그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한다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고 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묶인 채 좌절해야만 했을 겁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제게 “솔직하게 안 한 애들은 좀 빼고 시마이 치자”, “피해자 진술뿐이고 증거라고 제출하는 것은 오래돼 효력이 없다”, “송치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내 일이 많아진다”,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닌데 나도 힘들다”며 피해자인 제 앞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제 사건 경찰처럼 피해자를 이렇게 대하고 불성실하게 수사하는 것이 수사관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경찰의 무능함이나 부족한 감수성 문제를 넘어서 이들이 속한 수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매우 우려스러운 뿐입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더 많이 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의 현실은 너무나 엉망이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로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지금도 업무가 많다며, 그 건은 고소가 안 된다며 돌려보내고, 수사를 하더라도 여러 힘든 사정을 내세워 사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불송치해 버리는데,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대로 수사하지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경찰에 더 큰 권한만 주어지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꾼다면 그 피해는 저같은 힘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방치되어 죽음으로 몰리고,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수사권의 이동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의 경찰조직은 전문성도, 책임성도, 감수성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마저 축소된다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은 다시 되돌릴 수도 구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 신중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25. 9. 12.)」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A13면 사회

"어차피 송치 안 돼요"... 집단 성학대 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대전지법에서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여중생 집단 성학대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가 앞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대저=최주연 기자

주범 김모씨와 친구들 대화

● 김씨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찐친(진짜 친구)'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린 대화 캡처 내용

친구

"더 글로리' 봐 봐. 왜 이렇게 너 생각이 나지."

김씨

"욕이나. 나 대본집으로 봤는데."

"내가 너 (교도소) 들어가 있을 때 게시물에 'OO(김씨 이름)야, '더 글로리' 이거 니가 주인공이네' 댓글 달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봤어? 연진아?"

"자살하러 감 나"

"근데 너 아니냐 진짜"

● 김씨가 친구와 나눈 문자 내용

김씨

"내가 연수(가명) 개됐다. 오늘 3시간 동안 빠따로 XX 때리고 니킥 XX하고."

친구

"응응. 개 어떻게 됐다."

"얼굴 XX돼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고 울면서 빌던데? 개 서울 가고 있어. 전학간데."

"엥 진짜? 바본가 XX. 개 엄마는?"

"장애인 취급 안 해."

"개 엄마 만났어?"

"아니. 내가 때린 거 몰라. 그래서 그냥 일 끝났어."

그래픽=김문구 기자

경찰 조사 '수사관-피해자' 대화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 있어
수사관 송치하기 어렵다."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했는데
이 정도로 안 되나."

피해자

"오래돼서 증거가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송치해서 검찰, 법원
판단을 받게 해달라."

"송치해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면 내 일이
 많아진다. 피의자들이
교도소에 있어 조사하려면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힘들다."

"불송치하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

"이의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될 거다."

수사관 발언

"피의자와 아는 사이인데, 개 느끼하게
생겼잖아."

"피의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관계한 것
맞느냐."

"본인이 기억을 똑바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솔직하게 아무 것도 안 한 애들은 좀 빼고
끝내자."

● 피해자 기억, 문자 등 재구성

그래픽=김문구 기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보완수사로 덜미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한 남편이 경찰의 수사망은 피했지만 검찰의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50대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산간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당시 51세이던 아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의식을 잃게 했다. 그리고 아내를 태운 차량을 산간도로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화재를 발생시킨 뒤 119 신고했다. B씨는 응급조치로 일시적으로 맥박이 돌아왔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남편인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내 B씨가 차를 직접 운행 중 운전미숙



으로 추락사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검찰(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이송받아 검토한 안양지청은 단순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두 가지 대목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거액의 보험금이었다. 사고 발생 직전 B씨 명의의 거액의 여행자보험 계약이 체결됐다. A씨는 3억 8천만 원대의 보험금을 받고도 추가로 3억 원을 더 청구한 상태였다. 두 번째는 부검 소견과 차량 손상 상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하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으로 의사와 약사 자격을 갖춘 2명의 검사와 화재감식 전문 수사관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각적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첫째 여행자보험 가입 당시의 IP추적과 보험금 결제 계좌 추적을 통해 아내 B씨의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이 이뤄졌고 NICE 신용정보와 계좌 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남편 A씨의 자금난을 밝혀냈다. A씨는 오랜 불륜으로 혼인상태가 파탄 직전에 있었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둘째 가천대, 부산대, 서울대 법의학 교수 3명에게 새로 감정을 의뢰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외력에 의한 질식 가능성이 높다”는 2명의 소견을 받았다. 특히 입술과 볼 점막의 다발성 좌상과 뒤통수 피부 벗겨짐이 코와 입이 막혀 숨진 비구 폐쇄성 질식사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셋째 사건 전후 부부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검색기록과 현장 지도 조회, 노트북 캡처 파일 등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의 상황이 남편 A씨의 진술과 상충된다는 점을 찾아냈다. 또한 피의자의 내연녀, 부동산사무실 직원, 가족 등 주변지인 조사를 통해 가정불화와



경제적 파탄 상황 그리고 사건 전후 A씨의 수상한 행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3년 7월 A씨를 살인, 보험사기,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보험사기와 계획살인이 접목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의 한계를 법의학과 디지털 포렌식을 접목한 과학수사로 돌파한 사례였다. 1심에서 징역 총 40년이 선고되었고, 검찰에서는 양형 부당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7]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사건]

아내를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했으나 경찰이 단순 사고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험·의료기록 재분석, 법의학자 감정 등 끈질긴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를 규명하고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안양지청)

거액의 보험금은 가족간의 끔찍한 살인 사건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운전 미숙에 의한 교통사고로 위장한 이 사건의 전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11회, 이른바 '비둘치고개 아내 사망 사건'으로 방영되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원통함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중형선고로 조금은 풀렸기를 바랍니다.

▶ 25. 10. 3. 동아일보 「아내 살해범, 교통사고 위장 무죄 받을뻔...수사 보완장치 필요」 등 보도

경찰이 농친 14억 깡통전세 사기 꼬리 검찰이 잡다

사회초년생 14명의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갈취해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의 수사망을 요령 좋게 피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에 꼬리가 잡혔다.

피의자 4명은 자본금 없이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뒤 14명의 임차인들에게 주택 가격과 대출 상황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14억 원과 일부 전세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매수 대금을 충당했다. 이후 집값이 상승하면 팔아서 차액을 챙기려는 무자본 겹 투자 깡통전세 사기였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아 전세 만기가 돌아왔지만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14명의 임차인들은 전세사기로 다세대주택 공동소유자인 임대인 4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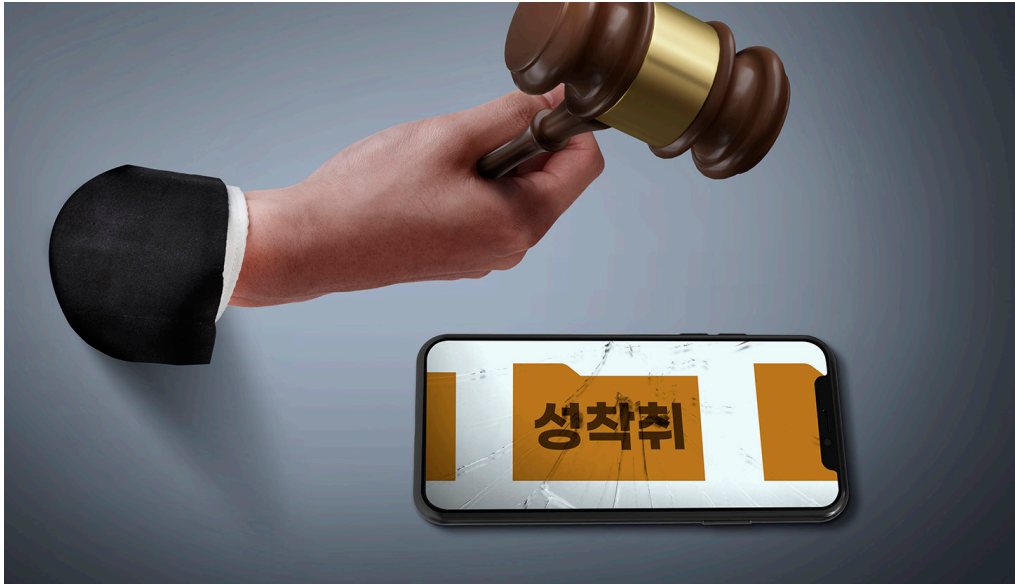
검찰(수원지검)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경찰이 임대인들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다세대주택의 시세와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총액, 대출 승계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안내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한 뒤 부동산 사기 범죄에 대한 노하우를 발휘해 전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4명의 피의자를 재조사하면서 금융기관 제출 서류,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과다하다는 것을 명백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여자후배 성노예화한 20대 남성 경찰 수사망 빠져나갈 뻔하다 검찰 그물망에 잡혀



고등학교 2년 후배인 여성을 상대로 채무를 빌미로 성노예화했던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가 검찰 보완수사에 걸려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대 남성인 A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고교 후배인 여성 B씨를 39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B씨가 채무를 청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으로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했다. B씨가 채무를 갚고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또 A씨의 소변을 삼키게 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제3자와 동시 성관계를 갖는 쓰리섬을 강요하는 등 가학적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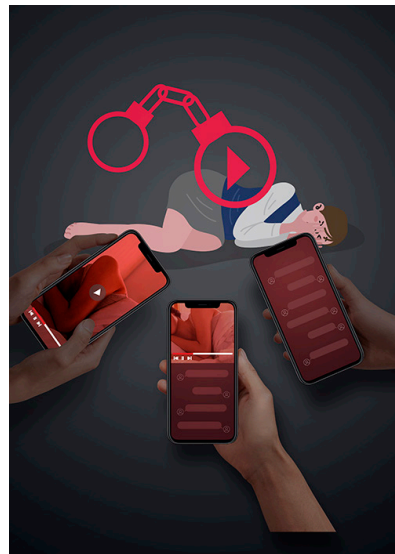
B씨는 결국 2023년 3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40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에서 협박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과 A씨가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여러모로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검찰은 영상에 대해서 즉시 삭제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은 대화내역 중 협박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재수사와 피해자 진술 재분석과 정신과 진료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그 결과 협박에 의한 성폭력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후 피의자를 2회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 심층 면담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두 사람 간에 오간 대화 내역 전체를 복원해 추가 범행을 인지하였다. 성폭행과 성관계 영상촬영 외에도 소변을 마시게 하고, 쓰리섬을 요구하는 등 A씨가 추가 범행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또 B씨의 정신감정을 통해 적응장애 진단기록과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까지 확인해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4년 1월 구속상태에 있던 A씨를 강간치상, 강요, 공갈, 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해 6월 1심에서 징역 5년, 8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11월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1-9] [고교 후배 성노예 사건]

고교 후배를 채무 관계로 협박해 2년간 39회 강간하는 등 성노예로 삼은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였으나, 검찰이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로 추가 엽기적 강요 행위까지 밝혀낸 후 직구속 기소, 성관계 영상 삭제 등으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 지원까지 연계(홍성지청)

성범죄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힘의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 관계'라는 심리적 약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강요와 심리적 지배가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명백한 협박임을 보여줍니다. 경찰이 간과한 대화 내역을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고, 정신적 상해까지 입증해 혐의를 규명했습니다.

▶ 24. 5. 5. 노컷뉴스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등 보도

지적장애 아내 등친 남편 풀어줄 뻔한 경찰수사 검찰이 바로잡아

지적장애 있는 아내의 은행계좌 돈을 빼돌리거나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남편의 범죄를 ‘친족상도례’로 잘못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오판을 검찰이 바로 잡고 남편을 구속기소했다.

30대 중반의 남성인 A씨는 2023년 5월 3급 지적장애가 있는 당시 31세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그해 8월까지 3개월간 B씨 명의 계좌의 예금액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약 7,400만 원을 빼돌렸다.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당시 피해자 B씨와 혼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의 형법상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2024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를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대구지검)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선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을 경찰이 모르고 잘못된 법리 해석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 직후 단기간에 거액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24년 8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B씨에게 가학행위를 한 정황과 범행 수익의 사용 내역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약 1,6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발견해 총액이 7,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A씨에게 다른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소액결제 사기 전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2025년 4월 구속됐고 공범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에서 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본건 범행으로 인해 A씨와 B씨 간에는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다. 경찰의 잘못된 법리 판단으로 무죄 방면될 뻔했던 장애인 상대 범죄자가 검찰의 개입으로 법의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
●
●
< > ↺ 🔍

↗
☰

[1-10] [친족상도레 법리오인 사기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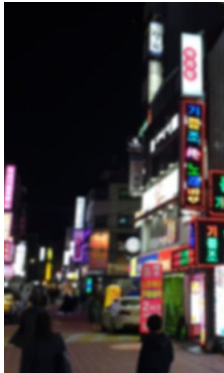
지적장애 아내를 속여 7,400만 원을 편취했으나, 경찰이 '친족상도레' 법리를 오해하여 불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장애인 학대범죄'에는 친족상도레가 배제됨을 지적하며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구하여 법리를 바로잡은 다음, 송치받아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구속기소(대구지검)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레는 '가정의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눈감아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등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레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산 범죄를 저지른 특정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형을 무조건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레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25. 5. 13. 중앙일보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 후 전 재산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등 보도

처벌 피할 뻔한 16년 전 시너 테러 검찰 보완수사로 재판 회부돼

시너 테러를 저지르고 잡혔다가 16년 만에 체포된 남성이 경찰의 공소시효 만료된 혐의 적용, 증거 분실로 인해 풀려날 뻔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60대 노래방업주이던 A씨는 2009년 10월 시너가 든 깡통과 각목을 들고 경쟁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노래방업주 B씨를 위협하다 이를 말리려는 노래방 직원 C씨(당시 36세)에게 시너를 끼얹어 전신화상을 입혔다.

A씨는 바로 도주한 뒤 잡혀 2011년 기소 중지 되었다가 2025년 3월 운전면허 갱신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B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C씨에 대한 살인미수였다. 특수협박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선 16년 전 C씨가 제출했던 진단서를 분실한 데다 관련 의무기록 확보에도 실패했다. 자칫하면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상황이었다.

검찰(서울서부지검)은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불송치된 피해자 B씨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구속 송치된 피해자 C씨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C씨가 치료받은 병원의 원무과에서 자료를 찾을 수 없자 다시 의무기록실을 뒤져서 의무기록과 상해사진, 진료비 내역을 확보했다. 또 피해자들과 피의자를 새롭게 조사해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내는 한편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피해자 C씨가 치료비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주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5년 4월 B씨와 C씨 모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6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중대범죄가 경찰의 부실수사와 불충분한 법리 적용으로 문힐 뻔한 것을 검찰의 정확한 법리적용과 보완수사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서 1심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11] [16년 전 노래방 방화 살인미수 사건]

16년 전 경쟁 노래방 업주에게 시너를 뿌린 사건을 일부 불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은 재수사요청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고의를 입증,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서울서부)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16년 전 발생한 끔찍한 시너 테러 사건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추적과 기록 재검토로 사라진 증거를 복원하고 정확한 혐의를 밝혀내, 결국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 25. 9. 26. 한겨레 '도주 16년 만에 붙잡힌 살인미수 70대, 1심서 징역 10년' 등 보도

경찰 초기 부실수사로 풀려날 뻔한 형제 살해범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로 풀려날 뻔했던 형제 살해범이 수사팀 개편 후 구속기소됐다.

2022년 6월 당시 63세이던 A씨는 새벽시간 네 살 적은 동생 B씨의 집에 찾아가 마구 잡이 폭행을 가했다. 집에서 혼자 방치된 B씨는 다발성 손상과 장간막 출혈,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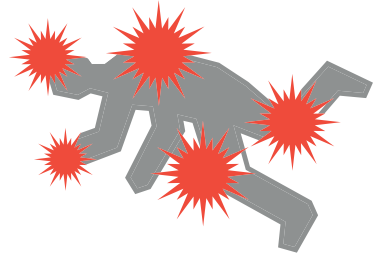


경찰은 주거지에서 숨겨 있는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부검 결과 타살 소견 회신에 검사의 의견제시로 주변인 탐문, 휴대전화 및 CCTV확보 등을 하였으나, 결국 불송치하였다.

검찰(청주지검)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였다. 현장에서 혈흔이 나왔고 시신 사진에서 다발성 손상 흔적을 찾아내 B씨가 피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경찰에 주변 CCTV 확인, 주변인 탐문, 법의학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나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사실상 재수사 요청을 불이행하였다.

그동안 참고인이 사망하고 기지국 조회도 어려워져 사건이 단순변사로 문힐 위험이 커지자 검찰이 사건 송치와 함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웃, 친지, 의료기관 관계자 등 42명에 이르는 주변인 탐문을 통해 폭행 목격자와 폭행 피해 정황을 확보했다.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동생과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도 확보했다.



이어 범행 당일 주거지 CCTV에 촬영된 모습을 확보해 그 시간 동생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법의학 감정을 통해 B씨 시신의 상흔이 자해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4년 7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장기간 방치된 형제 간 살인사건을 치밀하고 과학적 수사로 그 실체를 밝혀낸 사건이라고 하겠다.



[1-12] [형제 간 상해치사 불송치 사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형제 간 상해치사 사건에서, 검사가 재수사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이마저 미이행하자 사건 송치 요구 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를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청주지검)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하지만 초동수사가 부실할 경우 변사 사건에 감춰져 있는 살인 사건이 밝혀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간 살인이 '단순 변사'로 묻혀 피해자의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지 못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 24. 7. 26. 뉴시스 「불송치로 묻힐 뻔...검찰 보완수사로 '동생 살해 60대' 재판에」 등 보도

서민 477명 등친 240억 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검찰 보완수사로 전모 드러나

무주택 서민을 등친 주택조합 사기 피해액이 경찰 수사보다 훨씬 거액이었음이 검찰 보완 수사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70대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인 50대 B씨는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2016~2019년 무주택 서민 477명으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금했다. 당시 두 사람은 “토지 확보율이 60~80%”라고 했으나 실제 확보율은 30%도 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그들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과 조합자금이 토지매입 비용이 아니라 각종 용역비용으로 지급되며 방만하게 운영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2020년 7월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합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한 데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외부 요인도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240억 원 중 160억 원에 대해서만 사기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서울서부지검)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피의자들의 여죄 규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자금 집행 담당 신탁사 압수수색, 자금추적,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81억 원의 추가 사기액을 밝혀냈다. 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조합과 무관한 비용을 사업비 명목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조합자금을 집행해 조합에 23억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것(배임 혐의)과 조합자금 42억 원을 횡령해 지인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사용한 것(횡령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두 사람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A씨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550만 원, B씨에겐 징역 30년과 벌금 62억여 원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배상금 5,000만 원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밝히지 못한 대규모 피해액을 검찰이 밝혀낸 사건이었다. 피해자들이 검찰 수사팀에게 100여통의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끌어낸 사건이기도 했다.

●
●
●
< > ↺ 🔍

⋮

[1-13] [240억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하여 사실은 토지확보율이 30% 미만임에도 '토지확보율이 60~80%'이라고 속여 조합원 477명으로부터 240억 원을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에서 경찰이 일부 무혐의 송치했으나, 검찰이 자금 흐름을 전면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 2명 직접 구속, 기소(서울서부)

검찰의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81억 원의 추가 사기 피해와 수십억 원의 횡령·배임 범죄까지 낱알이 밝혀내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했습니다.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1. 12. 8. KBS 「무주택 서민' 돈 240억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 기소」등 보도

3년간 방치된 체육관 아동 사지마비 사건,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가 인과관계 규명



체육관에서 유도·주짓수 훈련을 하던 초등학생이 사지마비와 지적장애를 겪게 된 것이 체육관 측의 관리 감독 소홀에 의한 것임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3년 만에 밝혀졌다.

초등학생인 A군은 2022년 4월 체육관에서 중학생 관원 등과 함께 엎어치기 낙법을 연습하던 도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와 외상성 뇌부종으로 인한 인지능력(약 5세 수준)의 저하가 발생했다. A군이 장기간 의식을 잃었고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사고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없어 체육관장인 B씨(31)의 안전조치 미비와 관리책임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다. 이로 인해 병마를 짊어진 A군과 그 가족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두 차례의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A군의 부상과 B씨 책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가 이끄는 검찰 수사진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군의 치료기록과 수술기록을 세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 법의학팀의 자문을 받아 체육관 해당 바닥에 이중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과 A군 부상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이중매트만 설치돼 있어도 사지마비와 지적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뇌에 충격이 가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한 것이다.



검찰은 A군 가족으로부터 당시 체육관 운영방식과 훈련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B관장을 재소환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또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 매트 상태, 훈련 방식, 지도 감독 기준 점검을 통해 B관장의 주의의무 위반도 구체적으로 찾아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5년 5월 B관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유사한 아동 체육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육관 측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학수사의 선례가 확보되고 3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병마를 짊어져야 했던 피해자 A군 가족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된 사건이었다.



이신걸리세요

저는 영아 입니다.

아직시작부터 경향하고 받았던 아이가 조중학교 5학년 봄.

유도관찰과의 대면 중 큰 사고를 당해 감과뇌의 사고로

조중적인 장이까지 입게 되었던 그날은 저의 가족들에게

이자로 갈 수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입니다.

그 해를 거쳐 아홉 만사한 병상에 누워 의식 없이 자였고

겨우겨우 한달이 지나서야 의식을 찾았지만 사고 후유증의 기억을

아예 잊은 채 힘들고 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대면 놀음과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건이 떠나

중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증거인 CCTV 또한 찾아

볼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

부터 겪어왔던 저의 활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대면 지켜가습니다. 검사결과에 이번 사고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 검사결과 변칙적 가혹위원 및 정황 불충의 의문

정확하게 반영하여 학생을 받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돌을 때

것들은 죄악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슬피

안고 슬픔이었습니다. 검사결과만 단 한순간도 이미 어렸을 때

가볍게 여기고 있던 저의 죄와 죄를 하수도 하수도 할지 모르시며

반드시 고백이 밝혀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을 감당하

고있습니다. 주신 끝에 마침내 사건이 이렇게 사고를 입힌 과정

발각 기피에 주신것을 저에게 주신것은 정의를 신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되찾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서는

사건의 확대항과 이미 어렸을 때의 알려질 수 있도록

직접 여러 가지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주된 역할을 통해 공론화 되도록

신중한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저와도 문해력 기사와 영상들을 접했을

때 많이 불행이나 그 덕분에 저와 가족과 이미 걸려온 사안이

누르나 유독의 등에 여러번 소개 되었고 많은 불운과 과실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노력에 힘써주면 우리 이미

영웅입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은 세상에 제대로 전하기까지 몇몇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정리정에서도 검사결과에 저와 가족의 입장에

귀 기울여주시고, 어떤 정황도 상황을 세심하게 반영해 주셔서

별안하고 힘들었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검사결과에

어떤 실수와 부족한 관점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유년과

죄를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저와 가족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

그런 저의 고충을 이해하지 않는 무관한 마음을 갖는 다 못한

할 수 없는 만큼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이와 같은 사건의 어둠이 없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동에

귀 기울여주시고 검사결과에 대한 사실로만 꼭 지켜주세요.

이미 어렸을 때 한번 더 사정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 주신 노력과 태생 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 드립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20일

박지



[1-14] [체육관 사지마비 아동 상해 사건]



체육관에서 훈련 중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지적장애를 입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사건이 수차례 보완수사요구에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고 기소중지된 사건에서, 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가 사건을 재기한 후 의무기록 분석, 법의학자문, 피의자(체육관 관장) 조사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기소(대구서부)

"아이의 기억이 없다고 진실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관에서 낙법을 배우던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와 5세 수준의 지적장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3년간 방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치료기록과 법의학자문을 총동원해 '이중매트 미설치' 등 명백한 과실이 뇌 충격을 유발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3년 만에 체육관 관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 25.5.15.머니투데이 「유도학원 간 10살 아들 '사지마비'...맨바닥에 엎어치기한 관장 재판행」 등 보도



피해아동 어머니의 감사편지 (발췌)

“초등학교 5학년 봄, 건강하고 밝았던 아이가 유도관장과의 대련 중 큰 사고를 당해 치명적인 장애까지 입게 되었던 그 날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입니다.”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cctv 또한 찾아 볼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 억울함을 풀어 주고 싶었지만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매일 지쳐갔습니다.”

“검사님께서 이번 수사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 검사님과 법의학 자문위원 및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섬세하게 반영하여 책임을 밝혀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검사님께서... 자료 하나 진술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을 꼼꼼히 살펴봐 주신 끝에 마침내 3년만에... 불구속 기소해 주신점은 저희에게 무너졌던 정의와 신뢰, 그리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검사님께서 저희 가족의 입장에 귀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절차와 상황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서 불안하고 힘들었던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저희 가족에게 검사님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저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 억울함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주신 노고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 피해 아동 부모 올림

사망한 피해자의 일기로 추악한 성범죄 입증한 검찰 보완수사



17년간 친삼촌처럼 따르던 아버지 후배에게 성폭행 당한 2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경찰수사가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자 검찰이 나서 피의자가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삼촌’으로 부르던 50대 B씨가 운전연습을 시켜준다고 해서 따라나섰다가 늦은 밤 산길 도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이후에도 자신의 사무실,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그 직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A씨 집에 놀러왔고 이를 본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A씨 부모는 B씨를 돌려보내고 딸을 진정시키던 중 B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 A씨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직접적 진술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과거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 받은 기록이 있다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강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없이 2022년 6월 단순 강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찰(대전지검 논산지청)은 단순 강간으로만 보기 힘들다며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해 8월 피해자 A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했고 사건은 종결 위험에 처했다.



결국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먼저 피해자 A씨의 의무기록을 조사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피해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지능력이 4살 수준으로 퇴행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가장 심각한 형태인 ‘해리 증상’까지 보여 수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던 A씨는 마트에서 우연히 피의자 B씨를 마주친 후 다시 증세가 악화돼 두 달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검찰은 유족으로부터 A씨가 직접 피해 상황을 기록한 일기를 입수한 뒤 필적감정을 통해 본인 필적임을 확인했다. 또 A씨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연락 내역, 위치 정보,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복원했다.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90개 파일)도 면밀히 분석해 피의자 B씨가 운전연습을 빌미로 A씨를 유인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과 A씨의 거부 의사에도 B씨가 성추행한 추가범죄 영상도 찾아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4년 6월 B씨를 단순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 2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B씨의 추악한 범죄로 A씨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는 점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A씨 아버지는 사고로 한쪽 시력을 상실한 장애인이었다고, A씨 어머니 역시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두 사람에게 대한 지속적 심리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비 · 생계비 · 난방비 등의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세심한 피해자 구제활동까지 병행했다.

●
●
●
< > ↺ 🔍

↗
☰

[1-15] [피해자 사망 후 다이어리 필적감정 사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하여 피해진술 없는 성폭행 사건을 송치받아, 다이어리 필적감정,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 인지 후 직접 구속기소(논산지청)

성폭력 피해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4살 지능으로 퇴행시킬 만큼 끔찍한 '상해'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져도, 그가 남긴 일기장과 디지털 기록, 블랙박스 영상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 **24. 10. 6. 중앙일보** 「아빠 후배의 성폭행, 그 뒤 '4세 지능' 갖게 된 20대女 죽음」 등 보도



피해자 부모의 감사편지 (발췌)

[] 감사님께 드립니다.
 감사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낸 피해자 [] 아버지 [] 어머니
 우리 노부부는 무슨 말로도 보답할수 없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님 무슨 말을 많지않게
 불려 너무나 많은 사건들 감사님 피해자가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가해자 []를 구속수사
 하기 까지는 수많은 수사기록 반복하여 살피
 보고 또 살피 살펴 봤을거 감히 짐작도
 다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님은 피해자가족의
 사연들 듣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같이 듣고
 피해자 부모님을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 피해자
 부모는 감사님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
 감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을
 위해서 그수가 가족처럼 대할수 있으세요
 함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님 우리딸이 이세상에 없지만 하늘
 나라에서 감사님의 고생하고 계시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가해자 [] 우리딸의
 한을 감사님께서 꼭 풀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딸이 하늘나라에서는 범죄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감사님 끝까지 노력해주세요
 감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대행하신
 감사님 그 은혜를 그무엇으로 다할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해자 부모
 현재는 고맙다는 말만 고맙고 고맙다는
 말을 할수 밖에 없네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고싶은 말은 천년만 해도 다 못할
 여기에서 편지를 놓습니다
 감사님 끝까지
 2024년 6월 27일 씬 드림

귀한 외동딸을 잃은 피해자 부모는,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끈질기게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딸 0이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이 세상을 2023년 8월 19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풀려났다고 피해자 부모를 놀리는 등 법대로 하라는 등...
 ‘내가 죽었냐’ 하는 가해자 000를 감사님의 끈질긴 수사와 노력 끝에...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님이 아니었다면 너무나도 큰고통과 실망을 하였을겁니다”

“우리 노부부는 무슨 말로도 보답할수 없는... 정말 감사합니다 ... 피해자 가족들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가해자를 구속... 하기 까지는 수많은 수사기록 반복하여
 살피 보고 또 살피 봤을거 감히 짐작도 다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님 우리딸이 이세상에 없지만 하늘 나라에서 감사님의 고생하고 계시는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피해자 우리딸의 한을 감사님께서 꼭 풀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피해자 부모 드림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난 지적장애인 청부살인 교사범의 교묘한 범행 수법



지적장애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해 재산분쟁의 대상에 대한 청부살인을 저지르게 한 40대 모텔사장의 마수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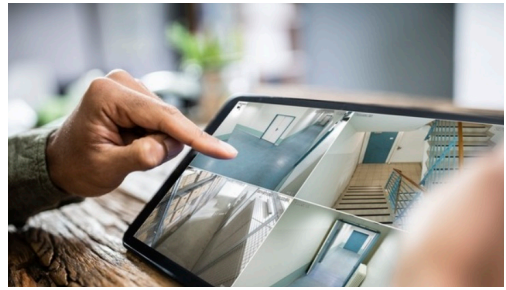
2023년 11월 12일 서울의 한 건물 옥상에서 옆 모텔의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인 A씨가 해당 건물의 건물주인 80대 남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2급 지적장애인인 A씨는 이후 강릉행 KTX를 타고 도주했으나 도주 4시간 만에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일하던 모텔 사장인 40대 남성 C씨를 참고인 조사 하다가 C씨가 모텔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엔 B씨가 자신을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C씨가 살인을 교사해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11월 15일 A씨에 대해선 살인 혐의, C씨에 대해선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C씨의 구속영장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찰(서울남부지검)은 구체적 동기나 범행수법에 대한 증거를 확인보하고자 경찰과 함께 추가적 증거 확보를 위한 보완수사에 나섰다. 주변 탐문수사로 건물주 B씨와 모텔사장 C씨가 주차장임대차 문제와 지역 재개발 문제로 분쟁이 있었으며 이것이 살



해 교사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C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임대차 분쟁 관련 메시지와 살인 교사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C씨가 어떻게 살인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장애인인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는지도 밝혀냈다.

C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A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이자 형”이라는 말로 가스라이팅하는 한편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둘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로 하여금 범행 5개월 전부터 피해자 B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범행도구인 칼, 복면을 구입하게 했고, 2개월 전에는 칼로 사람을 찌르는 훈련까지 시켰으며, 사흘 전에는 자신이 살해 장소의 CCTV 방향을 돌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C씨와 A씨의 특수 관계 및 A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검사도 의뢰했다. A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가 이뤄졌고, 교사범인 C씨의 성향 및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임상심리평가가 실시됐다.

C씨가 3년 4개월 동안 A씨에게 임금을 한 푼도 안주면서 주차관리 일을 시켜 약 5,4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했고 오히려 모텔 방세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의 금품을 편취한 여죄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12월 13일 C씨를 구속한데 이어 2024년 1월 11일 살인교사,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준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유족은 “50년을 넘게 부부로 지낸 남편이 살해당한 후 그 충격으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남편을 위해 고생하는 검사들의 수고를 같이 느끼고자 직접 핸드폰 가방과 수세미를 짜고 목주를 만들었으니 꼭 받아달라”는 취지의 감사 편지와 함께 유족이 직접 뜨개질하여 만든 손수세미 등을 검사와 수사관에게 보내왔음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C씨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2025년 1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B씨를 직접 살해한 A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범죄에 이용당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혀내 유사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16] [지적장애인 사주 살인 사건]



지적장애인을 교사하여 자신과 재산 분쟁관계에 있는 건물주를 살해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교사자와 교사자의 특수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명확히 밝혀, 최초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주범을 구속기소(서울남부)

지적 또는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서적 학대(가스라이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 '장애' 자체를 범행의 도구로 삼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이 교묘한 범죄는, 검찰이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심리적 지배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 25. 11. 12. 서울경제 「“그냥 다 없애, 목격자도”...수백억 자산가 살인사건, 범인은 ‘가스라이팅’ 당했다?」 등 보도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성폭력'임을 공판 단계에서 밝혀낸 검찰 보완수사



'묻지 마 폭행'으로 알려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노린 범죄였다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20대 여성 A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열린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오피스텔로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30대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B씨는 그런 A씨를 길거리부터 따라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무자비하게 밟아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어깨에 들쳐 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했다.

오피스텔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진탕과 외상성 뇌출혈 및 영구 장애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 부상을 입었다. 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 2~3일간의 기억을 상실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모습을 추적해 사흘 뒤 B씨를 긴급체포하고 6월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 A씨 청바지 바깥쪽 엉덩이 부분에서만 피고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돼 성폭력 혐의 입증이 어려웠기에 검찰(부산지검)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B씨의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B씨의 성폭력 범행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첫째 A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의류 4점(청바지, 팬티, 상의, 가디건)의 총 121개 부위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DNA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청바지 안쪽의 허리, 허벅지, 종아리 부분, 청바지 바깥쪽 허리 부분, 가디건 1곳 등 총 5곳에서 B씨의 Y염색체 DNA가 발견됐다. 이들 부위는 B씨가 A씨의 바지를 벗겨 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검찰은 또 성폭행 혐의 관련 3가지 증언을 확보했다.

“A씨의 청바지 버클과 지퍼가 열려 골반 부위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속옷은 보이지 않았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바지가 열려 양쪽 끝단이 ‘세모’ 형태로 접힌 상태였다”는 경찰관의 진술,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때 다리 한쪽에 속옷이 걸쳐진 것을 발견하였다”는 A씨 언니의 증언이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B씨가 성폭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타격을 통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에서 그녀의 옷을 벗기다가 발각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냈다. 그리고 기존의 살인미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두



고, 강간살인미수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과 함께 징역 35년 및 위치 추적전자장치부착 등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B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때 불충분했던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정밀 재감정으로 밝혀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보완수사라고 할 수 있겠다.

●
●
●
< > ↺ 🔍

[1-17]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되고 성범죄 의도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대검에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고 엄벌에 처함 (부산고검)

이 사건은 1심에서 '살인미수'만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상실과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DNA가 나왔다는 1차 감정 결과로는 성폭행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의류 4점의 121개 부위를 정밀 재감정하였고, 범인의 DNA가 '청바지 안쪽' 허리과 허벅지 등 5곳에서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기소 전은 물론 공판 계속 중에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3. 5. 31. 경향신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간 시도 부인했지만, DNA 딱 나왔다' 등 보도



국민에게 개혁은 또 다른 피해다

‘평범한 강력범죄 피해자가 바라본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를 기사에서 처음 접했을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갈 수많은 정책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제도에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서 걱정만 하는 사회는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신상공개 제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 거론되던 ‘신상공개 제도’는 제가 피해를 겪은 2022년까지도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자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사적 복수’라는 비판이 있었고, 가해자의 가족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실상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서러웠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걱정만 반복하는 사회가 허무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개혁은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바꿔보는 시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개혁이라고 느낄 만한 지점은 없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문제점만을 극단적으로 부각한 채, 무난하게 잘 처리된 수많은 사건은 묵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경찰 수사가 미흡했던 상황을 겪었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성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법 체계는 결국 사람

이 움직이는 구조이기에 착오와 실수는 언제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존재하고, 각자의 역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관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회가 더 공평해지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검찰의 수사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기관 자체를 없앤다는 결정은 피해자로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변화는 또 다른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피해자들에게 변화는 '두려움'입니다. 변화 속에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되는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정 법안은 2023년 말에 통과됐고, 2025년 7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공백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피해자들의 일상에서, 이제는 국가마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한 제도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어려운데, 지금의 검찰 개혁은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낳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피해자는 "검찰이 없어지기 전에 사건을 끝내야 한다"라며 한시가 급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은 여태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찰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범죄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중심에 놓인 적이 없습니다. 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일개의 시민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평범한 제게 이 개혁은 그저 자리싸움으로만 보입니다.

이 논쟁에서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면, 경찰·검찰·법원·정부는 사법 체계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검찰 개혁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핵심 당사자인 범죄피해자를 제외하고 진행되는 '검찰 개혁'은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기를 꺼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정말 말하는 피해자가 없는 것인지,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검찰 개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피해자'입니다. 또한 검찰이라는 기관이 문제점만으로 가득한 집단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그런 집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없앤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단에서도 반드시 그런 문제는 생길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

보이스피싱 처벌의 패러다임을 바꾼 검찰의 보완수사



대표적 서민생활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단순 사기죄를 적용하던 관행을 끊고 범죄단 체조직·활동죄를 적용하게 된 것도 검찰 보완수사였다.

40대 총책 A씨와 관리책임을 맡은 8명의 주범들이 2012년 보이싱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설치한 뒤 100명 가까운 조직원을 모집해 5개 팀으로 역할 분담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였다.

중국 내 콜센터 1팀은 전화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될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2팀과 3팀 그리고 국내 콜센터 팀은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위 편취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 마지막으로 현금 인출팀은 대출사기팀에 속아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국내에서 위 체크카드로 인출해 현금화했다.



경찰은 2014년 3월 제보를 받고 약 1년 동안 끈질기게 관련 계좌, 휴대폰, 출입국 내역 등을 추적하고 분석해 그들의 조직구성과 역할 분담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3월~6월 국내에 들어와 있던 국내총책 등 3명의 주범과 조직원 28명을 검거한 뒤 관행대로 단순 사기죄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2013년 1월~2013년 9월 30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302개를 편취했다. 또 그 카드를 이용해 214명으로부터 약 13억 원을 편취한 뒤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이 아닌 것처럼 자금 세탁까지 했다. 이는 피해자가 확인돼 범죄사실로 특정된 금액으로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에 2012년 1월 이후 입금된 총액은 150억 원에 이르렀다.

검찰(대구지검)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엄중한 처벌 효과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단순 사기범행을 적용할 경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없는 반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이 가능해 피해액 반환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를 위한 보완수사에 나서 4가지를 추가로 밝혀내 이들이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범죄 ‘조직’임을 규명했다. △100명 가까운 조직원과 그들 각자의 세분화된 역할 분담 △조직에 따른 위계질서 △조직원의 여권 압수와 감시로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이탈자에 대한 응징 사례 등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내부질서 유지 행위 △장기간 범행을 위해 사무실, 집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이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재추적해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과정도 밝혀냈다. 사기죄를 적용하면 피해금원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이 아닌 것처럼 세탁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었지만 범



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면 자금세탁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총책 A씨와 구속된 주범 3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와 자금세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구조적 대응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뿔뿔이 도피한 총책 A씨와 주범 6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통해 국제형사법공조를 요청해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검거에 나서으로써 해외 도피 사범 추적의 선례를 만들었다.

[1-18] [100명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사건]

경찰이 100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단순 사기 공범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조직의 지휘통솔체계를 입증하고 국내 최초로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용하여, 자금세탁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기소(대구지검)

범죄단체조직죄는 계속적 결합체와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을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절반의 처벌에 불과했습니다. 범인들이 차명계좌로 빼돌린 막대한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자금세탁 행위까지 처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의 패러다임을 바꿔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액 수입 등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15. 6. 30. 로이슈 '대구지검, 보이스피싱 조직 첫 폭력조직 동일 범죄단체로 엄단' 등 보도

2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정의는 단지 범죄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에 놓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구도 부당함에 놓이지 않도록 진실을 바로 세웁니다.



1 공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 사건 76P

2 '한우 허위제보' 5성급 호텔 무고 사건 80P

3 4천만 원 합의금 노린 꽃땀 무고 사건 82P

4 비접촉 자전거사고 운전자 무죄규명 사건 84P

5 가해자로 몰린 집단폭행 피해자 사건 86P

6 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규명 사건 88P

7 위법수사 마약사범 석방 사건 90P

8 무속인 가스라이팅 아동학대 사건 92P

9 '주저흔'이 밝혀낸 살인 누명 사건 94P

10 아내 사기 공범으로 몰린 남편 사건 96P

11 탈북민 잠입·탈출 무죄규명 사건 100P

12 허위신고 외국인 스토킹 사건 102P



범죄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 억울한 누명 벗겨준 검찰의 보완수사



가혹행위로 은행에서 억지로 대출받은 돈을 뜯기고 범죄에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갈방조 공범으로 몰렸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지적장애 2등급(IQ 43)인 2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2022년 11월~2023년 3월 3차례나 물고문을 당하고 은행에서 자신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갈취 당했다. B씨는 또 A씨가 자신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여 어머니 C씨로부터 360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A씨 후배인 D씨를 유인, 협박해 295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B씨를 단순 공갈 혐의를 적용하면서 A씨에 대해서도 B씨의 D씨에 대한 범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공갈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A씨가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점과 3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죄질이 나쁜데다 증거가 남지 않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A씨에게 연락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A씨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급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다음과 같은 보완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피해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해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위험에 대한 예측·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범죄에 가담할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갈방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B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A를 사전 면담토록 한 후 변호인과 모친 동석 하에 본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해자 동의 하에 대출을 진행했고,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으나 장난에 불과했다”는 B씨의 변명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또 “친구와 함께 서울에 오면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겠다”는 B씨의 말만 믿고 A씨가 후배인 D씨를 데려왔음이 확인됐다. B씨는 또 A의 모친인 C씨를 상대로 “채무를 대신 갚아야만 보내주겠다”며 A씨에 대한 사실상의 인질극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혐의를 단순공갈이 아니라 특수공갈로 변경하고 2025년 7월 15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경찰의 부실수사로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을 검찰의 과학적 보완수사가 구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1] [공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 사건]



지적장애인이 가혹행위로 돈을 갈취당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공갈방조 공범으로 송치한 사안에서, 검찰이 임상심리평가 등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의사능력 부재를 확인, 혐의없음 처분하고 단순공갈로 송치되었던 피의자의 죄명을 특수공갈로 변경 의율, 직구속(서울중앙)

사회적 약자는 범죄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조차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고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혔습니다.

▶ 25. 7. 24. 중앙일보 「범죄 가해자로 송치된 지적장애인...물고문·협박 피해자였다」 등 보도



공범으로 몰린 지적장애인 어머니의 편지

안녕하세요, 검사님.

저는 2023년부터 제 아이의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불안과 절망이라는 터널 속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눈물로 버티며
견뎌온 못한 이듬의 엄마입니다.

그 오랜 묵묵히 눈물의 시간을 검사님께서 보여주신 강건함과 성실하고
진심 어린 사건처리에 대해 이제는 꼭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사건 초기에는 아이의 상황과 저희 가족의 억울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검사님께서 단순히 기록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깊이 이해하고 살피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엄마된 입장에서는
'장애'라는 낙인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잡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고,
그럼에도 상처받지 않게 국가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셨을 뿐 아니라,
유관 기관과 ZOOM 화상회의까지 주도하셔서 끝까지 돕고자 하신
검사님의 진심어린 모습에 깊은 감사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처럼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개혁 요구가 팽배한 시기에도,
검사님께서는 묵묵히 본연의 소임을 다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과 절박한 사정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는 '검사는 다 나쁘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오해와 왜곡된 편견인지 느꼈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롭고 따뜻한 검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그 고마운 마음을 널리 알리고, 검찰 조직 안에 이처럼 훌륭한 검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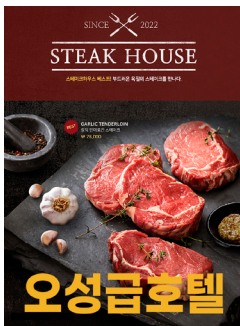
검사님의 건강과 앞날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7월 여름 감사함을 전하고픈 아이의 엄마 드림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양심 품고 5성급 호텔 무고해 오보 나간 것 밝혀낸 검찰수사



‘5성급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다’는 뉴스 보도의 제보자가 양심이 아니라 양심을 품고 무고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다.

A호텔 레스토랑 조리사 출신인 B씨는 2024년 10월 방송국 기자에게 A호텔 레스토랑에서 국내산 소고기만 판다고 하면서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 판다고 제보해 관련 뉴스 보도가 나가도록 했다. 해당 보도로 A호텔은 명성 타격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특사경의 수사를 받고, 8월 국민신문고 고발로부터 3달여 만인 11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몰렸다.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대구지검)은 뉴스 보도로 A호텔이 여론의 못매를 맞고는 있지만 원산지표시법 위반이라고 하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2025년 1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B씨가 제보 직전 호텔에서 사직권고됐다는 점에서 양심을 품고 무고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 통신조화를 통해 결근기간 중 새벽에 2회에 걸쳐 호텔 레스토랑 주방에 침입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찾아냈다. 이어 현장 검증을 통해 조리 과정 및 원재료 보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진술 내용을 반복한 통화녹음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그해 2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가 충분하고 도주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그 다음달인 3월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증거를 추가 확보해 B씨를 바로 체포



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그와 함께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A호텔 관계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언론보도로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은 특사경의 부실수사로 양심적 고발로 포장될 뻔했던 사건이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양심에 의한 허위제보와 증거조작의 산물임이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5성급 호텔이 뒤집어쓸 뻔한 누명도 벗겨졌다.

●
●
●
< > ↺ 🔍

↗
☰

[2-2] ['한우 허위제보' 5성급 호텔 무고 사건]

해고된 조리사가 "호텔이 수입산을 한우로 속인다"고 허위 제보하여 특사경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현장 확인, 포렌식 등 적극적 보완수사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고, 피의자를 무고 등 혐의로 직접 구속 기소(대구지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환경, 의료, 식품 등 특정 전문 분야의 행정 공무원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이들은 일반 경찰과 달리 법률로 정해진 한정된 직무 범위 내에서만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모든 수사 활동은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 25. 7. 3. **조선일보** 「"원산지 속여 판다"...허위제보한 5성급 호텔 조리사 징역형」 등 보도

“성폭행 당했다”며 4천만 원 뜯어낸 꽃뱀 일당, 검찰에 꼬리 밟혀

4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뒤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경찰을 농락한 여성 뒤에 꽃뱀조직이 숨어 있음을 검찰이 밝혀냈다.

40대 남성인 A씨는 2019년 9월 여성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직후 현장을 덮친 C씨와 D씨로부터 “강간 자인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는 강압적 협박을 받고 각서를 써줬다.

C씨와 D씨의 사주를 받은 B씨는 7개월 뒤인 2020년 4월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과 더불어 A씨가 작성한 각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는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허위 고소였다. 결국 A씨 어머니가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자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에 따라 경찰은 2021년 5월 A씨 강간협박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가 미심쩍은 내용을 발견했다.

고소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 4천만 원을 C씨가 2,750만 원, D씨가 1,000만 원, B씨가 200만 원, E씨가 50만 원씩 나눠가졌다는 대목이었다.

피해여성인 B씨보다 C씨와 D씨가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C씨와 D씨가 B씨를 배후조종했다는 단서였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해 B, C, D, E 네 사람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네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진술 내용을 미리 짜 맞춘 정황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먼저 중범들을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C씨와 D씨가 배후조종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두 사람을 주범으로 구속한 뒤 병합 기소했다.

허위로 성폭행 신고 후 합의로 무마된 것처럼 속여 넘어갈 뻔한 사건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꽃뱀조직의 허위 고소였다는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명백히 밝혀낸 사건이었다.

[2-3] [4천만 원 합의금 노린 꽃뱀 무고 사건]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하여 허위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무고 사건을 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로 강간 혐의가 허위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범행을 주도한 공범 2명을 인지·직구속(서울북부)

드물지만 돈을 노리고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 사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급한 예단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 **22. 2. 18. 중앙일보** 「합의금 뜯으려 술 먹인 뒤 '강간' 고소...檢에 딱걸린 무고범 4명」 등 보도

자전거 피해갔는데 살인누명 쓸 뻔한 트럭 운전자 구한 검찰수사

갯길에서 휘청거리는 자전거 옆을 지나간 트럭 운전기사가 자전거 운전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를 뒤집어 쓸 뻔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억울한 혐의를 벗었다.

50대 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21년 2월 화물차 운전 중 우측 갯길에서 휘청거리는 자전거를 발견했다. 당시 71세였던 여성 B씨가 몰던 자전거였다. A씨의 화물차가 자전거 옆을 지나간 직후 자전거가 뒤집히면서 B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6월 A씨의 화물차가 B씨의 자전거를 건드렸거나 충격을 가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도 없이 “A씨의 차량이 B씨의 전도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찰(울산지점)은 A씨 차량과 B씨 사고 및 사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않은 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흐릿한 화면의 도로교통공단 CCTV 동영상의 화질 개선 및 부분 확대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의뢰했다. 그 결과, A씨 차량이 자전거에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고 발생 전부터 B씨 자전거가 이미 휘청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재분석을 의뢰했다. 재분석 결과, 피의 차량이 추월하기 전 자전거가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으며 추월 뒤 자전거가 원래 넘어지던 각도 그대로 전도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피의 차량이 직간접적으로 자전거 전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모두 낮다는 것.



그럼에도 B씨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정을 고려해 검찰은 시민의 눈높이로 판단 받기 위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했다. 10명의 검찰시민위원 중 9 명이 혐의 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그에 따라 울산지검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판단의 오류를 바로 잡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상 분석 기술과 치밀한 재감정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뻔한 운전자의 억울함을 밝히고, 실체적 진실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선 재수사 결과였다.

●
●
●
< > ↺ 🔍

↗
☰



[2-4] [비접촉 자전거사고 운전자 무죄규명 사건]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옆을 지난 직후 넘어져 사망하자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서, 검사가 CCTV 영상 개선, 교통사고 재분석 등 과학적 보완수사를 통해 차량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내고 운전자를 혐의없음 처분(울산지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주위를 지나던 운전자는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의 불명확한 정황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흐릿한 CCTV의 과학적 영상 분석과 교통사고 재분석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운전자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예단으로 진행된 수사는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수 있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검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경찰수사를 바로잡은 수사

패싸움에 휘말렸지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18세 남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혔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억울한 범죄혐의를 벗었다.

재건축구역 용역직원으로 일하는 A씨와 동료 3명은 2021년 6월 용역사무실 앞에서 취객 3명과 시비가 붙었다. 양측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누구도 때리지 않았지만 경찰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

A씨는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호소했으나 경찰은 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그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2021년 10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화질이 매우 낮아 사람의 형상이나 움직임 식별도 쉽지 않은 수준이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서울북부지검)은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A씨를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 있다 보고 자체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대검찰청 멀티미디어복원실에 영상 화질 개선 및 확대를 의뢰했다. 멀티미디어복원실은 해당 영상을 3종류의 밝기 및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해 영상 속에서 주먹으로 상대를 폭행

한 사람은 상의를 탈의한 사람이며, 흰옷을 입고 있던 피의자 A씨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구속된 공범 2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를 통해 개선된 영상물로 확인된 내용과 그들의 진술을 교차 비교했다. 그 결과, 피의자 A씨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최종 확정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명확한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뻔한 사건을 첨단 영상 분석 기술로 바로 잡음으로써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검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
●
●
< > ↺ 🔍

↗
☰

[2-5] [가해자로 몰린 집단폭행 피해자 사건]

집단 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에 있던 한 용역직원을 가해자로 오인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화질 낮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대검에 감정을 의뢰,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해당 직원은 가해자가 아닌 일방적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혐의없음 처분(서울북부)

본인은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호소하더라도, 일행이 싸움에 말려들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인해 가해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과학적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21. 10. 7. 경향신문 「경찰, 성북구 재개발지역서 '집단 패싸움' 후 도주한 용역 등 3명 구속」 등 보도

미성년 의붓딸들 성폭행범 될 뻔한 가장을 구한 검찰

초등학생 의붓딸들의 증언만 믿고 의붓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단정한
경찰 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뒤집혔다.



40대 남성 A씨는 초등학생이던 두 의붓딸 B양(당시 13세)과 C양(당시 10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두 딸의 진술이 일관되며 B양의 티셔츠 및 속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을 토대로 그를 성폭력처벌법 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두 의붓딸의 진술에 상충되는 대목이 있었다. 또 B양의 속옷에서 A씨의 DNA 외에 제3자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 수사에서 간과됐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된 진술과 반증 증거를 간과하는 것은 A씨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진범의 범행이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우선 A씨의 구속을 바로 취소하고 석방했고, 대검찰청에 두 딸의 진술 분석을 의뢰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소견을 받았다. B양 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된 것은 옷을 세탁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손길이 닿은 것일 가능성이 컸다.

이어 피해 아동 B양 대면 조사를 통해 의붓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C양과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끌어냈다. 또 실제 성추행은 A씨의 지인인 D씨(59)에게 당했다는 B양의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휴대전화 통신내역, 카드사용 내역 분석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D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



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B양의 속옷 안쪽의 DNA와 정액이 D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다. 또 D씨가 B양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이 있다는 것과 B양의 어머니에게 합의를 중용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 2023년 7월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재판을 통해 D씨는 대법원에서 2024년 6월 징역 5년형 및 취업제한·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 확정되었다.

아동들의 무고성 진술과 우연히 검출된 DNA를 증거 삼아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려 구속까지 되었던 40대 가장의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숨어있던 진범을 밝혀낸 사건이었다.

[2-6] [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규명 사건]



피해아동이 계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하여 계부가 성폭행범으로 몰려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 아동 속옷에서 제3자 DNA를 발견,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여 계부를 석방하고, 끈질긴 보완수사와 과학수사를 통해 진범을 특정, 직접 구속 (통영지청)

친족 간 성범죄 수사에서 '일관된 피해 진술'과 '피의자 DNA 검출'은 유력한 증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속옷에서 발견된 제3자의 DNA와 정액'이라는 명백한 반증을 간과한 채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검찰의 과학적 보완수사(DNA 재감정, 대검 진술분석)가 없었다면, 진범은 풀려나고 무고한 가정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뻔했습니다.

▶ **23. 8. 27. 조선일보** "[성추행 당했다" 초등생 말 믿고 구속했는데, 거짓말이었다] 등 보도

경찰 위법수사로 구속된 외국인 피의자 인권을 지켜낸 검찰수사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외국인 여성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권을 무시한 경찰 수사로 인한 것임이 검찰수사로 드러나 석방됐다.



태국 여성인 A씨(당시 22세)는 2021년 7월 남성에게 폭행당해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쳐 나온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데다 팔에 주사바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변검사를 통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 송치했다.

검찰(울산지검)에 송치된 A씨는 대면조사에서 마약투약 혐의를 자백하면서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기록에 휴대전화나 전자정보가 누락됐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아 A씨의 인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구속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경찰이 A씨 짐 가방을 사실상 압류한 상태에서 거부권 고지 없이 임의동행을 진행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보호조치라고 항변했으나 임의동행 직후 바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마약수사를 위한 조치임이 뚜렷했다. 심지어 경찰은 소변을 채취할 때도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생리 중이었기에 거부권을 고지 받았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A씨의 주거지 수색 및 휴대폰 압수에 대해서도 사후 영장이나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특히 경찰관이 사실상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이동 중 분실했고, A씨가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분실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렇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임의동행, 불법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 피해자 휴대전화 분실 등 위법성과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8월 피의자 A씨를 혐의 없음 처분으로 석방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경찰서에 2가지 시정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분실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피해 보상이었다.

●
●
●
< > ↺ 🔍

↗
☰

[2-7] [위법수사 마약사범 석방 사건]

경찰이 마약 투약 사범으로 구속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이 위법한 임의동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 수집증거를 배제, 피의자를 석방(울산지검)

마약 양성 반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수사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 능력을 잃게 되고, 이를 형사 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합니다. 거부권 고지 없는 임의동행,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바로잡혔습니다. 실제적 진실(마약 투약)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이 검찰의 존재이유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경우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최초 사례 만든 검찰



성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가 무속인 부부에게 19년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했기에 그 역시 범죄피해자라는 것을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 구속취소했다.

50대 여성인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4월 20대인 자신의 딸과 아들을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지지고,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을 무는가 하면 딸의 치료를 방치해 특수상해, 상해, 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수사에서 무속인 부부가 2004년부터 약 19년간 A씨 일가족 전체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금원을 갈취하고 성범죄를 사주했음이 밝혀졌다. 이를 지시한 무속인 부부도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9년간 심리적 지배로 자유의지가 박탈된 A씨에 대해 자녀를 폭행했다는 표면적 이유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23년 7월 3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A씨에 대한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A씨가 경계성 지적기능장애(지능지수 72)로 어린 시절 가정폭력 노출과 부모와 사별로 극심한 심리적 결핍을 겪어 무속인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무속인 부부의 강도 높은 폭력과 통제에도 수동적으로 순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경기남부청 범죄분석팀의 영상녹화조사 파일 분석 결과도 비슷했다. A씨와 두 자녀가 오랜 세월을 걸쳐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 무속인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돼 가족 간 폭력행사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는 것.

검찰은 우선적으로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뒤 여성긴급지원센터와 연계해 심터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도록 했다.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무속인 부부로부터



폭행, 감금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자녀들의 진술과 A씨 심리 상태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종합해 A씨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대신 무속인 부부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 특수상해 교사 혐의를 특수상해 간접정범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무속인 부부는 수원고법에서 징역 15년과 10년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를 적용해 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였다. 임상심리분석과 범죄분석이라는 과학적인 수사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 역시 피해자임을 입증한 동시에 가스라이팅으로 범죄를 사주한 측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2-8] [무속인 가스라이팅 아동학대 사건]



무속인의 가스라이팅에 지배 당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여 무속인 부부와 함께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대검 임상심리평가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무속인 부부로부터 장기간 심리적 지배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구속취소 및 '죄가안됨' 처분하고, 주범인 무속인 부부를 엄벌함(여주지청)

겉으로 드러난 가해자가 사실은 19년간 이어진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로 자유의지가 박탈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의자를 '강요된 행위'의 피해자로 구제하고, 대신 범행 도구로서 타인을 조종한 배후자를 '간접정범'으로 엄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뻔한 상황을 바로 잡았습니다.

▶ 24. 6. 26. 중앙일보 「돈 뺏고 학대」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2심도 중형」 등 보도

'주저흔'으로 한국어 서툰 외국인의 살인누명 벗겨준 검찰



이종사촌 사망 현장에 함께 있다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6세 남성 A씨는 2023년 1월 함께 살던 이종사촌형 B씨의 목을 과도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한국말

이 서툰 A씨는 경찰수사에서 B씨가 과도를 휘두르다 스스로 목을 찔렀고, 전치 6주의 자상을 입은 자신은 도망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상황을 근거로 A씨를 바로 구속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수원지검)은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숨진 B씨의 목에 주저흔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다. 먼저 혈흔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의 옷과 신체에서 B씨의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법의학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B씨 목에 난 상처는 '자해'에 의한 것이고 A씨에게 생긴 상처가 '타해'로 보인다는 결정적 감정결과를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A씨가 신뢰하는 통역 대동 하에 A씨를 재조사해 한국어가 서툰 그의 항변을 충분히 청취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한 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즉각 석방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보호지원팀과 연계해, B씨로부터 가격 당해 최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A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취했다.

한국어가 서툴러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쓸 뻔했던 외국인 피의자가 오히려 범죄 피해자였다는 것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밝혀냄으로써 인권의 보루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건이었다.

●
●
●
< > ↺ 🔍

↗
☰

[2-9] ['주저흔'이 밝혀낸 살인 누명 사건]

이종사촌 사망 현장에 함께 있던 외국인이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부검 결과의 '주저흔'에 주목, 법의학 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자해로 사망한 사실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구속취소 및 혐의없음 처분(수원지검)

이 사건은 언어 장벽과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검찰의 과학적이고 면밀한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호소를 청취하고, 사망자의 몸에 남은 '주저흔'과 법의학 자문 등 과학적으로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그가 살인범이 아닌 피해자임을 밝혀냈습니다.

▶ **23. 2. 8. 중앙일보** 「목 찢려 죽은 피범벅 현장서...우즈베크 청년 살인 혐의 벗겨준 檢」 등 보도

아내 사기극 공범으로 구속된 남편도 피해자였음을 밝혀낸 검찰

아내가 벌인 1억 원대 중고 명품 사기에 공범으로 몰려 구속된 남편 역시 아내의 사기극에 희생돼 수억 원을 뜯긴 피해자라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다.

30대 남성인 A씨는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유명브랜드제품 중고시장(리셀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던 B씨의 배우자. B씨는 2022년 5월~7월 19명으로부터 함께 1억1천만 원 상당의 유명브랜드중고제품을 택배로 받고선 돈을 지불하지 않아 지명 수배됐다. B씨는 이들 중고품을 대부분 되팔아 현금화한 뒤 잠적했다가 2022년 9월 체포된 뒤 남편 A씨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구속전 심문 절차에도 불출석해 부부 모두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울산지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포기하고 자신도 아내 B씨에게 속아서 결혼했고 이용만 당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실제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부부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시하고, 피해자들과 A씨의 어머니 등 주변인물 조사와 부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문과 대질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B씨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해운대 달맞이에 유명 커피체인점을 운영하는 거액의 상속녀라고 속이고 A씨와 결혼한 뒤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며 A씨 가족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또 임신하지도 않았으면서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속여 거액의 육아비를 챙기는 등 A씨 가족을 철저히 농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가 주범이라고 진술했다가, 감사의 추궁을 받자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A씨와 대질조사에서는 “오빠들이 감사와 경찰인데 상속 문제로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실제 양친 모두 생존한 무남독녀임이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의존한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고 2022년 10월 공범으로 구속된 A씨를 바로 석방하고 곧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B씨가 숨겨뒀던 피해품(샤넬백)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2-10] [아내 사기 공범으로 몰린 남편 사건]



아내가 별인 1억 원대 중고 명품 사기에 남편이 공범으로 몰려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남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내로부터 속아 수억원을 편취당한 사실까지 밝혀내 남편을 구속 취소 후 신속히 석방하고, 아내를 구속기소(울산지검)

‘주범’의 거짓 진술에 의존했던 결과 또 다른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기극에 공범으로 몰려 구속된 남편은, 검찰의 계좌추적, 포렌식, 대질조사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내에게 수억 원을 편취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을 교차 검증하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억울한 사람이 구속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 22. 12. 8. SBS뉴스 「명품 사기 공범' 구속된 남편...알고 보니 '사기 결혼' 피해자」 등 보도



공범으로 몰린 피해자의 편지

검사님.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 라고 합니다.
이번사건에 대해 선처 결정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직 저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더 조사해주시고 확인해주신 덕분에
제가 밖으로 나올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현실을 마주쳐보니... 정말 바보같았던것 같습니다.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아도될...큰일은 경험한것 같고.. 경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출소후 몇일동안은 여기저기 조사를 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또 언제
어디서 조사가 올지도 몰라 조금 무섭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것 같
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경매들어간 집을 해결하는것과. 하루라도 빨리 혐의가 벗겨지는것,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번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신 검사님. 수사관님 덕분에 자그마한 빛을
본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들도 진실하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억울한 일들이
풀릴것같다는 희망이 생긴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이번사건에 대해 노력해주신 검사님.
수사관님 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가겠단 말씀드리며 끝마치겠습니다.
글씨가 이쁘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드림-

검사님. 수사관님. 안녕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저 결정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직 저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았을게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역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조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덕분에 제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현장을 다져 봤니...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아도 될... 큰일을 경험한 것 같고..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소할 몇 달 동안은 여기에 조사한 덕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또 언제 어디서 조사할지도 몰라 조금 무섭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잠은 경이들에게 집을 해결하는 것과 하루라도 빨리 형제나 벗겨주는 것,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서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려 주신 검사님, 조사관님 덕분에 자고야 한 빛을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들도 건성하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억울한 일들이 풀릴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노력해 주신 검사님, 수사관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갈 것만 믿습니다. 글이 짧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드림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몰린 북한이탈주민 억울함 풀어준 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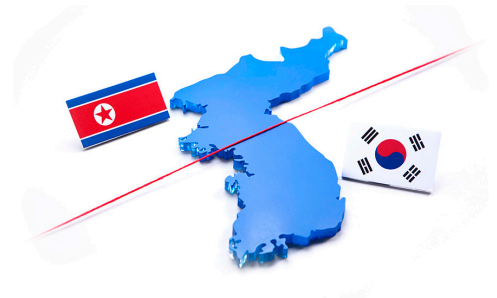
“몰래 북한에 다녀왔다”는 탈북민 발언을 불법 녹음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한 경찰 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혐의로 밝혀졌다.

49세 탈북여성인 A씨는 2024년 7월 경찰관과 면담 중 무심코 “2015년 8월~9월경 북한에 다녀왔다”는 말을 했다. 중국에서 만난 브로커의 안내로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사는 친모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전달하고 일주일간 머물다 중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때 A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였고, 이후 추가 진술을 거부한 A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2025년 8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2025년 9월 17일이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자백 녹음파일과 심리생리검사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녹음은 A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북한 방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방북 사실을 부인하고, 해당기간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다녀온 사실만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해 각종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았지만, 북한 브로커 접촉 내역 등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계좌 추적도 실시했지만 A씨가 북한 친모에게 1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초기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기간 환전 내역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지인인 탈북민 B씨에게 송금한 1,600만 원도 수개월 뒤 변제된 개인 금전거래로 확인됐다. B씨는 “해당 기간 A씨 및 그 가족과 함께 중국에 계속 같이 있었다”고 A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언까지 했다. 검찰은 B씨의 출입국 내역, 중국인 가족 여권, A씨의 중국 여행 비자 발급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만 발견했다.

결국 A씨가 북한에 거주하기 위해 밀입북했다거나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주요 근거로 삼은 녹음 파일과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적법한 수사 절차가 중요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한 사건이었다.

●
●
●
< > ↺ 🔍

[2-11] [탈북민 잠입·탈출 무죄규명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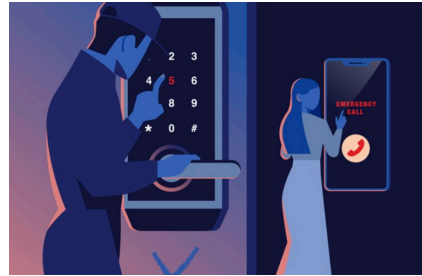
탈북민 출신 피의자가 북한에 들어가 친모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로 송치된 사안에서 계좌추적, 피의자 알리바이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군산지청)

검찰의 계좌추적과 알리바이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찾는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전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수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바로잡아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토킹 당했다"는 여성 말만 믿고 외국인 남성 구속한 경찰의 잘못 바로잡은 검찰

스토킹·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 말만 믿은 경찰에 억울하게 구속된 외국인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죄 방면됐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12월 31일 러시아 국적의 여성 B씨(당시 34세)의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경찰수사에서 A씨가 2021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해오다 이날 자신의 집으로 쳐들어와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대전지검 서산지청)은 B씨가 구속영장심사 직전 경찰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경찰이 서류제출만을 요청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그대로 송치했음을 발견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통역 과정의 정확성 문제와 허위 진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오해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총 3명의 통역인을 교차 활용해 B씨를 세 차례나 재조사하면서 이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분석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투었고, 이 상황을 오해한 B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B가 술김에 허위로 스토킹 및 폭행 피해를 진술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에 A씨를 바로 풀어주고 2022년 1월 A씨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한 B씨를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또 B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묵살하고 사건을 구속 송치한 경찰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자칫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벗기는 한편 무고 행위를 밝혀내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또 A씨가 구치소 내 통역 부재로 기본적인 음용수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정시설 내 외국인 피의자의 의사소통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외국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한 사건이었다.

[2-12] [허위신고 외국인 스토킹 사건]



여성이 스토킹·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여 남성이 억울하게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통역인 교차 활용 및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밝혀내, 억울하게 구속됐던 남성은 불기소 처분하고 허위 진술한 여성은 무고혐의로 기소(서산지청)

‘스토킹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 하나만 믿고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모순된 태도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통역 오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차 통역, 휴대폰 메시지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스토킹이 아닌 연인 간의 다툼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3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처음의 수사가 미진했더라도, 진실을 향한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공정과 정확성을 지키는 수사를 이어갑니다.

진실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의는 실현됩니다.



1 현직경찰 불법게임장 유착비리 사건 106P

2 경찰관 뇌물수수·수사기밀 유출 사건 108P

3 경찰관 허위자백 강요 사건 110P

4 경찰간부 사건무마 뇌물수수 사건 112P

5 동료 경찰관 수사무마 비리 사건 114P

6 경찰관 고소사건 7건 암장 사건 116P



7 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 종합세트 사건 118P

8 골프장 뇌물수수 음주측정 무마 사건 122P

9 사기범죄 공소시효 도과 사건 124P

10 경찰 구속기간 도과 송치 사건 126P

11 가평 계곡 살인 사건 128P

12 2,400억 코인 자금세탁 및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 132P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찰과 업자의 유착비리 줄줄이 캐낸 검찰수사

게임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파헤쳐 풍속업자와 경찰의 고질적 유착관계는 물론 동료 경찰관들을 무고한 범죄까지 줄줄이 밝혀냈다.

40대 A경위는 풍속업자 B씨(49세) 명의의 아파트(약 2억 원)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이를 처분해 전매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를 적발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2024년 7월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대구지검)은 풍속업자가 현직 경찰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의 계좌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A경위가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B씨로부터 2022년 7월~2024년 12월 약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났다. 아파트 명의이전은 이를 감추기 위한 위장거래였다.

A경위는 또 다른 풍속업자인 C씨(50세)에게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2019년 9월~2024년 7월 약 6,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도 드러났다. B씨 역시 A경위 외에도 또 다른 경찰관인 40대 D경위에게도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2019년 9월~2020년 3월 약 2,4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게 포착됐다. 이러한 뇌물은 현금, 차명계좌 사용, 투자수익금으로 포장돼 지급됐다.

이들의 유착관계는 돈거래에만 머물지 않았다. A경위와 D경위는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풍속업자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장기간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것도 드러났다.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수상스키와 골프를 즐겼으며 이들의 별장도 거리낌 없이 이



용했다. 추가적 범죄행각도 드러났다. C씨는 자신과 관계가 틀어진 B씨를 해코지하기 위해 경찰관 D경위와 공모해 2023년 4월 'B씨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며 D씨의 동료경찰관 2명을 뇌물 수수자로 지목해 무고했다. D경위는 이에 발맞춰 대구경찰청 간부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 제보를 했다.

검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종합해 2025년 5월 뇌물 수수 및 무고 혐의 등을 토대로 A경위와 D경위 및 풍속업자 C씨를 모두 구속기소하고 풍속업자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단순 명의신탁)로 끝날 뻔한 사건을 검찰이 집요하게 파고들어 경찰과 업자 간 고질적 유착 범죄를 낱알이 밝혀낸 사건이었다.

[3-1] [현직경찰 불법게임장 유착비리 사건]

경찰이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를 단순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송치한 사안에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한 결과 해당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업주와 유착,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또 다른 경찰관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약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 경찰관 2명과 뇌물공여자 1명을 구속기소 등(대구지검)

경찰이 단순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송치한 사건, 검찰이 파헤쳐보니 수억 원대 뇌물과 경찰-업자 간의 검은 유착 비리였습니다. 비록 일부이지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관이 일탈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5.5.12.노컷뉴스 「구속된 현직 경찰관,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알려주고 수억원 뇌물 수수」 등 보도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성매매업주와 결탁한 비리 경찰의 뇌물수수 경찰이 놓친 것을 검찰이 잡아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을 뻔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에 걸려 구속 기소됐다.

검찰(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21년 집창촌 일대 성매매업소 단속에 나섰던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경찰관 A씨와 B씨가 성매매업주와 유착한 혐의를 발견했다. 당시 30대였던 A경위는 다른 경찰서에서 성매매업주 C씨를 수사하자 이를 무산하기 위해 허위 폭행 사건으로 바지사장인 D씨를 입건한 뒤 D씨가 자신이 해당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자백하게 하고 사건을 먼저 송치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 50대인 B경위는 C씨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하거나 수사 관련 기밀을 제공한 범죄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영상기록 검토 중 수사기밀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공동 보완수사에 나섰다. 계좌 압수수색과 통화 및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두 경찰관의 비위 혐의를 밝혀냈다. 특히 B경위의 뇌물 수수 혐의는 경찰 수사에선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B경위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서 제3자 명의로 3천

만 원이 송금된 것이 발견됐다. 검찰은 청탁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해 B씨를 직접 구속했다.



보완수사로 두 경찰관은 직위해제 됐다. A경위는 2022년 6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B경위는 2023년 1월 특가법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영장기록을 세밀히 검토해 지역 범죄자와 유착한 경찰의 수사기밀 제공, 형사사건 조작, 뇌물 제공 등의 비리 종합세트를 발견해 낸 사건이었다.

[3-2] [경찰관 뇌물수수·수사기밀 유출 사건]



검사가 풍속업자의 범인도피 사건 영장기록 검토 중 수사기밀 유출 정황 확인하여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이 경찰관인 피의자의 공무상비밀누설은 송치, 뇌물수수는 불송치하자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관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를 밝혀 직구속(평택지청)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내부비리가 발생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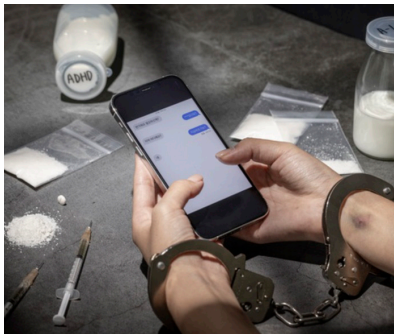
▶ 23. 1. 26. 한겨레 「평택 경찰 왜 이러나...성매매업주 뒤 봐주고, 수사 기밀 넘겼다」 등 보도

승진 위해 마약사범에 허위자백 강요한 경찰, 검찰 수사에 덜미

마약사범과 결탁해 승진 실적을 위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마약공급책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한 경찰관이 검찰 수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마약 관련 재판에서는 마약사범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경찰관이나 검사가 공적(功績)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참작해 양형에 반영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검찰(인천지검)은 40대 경찰관 A경위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적조서 작성을 대가로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마약사건 피의자 B씨의 진술을 받았다.



2020년 9월 다른 마약사건으로 검거된 B씨는 경감 승진 심사를 앞둔 A경위로부터 마약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고 거짓 자백해주면 공적조서를 작성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를 받고 저지르지 않은 마약 범죄까지 만들어내 자백했다는 것.

또 다른 마약판매책 C씨에게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마약거래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제보도 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경위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경위가 마약 사범들과 깊은 유착 관계를 맺어온 것이 밝혀졌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서 A경위가 마약 판매책 C씨의 필로폰 판매는 눈감아줬으며, C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C씨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마약사범들과 유착관계를 이용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A 경위의 직권 남용도 확인했다. A경위는 마약 사범과 평소 함께 여행도 하고 금전거래도 할 정도로 긴밀히 유착하면서, 그들의 범죄는 눈감아주고,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실적을 올려 왔던 것.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2년 12월 A경위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단계까지 조작해 사법시스템을 농락해온 마약 수사 경찰관의 비리를 검찰수사로 단죄해 공직기강을 확립한 사건이었다.

●
●
●
< > ↺ 🔍

↗
☰

[3-3] [경찰관 허위자백 강요 사건]

검사가 별건 마약 사건 수사 중 경찰관이 승진 실적을 위해 마약사범을 회유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 허위의 공적조서를 작성한 다음 재판부에 제출하게 해주고, 다른 마약 판매책에게는 수사상황을 알려주었다는 비위 진술을 확보한 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수사를 통해 형사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경찰관을 기소(인천지검)

한 경찰관이 '공적'을 미끼로 자신의 승진 실적을 위해 마약사범에게 있지도 않은 범죄의 자백을 요구하고, 뒤로는 다른 판매책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권한만큼 유혹에 빠지기 쉬워 제3의 기관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2. 12. 20. 연합뉴스 「허위 자백받고 수사 정보도 몰래 유출...현직 경찰관 기소」 등 보도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뇌물 받고 사건 무마를 알선한 경찰 간부,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갈 뻔했다가 검찰수사로 구속돼



동료 경찰관에 단순 청탁을 했을 뿐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경찰간부가 실제 알선수재에 나섰고 그 대가로 뇌물까지 수수했음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은 2021년 9월 사기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B씨와 돈거래를 한 A경감 사건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A경감의 행위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건 무마를 알선하고 뇌물을 챙긴 알선수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경감은 2017년 11월~2018년 3월 B씨에 대한 사기 사건의 무혐의 처분 알선 명목으로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밝혀졌다.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으로 A경감이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금품수수 후 B씨에게 무혐의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또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A경감의 자필확인서도 확보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2년 5월 A경감을 특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정년을 앞둔 제식구의 비리를 발견하고도 숨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려 한 것을 검찰이 포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직 비리 사범으로 엄단한 사례였다.

●
●
●
< > ↺ 🔍

↗
☰

[3-4] [경찰간부 사건무마 뇌물수수 사건]

경찰 간부가 사건 무마 알선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수했으나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무혐의 약속 문자'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변경, 직구속 기소(성남지청)

검찰이 가볍게 송치한 경찰 간부 비리, 검찰이 보완수사로 파헤쳐보니 1,400만 원의 뇌물이 오간 '사건 무마 알선'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약속한 문자메시지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뻔한 사건을 구속 기소로 바로잡았습니다.

▶ **22. 5. 30. 중앙일보** 「검찰, 수사무마 명목 1000만원 금품수수한 경찰 간부 구속기소」 등 보도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과 제 식구 감싸던 경찰을 밝혀낸 검찰수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운 경찰관과 그에 대한 수사 무마를 부탁받고 증거를 누락하거나 관련 기록을 조작한 경찰관이 검찰의 재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경북경찰청 소속 40대 A경사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3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30대 B경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

B경사는 그에 호응해 핵심 증거를 누락, 은폐하고 수사기록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며 무혐의처분을 끌어내려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디지털 포렌식 CD 자료를 수사기록에서 누락시켰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증거접수를 거부했다.

또 피의자인 A경사의 주장을 편향되게 반영해 사건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는 배제했다.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 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장기간 표류하게 만들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울산지검)은 이런 부실수사 정황을 파악하고 1개월에 걸쳐 전면적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B경사가 고의로 누락시킨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담긴 CD를 확보한 뒤 분석해 A경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조한 범행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를 찾았다.

A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범행 관련 채팅 내역과 통화기록도 복원했다. D경사의 근무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된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포함 사건 관련자를 재소환해 새롭게 진술을 청취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A경사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 뿐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위한 B경사의 수사 무마 시도까지 밝혀냈다. 그 결과 A경사는 구속 기소됐고 B경사는 직무유기, 증거은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도둑을 잡으려 했더니 거꾸로 도둑질을 도운 적반하장과 그런 비리경관도 제 식구라며 감싸기 급급한 ‘침묵의 카르텔’ 문화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냈다.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푸른 색 제복을 입는 경찰들이 동료의 비리에 대해 침묵하거나 은폐하는 이런 조직문화를 ‘침묵의 푸른 벽(Blue Wall of Silence)’이라고 부른다. ‘경찰의 침묵 규율’이라고 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런 조직문화를 깨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3-5] [동료 경찰관 수사무마 비리 사건]



현직 경찰관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를 입증하여 구속 기소하고, 해당 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한 동료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하여 동료 경찰관이 계좌 영장을 일부러 집행하지 않는 등 수사를 무마한 사실도 밝혀 동료 경찰관을 인지 후 불구속 기소(대구지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 가상자산, 명품 대리 구매 등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합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중고 거래'를 가장해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23. 2. 12. 중앙일보 「3000만원 등친 피싱, 경찰이었다...동료 경찰은 사건무마 도와」 등 보도

형사사건 전산망에서 사라진 7건의 비밀은?

형사사건 통합전산망의 기록을 자의적으로 조작해 자신이 담당한 고소진정 사건들을 누락시킨 경찰관이 검찰 수사로 꼬리를 잡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공유하는 국가 통합 전산망이다.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KICS에 기록된다. 수사기관이 KICS에 입력하는 정보는 곧 사건의 공식 처리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이를 조작한다는 것은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관 A는 2022년 2월~2023년 5월 KICS 상에서 자신에게 배당된 7건의 고소·진정 사건을 임의로 종결시켜버렸다. 실제 고소 취소가 이뤄진 것이 아님에도 임의적으로 ‘고소 취소’라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처리한 것.

사건을 완전 종결처리하기 위해선 상사의 결재가 필요했다. A는 이를 위해 2022년 2월~2023년 9월 소속 팀장인 B의 계정(ID)으로 KICS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신이 반려한 7건의 사건을 포함해 25건의 반려 승인을 결재 처리했다. 이로 인해 7건 사건은 허공에 떠버렸고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법체계의 미아가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초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9월 5일 임의로 반려된 사기 사건의 고소인 C씨가 다시 검찰(제주지검)에 고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고소장에는 과거에 제출했던 자료가 그대로 첨부돼 있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하던 중 고소장이 임의 반려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단계별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경찰에 임의로



반려된 사건들의 송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송치요구를 통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을 의뢰한 결과, A에 대한 직무고발이 이뤄졌다.

검찰은 KICS 접속 기록과 IP 내역도 정밀 분석했다. 이를 통해 A가 KICS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상급자 계정을 무단 사용해 사건을 은폐한 범행을 확인했다. A는 경찰 내부 망에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생각에 꼼수를 부렸다고 반성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2024년 1월 그런 A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기관의 사건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밝혀낸 사건이자 경찰 조직 내 사건 처리 절차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례였다.

●
●
●
< > ↺ 🔍

↗
☰

[3-6] [경찰관 고소사건 7건 암장 사건]

검사가 별건의 고소 사건 검토 중 경찰관이 7건의 고소·진정을 접수하지 않고 KICS에 '고소취소' 등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사건을 암장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해당 암장사건을 송치요구하여 송치받고, 경찰이 검사의 송치요구를 계기로 해당 경찰관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후 송치하자 IP내역과 사건처리내역 등을 분석하여 혐의 규명한 후 기소 (제주지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는 경찰, 검찰, 법원이 모든 사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국가 통합 전산망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국민(kics.go.kr)에게 공개함으로써, 특정 기관이 사건을 임의로 덮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공적인 기록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24. 1. 18. 제주일보** 「제주경찰 왜 이러나...사건 무단 반려 또 적발」 등 보도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거액 뇌물 받고 범죄세탁 해준 경찰 비리종합세트가 말해주는 것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자 이를 악용해 사기범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던 경찰관이 결국 검찰 수사망에 걸려 구속됐다.

수사과 여성팀장인 A경위(52세)는 여러 건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B씨(46)에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을 과시하며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B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총 22회에 걸쳐 함께 2억1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A경위는 B씨의 주소지를 자신의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후 고소인 기준



16건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 받거나 재배당 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이 불기소 처분된 B씨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검찰(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게 된 B씨가 A경위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사실을 폭로한 것.

검찰은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약 1개월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A경위와 B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A경위를 체포했다. 이어 A경위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필적조사까지 한 끝에 결국 A경위의 자백을 받아냈다.

A경위는 뇌물수수과 범죄은폐의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B씨에 대한 3건의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여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고, B씨에게 불리한 서류를 폐기하거나 누락시키고, 이렇게 조작된 사건기록을 3년간 개인 캐비닛에 감춰뒀다.

2024년 5월에는 다른 사건으로 수배된 B씨에게 도피자금으로 미화 3,850달러(약 5백만원)를 제공했다. 또 2024년 9월 B씨가 구속됐음을 통보받고도 B씨에 대한 수사중지 사건 4건을 방치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공용서류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 경찰 비리의 종합세트를 방불케 했다.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를 덮어 주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찰관 개인의 비리를 밝혀낸 것을 넘어 경찰의 수사권 강화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뚜렷이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
●
●
< > ↺ 🔍

↗
☰

[3-7] [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 종합세트 사건]

검사가 별건 사기 범행 수사 중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 경찰관이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2억원대 뇌물 수수, 사건 기록 중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조작, 사건기록을 3년간 캐비닛에 은닉, 구속영장으로 수배된 피의자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 확인하여 구속기소(서울중앙)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악용해 16건의 사기 사건을 불법 종결시켰습니다. 특히, 통제받지 않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악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25. 7. 31. 한국일보** 「"불송치 해주겠다" 2억 행진 경찰관... 다른 3명한테도 수천만원 갈취」 등 보도



관련 뉴스 자료 中 (발취)

ChosunBiz

이코노미조선 | E

경제 | 증권 | 부동산 | IT | 금융 | 산업 | 중소기업·벤처 | 유통 | 정책 | 정치 | 사회 | 국제 | 사이언스조선 | 문화 | 오피니언

사회 > 법조

‘2억대 뇌물 수수 혐의’ 구속된 경찰관, 수천만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

황관해 기자
입력 2025.07.31. 17:47



서울 서초구 서울송암지관 건물./뉴스1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또 다른 사건 관계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경찰관을 31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국일보

"불송치 해주겠다" 2억 챙긴 경찰관... 다른 3명한테도 수천만원 갈취

644건 기사 (2개) | 199 2025.07.31 17:58 | 478 2025.07.31 17:58

독장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 혐의
하위문자 보내 발령 거당된 동료도 기소돼



검정 직조, 연필/뉴스

사건 피의자로부터 2억 원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위아베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이 두 다른 3명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뇌물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작각 기당된 동료 경찰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수수 경찰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 해버릴테니까~~

올해까지 나 잘 지키봐
내년부터는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어지는 시스템은 00이(B) 세상이다

오전 식사시간 전에 2개 와야나도 움직여

나 오늘 실리주면 내일 출근해서 00건은 불기소로 정리해볼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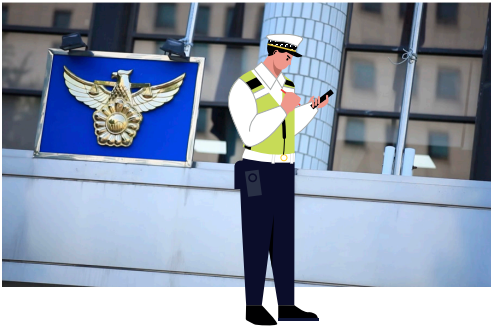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거 매력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거야

봉 잡은거야 00(B) 나 잡으면 아직 못잡아서 탈이지만

그리고 하나는 약속할게 00(B)씨 절대 구속은 안되게 할 거야 그러니 00(B)씨도 꼭 나랑 약속 지켜줘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음주측정 거부 3차례 불송치 사건 뒤에 뇌물 경찰 있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뚜렷해 3차례나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뒤에 뇌물 경찰들이 숨어있었음이 드러났다.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다. 2020년 12월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이 골프장 40대 임원인 A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체포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음주측정거부가 분명했지만 경찰은 2020년 12월 28일 이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인천지검)은 꼼꼼히 사건기록을 검토한 끝에 3차례나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2021년 3월 19일 해당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A씨는 물론 다른 골프장 직원들이 CCTV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 음주운전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음주운전사고인 것을 감추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를 확인하고 2021년 9월 30일 A와 골프장 직원 D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21년 10월~2022년 4월 담당 경찰서와 경찰관들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여 경찰서장인 B(57)와 정보과 소속 경찰관 C(51)가 골프장 임직원들로부터 회원가 혜택 등의 부킹편의와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혔다. 경찰관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이나 불송치결정을 반복했던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이런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4월 29일 두 경찰관과 또 다른 골프장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이 강화된 경찰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불송치 결정을 남발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 ● ● < > ↺ 🔍
↗ ☰

[3-8] [골프장 뇌물수수 음주측정 무마 사건]

음주측정거부 사실이 충분함에도 사경이 검찰의 3차례 재수사요청에도 불송치한 사건을 송치요구하여 전면 재수사 결과 경찰관 2명이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범행 전모를 밝혀 뇌물수수 경찰관 2명을 포함한 4명 기소(인천지검)

경찰이 '혐의없음'이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 이 강력한 권한이 뇌물과 결탁하면, 범죄를 덮어주는 '면죄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지역 토착세력과 결탁한 비리가 물길 뻗은 사건이었습니니다.

▶ **22. 4. 8. 한겨레** 「음주 사고 무마 대가로 뇌물 의혹...검찰, 현직 경찰서장 등 수사」 등 보도

8년간 수사 뭉개 공소시효 넘긴 경찰, 검찰 시정조치 요구로 문책



경찰이 기본적인 참고인 소재 조사도 하지 않아 사기범죄 수사를 8년이나 방치하다 뒤늦게 참고인 소재가 파악됐지만 다시 1년이 넘게 수사를 지연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태만을 저지른 것이 검찰에 적발됐다.

60대 피의자인 A씨는 2012년 1월경 B씨에게 “공장 철거 공사와 관련해 10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20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B로부터 총 5억 원을 송금 받은 뒤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6월 A씨를 고소했으나, 핵심 참고인인 C씨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사건이 참고인중지 처분됐다.

검찰(수원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1년 전인 2021년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1년이 지난 2022년 3월에야 참고인 C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소재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2022년 3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A씨를 형식적으로 조사한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태만히 처리했다는 판단 하에 해당 사건을 ‘시정사건’으로 정식 등록하고, 경찰에 수사 지연의 구체적인 경위와 담당 경찰관의 직무상 과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참고인 C씨는 2014년과 2016년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런 기초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의 태만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묻히게 된 것.



검찰은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잡고, 담당 경찰관에 대한 상응하는 징계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소재를 통보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참고인증지 사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가 발견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즉시 자동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수사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내용이었다.

●
●
●
< > ↺ 🔍

↗
☰

[3-9] [사기범죄 공소시효 도과 사건]

경찰이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8년간 수사를 중지하고 이후에도 수사를 지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미진과 직무상 과오를 지적하며 수사 지연 경위 확인을 요구하고, 담당 경찰관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정조치를 통보(수원지검)

경찰이 "핵심 참고인을 못 찾겠다"며 8년간 방치한 사기 사건, 알고 보니 그 참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도 1년을 더 뭇개 공소시효를 넘기고 '혐의없음'으로 덮으려 한 것을, 검찰이 적발해 담당자 문책과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약 10여년 전 5억원의 피해를 당한 고소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바람에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히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속기간 넘겨 상습 스토킹범 풀어줄 뻔한 경찰, 신속한 영장 재청구로 추가 스토킹 피해 막은 검찰

경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사건을 송치하는 바람에 석방될 뻔한 스토킹 피의자를 검찰이 신속한 보완수사로 재구속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았다.

중국 국적의 남성 A씨(40세)는 별거 중인 배우자 B씨(43세)를 상대로 2025년 6월 4일~10일 118회나 스토킹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6월 22일~8월 18일 41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고 주거지를 침입해 결국 9월 4일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잠정조치 처분 중 구속된 통상의 경우와 달리 A씨는 관할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구치소에 구속 상태였고 경찰은 송치기간을 놓친 것을 모른채 있다가 구속기간인 10일을 넘겨 13일째인 9월 16일에야 사건을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한 것.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날인 9월 17일, 경찰 구속기간을 넘긴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였고,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도주할 위험도 있고 B씨에게 추가적 피해를 가할 위험성도 컸다. 검찰은 신속한 재구속을 위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9월 19일 A씨를 조사해 잠정조치 위반 혐의 이전에 발생한 ‘별건의 스토킹 범죄’ 혐의를 찾아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틀 뒤인 24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A를 재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9월 30일 별건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송치했던 잠정조치 위반 혐의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경찰 수사 과정의 하자를 검찰이 바로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사건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와 같이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사건에서, 절차적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법 공백을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가 막은 사례라 하겠다.

●
●
●
< > ↺ 🔍

↗
☰

[3-10] [경찰 구속기간 도과 송치 사건]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를 구속기간(10일)을 넘겨 송치하는 과오를 범하여, 검찰이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별건 스토킹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두 사건을 병합 기소하여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음(부천지청)

검찰의 신속한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는 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송치 후 사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5. 11. 7. 한국일보** '검찰, 스토킹 피의자 구속 기한 넘긴 경찰 징계 요구' 등 보도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검찰 재수사로 가스라이팅과 적극적 살인 밝혀진 이은해 사건



202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34세)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전 오랜 세월 가스라이팅을 해왔으며 범행에 성공하기 전에도 두 차례나 더 살인미수를 저질렀다는 것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은해는 스물아홉 살이던 2019년 6월 여덟 살 연상의 남편 A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로 하여금 기초 장비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익사시켰다.

경찰은 이를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가 2020년 10월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혹 제기에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두 달 뒤인 2020년 12월 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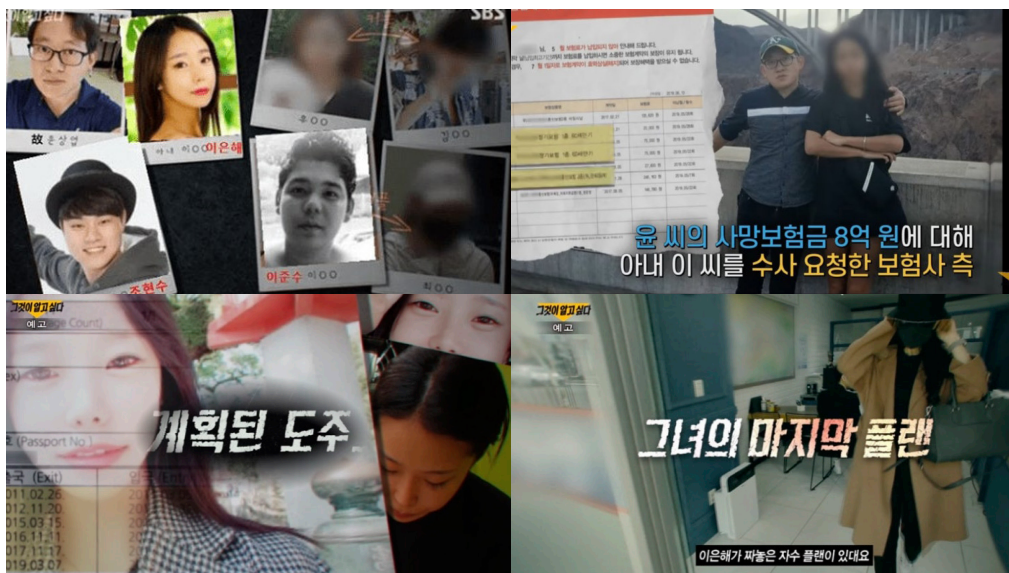
할 사람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생명보험금 편취 미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인천지검)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보완수사에 나섰다. 현장검증, 참고인 조사, 통신·계좌 추적, 압수수색 및 전문가 자문 의뢰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은혜는 2011년경 피해자 A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2017년 3월경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도 경제적 착취를 지속해 A씨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렸다. 또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고립시켜 A씨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뒀다.

이은혜와 내연관계인 동갑내기 조현수는 A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하기 전에도 두 차례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독이 있는 정소와 피를 넣은 음식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했다. 2019년 5월에는 경기도 용인의 낚시터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를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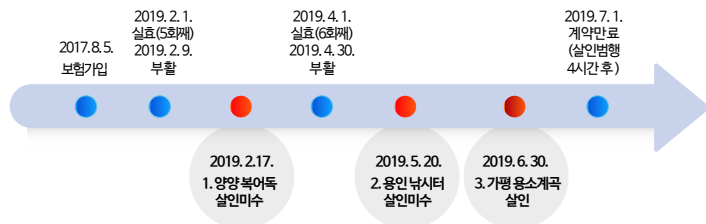


에 빠뜨렸으나 당시 동행한 지인에게 발각돼 수포로 돌아갔다.

둘은 2021년 12월 검찰청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수사망이 좁혀지는 것을 감지하고 바로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2022년 4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작위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2022년 10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등을 유죄로 판정해 이은혜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023년 9월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의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A씨에 대한 가스라이팅과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가평 용소계곡 살인, 8억 원 생명보험금 편취미수로 이어진 이은혜의 범죄 전모가 낱알이 드러난 것 또한 사실이다. 또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 구속 직후 A씨 유가족에게 장례비·생계비 지급을 지원하고 유가족을 도와 A씨 양녀로 입적된 이은혜 친딸에 대한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2024년 8월 무효 판결을 받았다.



[3-11]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경찰이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하여 묻힐 뻔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고, 가스라이팅 정황과 보험금을 노린 두 차례의 추가 살인미수 시도까지 밝혀내, 도주한 주범들을 공개수배로 검거하여 살인 등 혐의로 기소(인천지검)

검찰의 보완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의 가스라이팅 정황과 두 차례의 추가 살인미수 혐의(북어독, 뉘시터)를 규명했습니다. 송치 이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한 것은 검찰의 치밀한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22. 4. 15. 조선일보 「이은해·조현수 수사 검사 "검수완박 되면 계곡살인 사건은..." 등 보도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

2,400억대 범죄수익 자금세탁 일당, 이들로부터 뒷돈 받고 수사편의 제공한 현직 경찰서장을 검찰이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 2,496억 원을 세탁해 준 기업형 조직과, 뒷돈을 받고 이들을 비호해 온 현직 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이 검찰의 철저한 보완수사 끝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4년 12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 6,300만원)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구속 송치하였으나,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자금세탁 업체의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로 입건하였음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수원지검)은 A씨와 그 일당이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찰청 자금추적팀과 공조하여 방대한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이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불법 사설 코인 환전소’를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2,496억 원을 테더코인(USDT)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리는 전문 자금세탁 조직임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범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 ‘경찰 고위 간부’의 비호가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범죄 수익의 일부가 현직 경찰서장인 B 총경(50세)과 C 경감(57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 B 총경은 A씨를 통해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전부 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사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총경은 A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거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심지어 A씨의 돈을 갖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청탁까지 들어주며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 B 총경은 환전소의 관할 경찰서 소속 C 경감을 A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C 경감 역시 명품 신발과 의류 등 구체적 품목을 요구하여 제공받고,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A씨를 비롯한 자금세탁 조직원 5명뿐만 아니라, 이들을 비호한 B를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C 경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개인 전자지갑 등에 은닉한 15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찾아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문힐 뻔했던 대규모 자금 세탁 범죄와 이들을 비호한 권력형 비리가 검찰의 치밀한 보완수사로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본건 사설 코인 환전소 사진



[3-12] [2,400억 코인 자금세탁 및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



경찰이 자금세탁 업체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전면 재수사하여, 2,496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자금세탁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이들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 세력까지 찾아내어 총 7명(6명 구속, 1명 불구속)을 기소(수원지검)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금세탁 업자들을 이용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들도 일부 경찰관과 결탁하여 비호를 받게 될 경우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25. 11. 27. 중앙일보 「피싱 자금세탁 코인업자 돈 받고 범행 도운 경찰서장 구속기소」 등 보도

관련 대화내역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B(서울○○경찰

○○아 내일 가능한지

오전 10:06

A(♂♂ 실운영자)

네

오전 10:41

B(서울○○경찰

얼마 가능하

오전 10:42

A(♂♂ 실운영자)

1150 이요

오전 10:42

B(서울○○경찰

○○아 보냈

오전 10:42

A(♂♂ 실운영자)

형님 저녁에 보낼꺼예요

오전 10:42

B(서울○○경찰

○○아 형님 인사 쓰는 1200 안월까

오전 10:42

A(♂♂ 실운영자)

네

오전 10:42

A(♂♂ 실운영자)

정리하고 저녁 9시에 1200 보낼게요

오전 10:42

B(서울○○경찰

○○아 고맙달

오전 10:42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B(서울○○경찰

신분증

오전 11:01

B(서울○○경찰

사기꾼처럼 생겼

오전 11:01

B의 지인

주소는 광주네

오전 11:02

B(서울○○경찰

잡아!

오전 11:03

B(서울○○경찰

내가 보기엔, 여관에 있을

오전 11:03

B의 지인

생긴게 그리 생겼네

오전 11:05

B의 지인

○○○한테 돈세탁 말긴애들이 아직도 세탁할 돈이 많아서 세탁업자를 찾고 있다는데

오전 11:06

B의 지인

세탁할거면 얘기하래 말해준다고

오전 11:07

B의 지인

형 그 돈 주인이 광주사람이던데

오전 11:08

B의 지인

○○○형

오전 11:09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C(○○경찰서 경찰관)

여자신발 사이즈 230 > 235로 무락

오후 09:40

자금세탁 조직원

업력 원료임니당

오후 09:44

C(○○경찰서 경찰관)

운동화 보내고 연락해

오후 09:47

자금세탁 조직원

네 형님~!

오후 09:48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C(○○경찰서 경찰관)

○○대표이사

오후 05:25

○○경찰서 경찰관

넌

오후 05:25

C(○○경찰서 경찰관)

잘못걸

오후 05:26

C(○○경찰서 경찰관)

통장 통결 1년 됐다고 하

오후 05:50

4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숨겨진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과 세심한 보완을 거쳐, 사건의 본질을 밝힙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신뢰받는 정의가 실현됩니다.



1 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뀔치기' 사건 138P

2 교통사고 기록 속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 140P

3 13세 아동 성매매 둔갑 성폭행 사건 142P

4 미성년자 절도 배후조종 사건 144P

5 불법 사행성게임장 '바지사장' 사건 146P

6 4년간 '바지사장' 내세운 환경법규 위반 사건 148P

7 아파트 주차장 내 쇠파지 강도살인미수 사건 150P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경찰은 아내의 거짓 자백에 속아 송치, 검찰은 남편의 무면허 뺑소니 운전 밝혀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대신 아내를 자수시킨 남편이 경찰 수사를 따돌렸다가 검찰의 보완수사에 털미를 잡혔다.

A씨(당시 36세)는 2024년 10월 면허 취소 상태(무면허)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석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도망쳤다. 그런데, 다음날 아내인 B씨(35세)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자수하게 하였고, 이후 자차 보험금 약 2,300만 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B씨의 허위자백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검찰(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담당한 신임검사는 B씨가 전과도 전혀 없고 비교적 큰 차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112신고나 119신고도 없이 도망갔다가 다음 날 바로 자수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기록에서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발견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에 운전석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였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B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사건 당시 B씨가 현장에 없었음을 밝혀냈다. 또 이를 토대로 아내 B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 허위 자백과 범인도피방조를 자백 받았다. 또 남편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백을 받아냈고, 추후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도 밝혀냈다.

허위 자백으로 은폐될 뻔한 무면허운전자의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보험사기 범죄가 은폐될 뻔한 것을 신임 검사의 면밀한 조사 기법과 적극적인 인지 수사로 밝혀낸 사건이었다.

●
●
●
< > ↺ 🔍

↗
☰

[4-1] [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피의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고 아내를 자수하게 하여 아내가 송치된 사안에서, 영상녹화 등 면밀한 보완수사로 아내의 허위 자백 사실을 밝히고, 피의자의 보험사기, 도주운전 등까지 인지, 기소(울산지검)

'운전자 바꿔치기'는 본 사건처럼 무면허·음주 운전의 형을 피하려다, 범인도피교사(운전자), 범인도피방조(공범), 보험사기(본 사건) 등 더 중한 범죄로 가중 처벌되는 '소탐대실'형 범죄입니다. 경찰이 허위 자백을 그대로 받아들여 송치했으나, 검찰은 자수 경위의 모순점을 토대로 목격자 재조사 및 통신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을 규명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는한 순간의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사건을 검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라는 것을 밝혀내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보험사기단의 조직적 범죄임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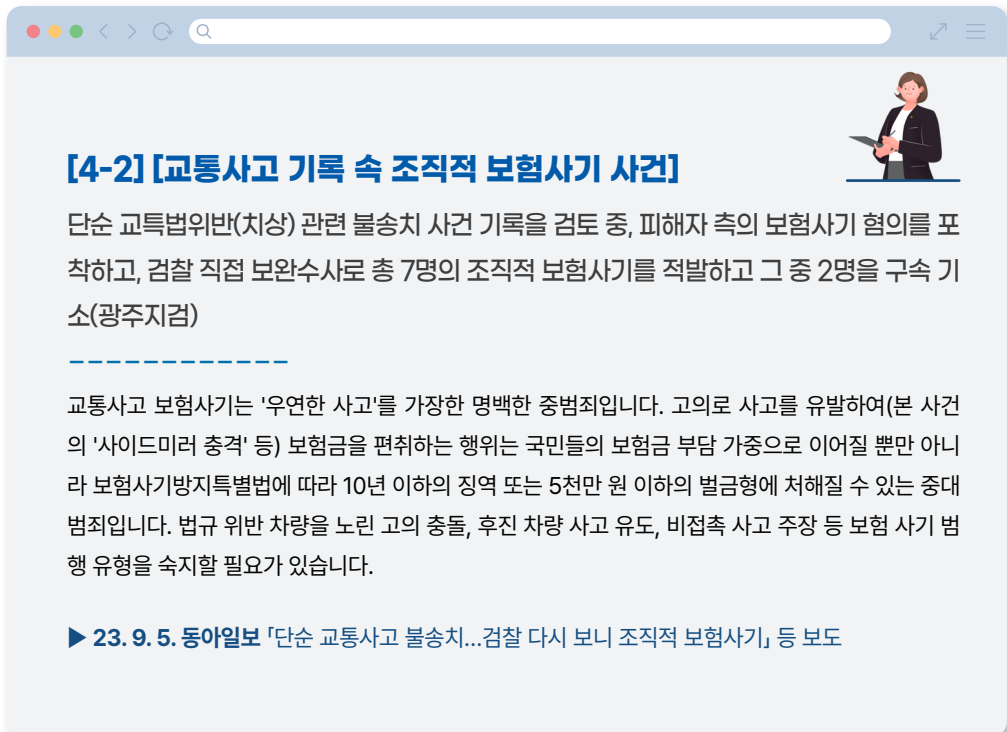


2022년 12월 A씨(당시 23세)는 지나가던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가 충격을 받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후 검찰에 불송치 기록을 송부했다.

검찰(광주지검)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다가 “2022년에만 교통사고를 3번 당했다”는 A씨의 진술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조직적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견했다. 이에 보완수사에 착수해 금융감독원·보험사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처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교통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주범 A씨와 B씨(24세) 등 총 7명의 20대 피의자들의 계좌와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들이 17차례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억 2,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 사용한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피해 금액을 감안해 2023년 7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씨와 B씨(24세)는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기소, 도망간 공범 2명은 지명수배 했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하려던 사건을 검찰이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수사에 나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들을 줄줄이 잡아낸 사건이라 하겠다.



경찰이 미성년 성매매로 송치한 사건, 성폭행으로 밝혀져

60대 남성이 13세 아동을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주장만 믿고 단순 성매매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60대 남성인 A씨는 2023년 8월 심야에 동네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B양(당시 13세)을 편의점에 데려가 간식을 사주고 용돈을 줘 환심을 산 다음 “대화를 해주면 용돈을 더 주겠다”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리곤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킨 뒤 간음까지 하려다 실패하고선 돌려보냈다.

B양이 집으로 돌아온 뒤 친구와 전화 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는 것을 듣게 된 가족들이 학교 보안관에게 이를 알렸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양이 수치심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자 A씨의 주장에 따라 아동 성매매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성폭력 범죄가 성매매 범죄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먼저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선 진술하지 않았던 구강성교 사실을 발설한 것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찾아냈다.



또 담당 검사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성장한 피해아동인 B양과 대화를 통해 먼저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영상녹화된 B양의 진술내용을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의뢰해 신뢰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통해 B양이 성매매 상대가 아니라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밝혀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2024년 7월 바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양 가족과 부랴부랴 합의해 ‘처벌 불원’ 의견을 받아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경찰수사단계에서 단순 성매매로 처리될 뻔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미성년 성폭행이란 중대범죄임을 밝혀내고 그 범인을 엄단한 사건이었다. 또 그 과정에서 직접 면담과 진술 확보를 통해 피해 아동이 사건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이기도 했다.

[4-3] [13세 아동 성매매 둔갑 성폭행 사건]



60대 남성이 13세 아동을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주장만 믿고 단순 성매매로 송치한 사안에서, 검사가 피해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는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실체가 성폭력임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 (안산지청)

아동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 아동이 심리적 위축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본 사건의 '성매매')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경우,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실체가 은폐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경찰의 사건기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한번 희망을 걸 수 있도록 보완수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24. 7. 12. KBS뉴스 「검찰, 아동 성매매 사건 보완 수사로 60대 성폭행 범죄 밝혀」 등 보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경찰에선 단순 차량털이, 검찰에선 배후 사주범이 있음을 밝혀내



경찰이 10대들의 차량털이 범죄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범행의 배후에 소년원 수감 6회 전력의 상습범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2024년 10월 4일~8일 4대의 차량 문을 따고 들어가 차량 내 신용카드와 물품 등 총 210만 원을 훔친 A군(당시 17세)과 B군(당시 16세)을 구속해 11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대전지검)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두 10대 외에 배후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특히 부임 1개월 차의 신입검사가 A군과 B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그들 배후에 제3의 인물인 C군(당시 18세)의 실명을 확보했다. 이어 범죄사건 통합검색을 통해 C군이 절도·사기 등 소년보호사건 송치 20회, 소년원 수감 6회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C군은 소년원에서 A군을 알게 됐고 다시 A군의 소개로 B군까지 범죄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과 B군에 대한 계좌·통신영장을 청구 및 발부받아 C군에게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정황과 범행 전후 긴밀하게 연락한 증거를 확보해 C군을 주거지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 및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C군은 “범행 방법만 알



려줬다”고 주장했으나 담당검사의 적극적 설명으로 결국 구속됐고 차량털이 주범으로 기소됐다. C군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해당 사건 외에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선결제한 뒤 즉시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98만원을 편취한 범행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의 송치기록을 토대로 범행의 배후에 상습범이 있을 가능성을 포착해 주범을 체포함으로써 추가 범행과 또 다른 미성년 공범 양산을 차단함으로써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라고 하겠다.

[4-4] [미성년자 절도 배후조종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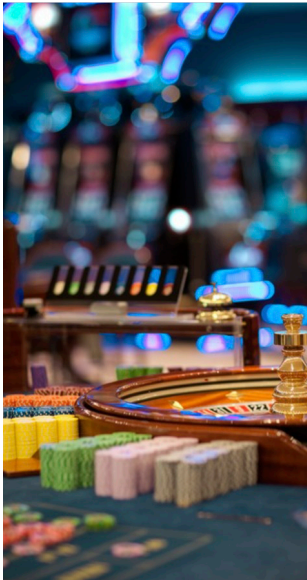


미성년자 2명이 차량 내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특수 절도 등 혐의로 송치된 사안에서, 신임 검사가 계좌, 통신영장 집행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조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배후인물이 있음을 밝혀 추가 인지하고 직구속 기소(대전지검)

계좌 및 통신 분석(범죄수익금 귀속)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배후 상습범'의 존재를 규명하고 구속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이미 드러난 범죄뿐 아니라, 배후의 주범을 밝혀 추가범죄를 막은 사례입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사건현장에 있던 '진짜 사장'까지 잡아낸 검찰



경찰이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후 공범 중 1명만 입건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현장에 있던 다른 공범을 밝혀내 구속시켰다.

50대 남성인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21년 12월~2022년 3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했다. 그러다 2022년 4월 해당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기습 단속에 걸려들었다.

A씨는 자신은 '종업원' 일 뿐이라며 B씨를 '사장'이라고 지목했다. 경찰은 이 말만 믿고 B씨만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포항지청)은 범죄사건 통합 검색을 통해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단순 종업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1년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2023년 4월 A씨를 공범으로 입건했지만 여전히 '불법 환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가 소극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결국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A씨의 계좌 거래내역과 게임장 관리자 계정을 정밀 분석해 범죄수익 규모가 약 5천만 원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A씨와 B씨를 소환조사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수익금을 5대 5로 분배했다는 것과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2023년 7월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자금책 공범인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안일한 초동 수사로 문힐 뻔했던 사건의 주범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엄단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여실히 입증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
●
●
< > ↺ 🔍

↗
☰

[4-5] [불법 사행성게임장 ‘바지사장’ 사건]

경찰이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후 '바지사장'만 입건하여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배후에 있던 실업주를 특정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실업주를 직구속 기소(포항지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같은 조직범죄 수사 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진짜 사장'(본 사건의 A씨)이 종업원으로 위장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경찰은 현장 진술에 의존해 B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송치 기록 검토 중 '범죄사건 통합 검색'을 통해 A씨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핵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객관적 전과를 근거로 검찰이 직접 계좌 거래내역과 게임장 관리자 계정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수익을 5:5로 분배한 '진짜 사장'임을 밝혀내고 구속했습니다.

‘바지사장’의 허위 자백에 4년째 엉킨 경찰수사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낸 검찰의 과학적 보완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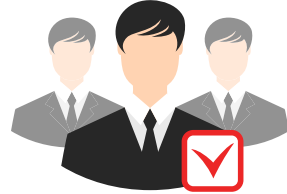
불법 환경폐기업체 ‘바지사장’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매달린 경찰수사로 인해 오리무중에 빠졌던 환경법규 위반 사건의 실체가 검찰의 과학적 보완수사로 4년 만에 드러났다.

70대 남성인 A씨는 약 1년의 심사 기간과 1억 원의 비용이 드는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60대 남성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9년 9월~2021년 6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용해로)을 불법으로 운영했다. 해당 기간 동안 무허가 시설 운영,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다수의 환경 법규 위반이 발생했다.

그러다 2021년 9월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인 B씨가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허위자백으로 실제 운영자인 A씨의 범행을 은폐했다. 경찰은 B씨의 허위 자백만 믿고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는 A씨”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다시 “내가 운영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4년간 오락가락 진술로 경찰 수사를 혼란에 빠뜨렸다.

검찰(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짜 운영자를 가려내기 위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신규 용해로 구매 자금과 운영비 같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들 자금의 출처가 A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직원 근태관리의 주체 또한 A씨로 드러났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의 변호인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조사 시점을 전후로 두 사람이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데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A씨가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계속하라고 종용하는 내용과 B씨가 스스로 운영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1,500여 개의 통화녹음파일을 확보한 것.

마지막으로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재조사로 마침내 두 사람 모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5년 9월 실제 운영자 A씨와 바지사장 B씨를 환경 관련법 위반, 범인은닉 및 범인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허위자백에 속아 넘어간 뒤 오락가락 진술로 4년간이나 허송세월했던 사건의 실체가 검찰의 과학적 재수사로 밝혀진 사건이었다.

[4-6] [4년간 '바지사장' 내세운 환경법규 위반 사건]



4년간 '바지사장'의 허위 자백에 속아 실운영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가 장기화된 환경법규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하여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실운영자와 바지사장의 범인은닉 혐의까지 밝혀내 기소(마산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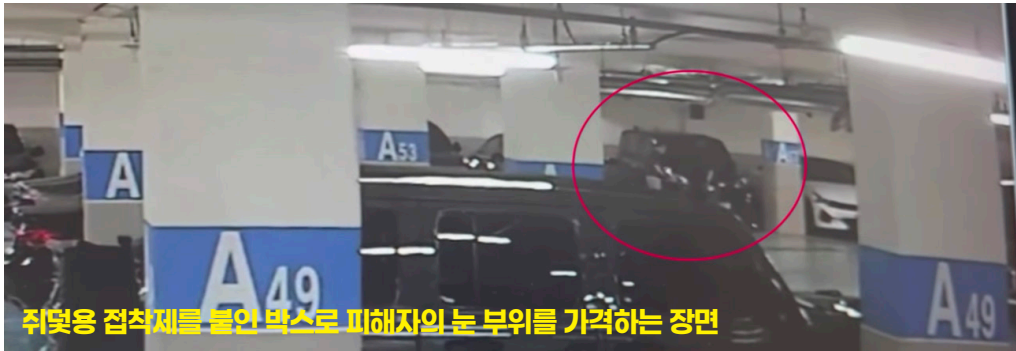
'바지사장'을 내세운 범치는, 피의자의 '허위 자백'이나 '진술 반복'에만 의존할 경우 수사가 장기 표류할 위험(본 사건의 경우 4년)이 큼니다. 검찰은 '바지사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대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으로 실제 자금줄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허위 진술을 계속하라"고 종용하는 1,500개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여, 4년간 묻혔던 '진짜 사장'과 '범인은닉' 혐의까지 규명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

‘묻지마 폭행’으로 송치된 ‘쇠망치 테러’, 사전 계획된 강도살인미수 사건임을 밝힌 검찰



쇠망치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는 장면



쥐덫용 접착제를 붙인 박스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휘두른 사건이 단순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치부될 뻔 했으나, 검찰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강도살인미수’ 범행으로 밝혀졌다.

30대 남성 A씨(38세)는 2025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의 중소기업 대표 B씨를 급습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쥐덫용 접착제가 발라진 박스로 B씨의 눈을 가격하고,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B씨가 격렬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불과한 ‘특수상해’. A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여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인천지검)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씨를 노린 점, 사전에 인근 CCTV를 손괴하고,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주목하여 이 사건은 배후 공범이 있는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재포렌식’을 실시했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었기에 휴대전화 등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중국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메모 등이 발견되어 번역·분석하였고, 방대한 규모의 통신기지국위치 및 계좌거래내역 추적은 물론 추가 참고인 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가 진행되었다.

보완수사 결과, A씨의 뒤에는 공범 C씨(32세, 중국 국적)가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C씨와 사전에 피해자 B씨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을 연습한 사실이 드러났다. 3개월간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했고, 쥐뿔 접착제, 수갑, 쇠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가 하면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 심지어 이들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제2의 범행까지 예비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배후에 숨어있던 공범 C씨를 체포해 직접 구속했다. 또한 주범 A씨의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강도살인미수'로 변경하여 기소했다.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강력범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례이다.



[4-7] [아파트 주차장 내 쇠팅지 강도살인미수 사건]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해 단순 특수상해죄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방대한 중국어 녹음파일 분석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임을 밝혀내고, 숨어있던 공범까지 찾아내 구속기소(인천지검)

금전적 이익을 노린 계획적인 강력 범죄를 엄벌에 처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구속기간 내에 강력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경찰은 물론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5. 11. 26. 매일신문 「쇠팅지 휘두른 중국인 2명,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 등 보도



사건 보도 자료

냉동탑차에서 발견된 대형 삽



냉동탑차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곡괭이, 장갑, 도끼)



5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



숨겨진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과 세심한 보완을 거쳐, 사건의 본질을 밝힙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신뢰받는 정의가 실현됩니다.



1 전화번호로 찾은 시효임박 사기범 사건 156P

2 9년 만에 밝혀진 사기범 누명 사건 158P

3 경찰의 이중 공소시효 도과 사건 160P

4 공소시효 3일 전 잡은 무보험 운전자 사건 162P

5 공소시효 임박 1억 원대 사기 사건 164P



경찰이 해결 못한 공소시효 임박 사기사건, 검찰이 전화번호 추적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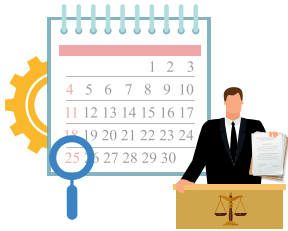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사건기록에서 발견한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해결했다.

공연기획자 A씨(55세)는 2015년 1월 식자재마트를 시작하려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B씨(47세)에게 약 2,000만 원을 빌려간 뒤 잠적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당시 A씨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인인 참고인 여성 C씨는 해외에 거주 중이라 소재 파악이 안됐다. 결국 2017년 11월 참고인증지가 된 사건은 7년 넘게 묻혀있었다.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습 건의 시효 임박 사건을 일괄 검토하다가 2025년 1월 6일에 공소시효(사기 10년)가 만료되는 A씨 사건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피의자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전화번호의 명의가 참고인인 C씨 명의로 돼 있었던 것.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명이 백씨였던 점에 착안해 2024년 11월 C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전남편의 이름이 백○○인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의 화상자료를 제공받아 B씨에게 보여준 후 동일인이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본명이 확인된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및 주소지는 없는 상황. 검찰은 건강보험공단에 A씨에 대한 요





양급여 내역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병원 두 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과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A씨가 거주하던 사무실을 찾아냈다. 그리고 2024년 12월 A씨를 검거한 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는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증지가 된 채 7년간 잠자던 사건을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해결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신속한 직접 보완수사 외의 방법이 없음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고 하겠다.

●
●
●
< > ↺
🔍

⌵
☰

[5-1] [전화번호로 찾은 시효임박 사기범 사건]

검사가 참고인증지 상태로 시효임박을 앞둔 차용금 사기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 명의인의 남편이 진범임을 확인하고, 시효완성 전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 조사한 후 구속 기소(강릉지청)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 권한(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지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진 경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아예 막히게 됩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범의 거짓진술에 9년 허송세월한 경찰, 그가 동종 범죄 상습범임을 밝혀 자백 받아낸 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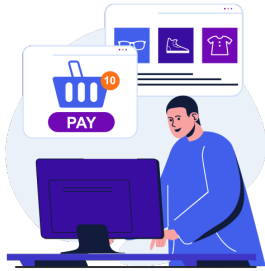
경찰이 진범의 거짓 진술에 속아 해외에 사는 엉뚱한 사람을 사기범으로 지목하고 기소중지로 9년째 묶어뒀던 사건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두 달 전 해결했다. 경찰이 믿었던 참고인이 동종 전과 4범인 상습범임을 밝혀내고 자백을 받아낸 것.

경찰은 인터넷 상거래를 하면서 돈만 받고 물품을 건네지 않은 물품사기 사건의 피해 진정서를 접수하다가 A씨(당시 19세) 명의의 계좌로 물품사기금 약 6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B씨에게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그 진술만 믿고 2015년 1월 B씨를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B씨는 2007년 8월경 해외로 이민을 간 뒤 귀국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사진과 문자에 의존해 B씨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단정하고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그리고도 계속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2015년 3월 B씨에 대해 지명 통보 및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면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가 귀국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9년간 묵혀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24년 11월 경찰은 검찰에 공소시효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서울남부지검)은 이를 검토하다가 2014년 11월~12월 동종 전과 판결문에 기재된 계좌 및 아이디, 출금 사진이 A씨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A씨는 출금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맞으며 동종 범행도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후 A씨가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상습범임을 확인하고, 2024년 12월 A씨를 60만 원 물품사기의 진범으로 약식 기소했다.



또 잘못 입건된 B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후 즉시 지명 통보와 입국 시 통보를 해제했다. 만약 시효가 계속 연장되었다면 B씨는 입국했을 때 형사 피의자로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됐을 것이었다.

경찰이 참고인 진술만 믿고 헛다리 수사를 하는 바람에 9년간 허송세월했던 사건을 검찰이 두 달간 보완수사를 통해 참고인이 진범임을 밝혀낸 사건이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5-2] [9년 만에 밝혀진 사기범 누명 사건]



검사가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을 검토하던 중 진범이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9년간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기 사건의 기록에서 진범의 동종 범행 판결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히 보완수사한 후 진범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서울남부)

'계좌만 빌려줬다'는 진범(A)의 거짓 진술을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해외에 거주하는 무고한 시민(B)에게 기소중지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은 '공소시효 연장 신청' 기록을 검토하다 A의 '동종 전과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자료에 주목했습니다. A가 동일 시기 저지른 다른 사기 범죄 판결문에 있던 계좌, 아이디, 출금 사진이 본 사건의 증거와 일치함을 밝혀내는 보완수사를 통해, 9년 만에 진범(동종 전과 4범)을 밝혀내고 무고한 시민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 24. 12. 27. 시사저널 「10년만에 검거된 사기 사건 진범...이민 간 지인이 누명 썼다」 등 보도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 검찰에 들통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더 긴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다시 공소시효를 넘겨 결국 수사를 무산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2012년 10월 B대부업체로부터 약 2300만원을 대출받은 뒤 11월경 자신 소유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B대부업체는 저당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 경찰에 저당권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했다. 담당경찰관은 2021년 11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의정부지검)은 A씨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진술한 점을 들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죄를 적용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보완수사를 담당한 C경위는 1년 3개월간 사건을 방치하다가 2022년 10월 14일경 공소시효가 도래했음에도 2023년 2월 뒤늦게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검찰은 할 수 없이 사기죄 공소시효도 도과된 사실을 지적하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했는데, C경위는 공소시효 도과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2023. 3. A를 소환조사한 후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기록을 송부했다.

C경위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은 수사권 남용 및 인권 침해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A씨를 소환조사한 것은 사기죄를 적용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수사권 남용 및 인권 침해로 C경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장기간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관의 직무 태만과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불충분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3] [경찰의 이중 공소시효 도과 사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시효가 남은 사기죄로 의율하여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 사건을 1년 3개월간 방치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도과시키고, 나아가 공소시효가 도과한 상태에서 피의자 소환조사 후 기소의견 송치까지 한 사안에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의정부지검)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 태만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피해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 자체를 속여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고 형량이 더 중하여 공소시효 기간도 더 깁니다.

공소시효 만료 3일 앞둔 사건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한 검찰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자동차 무보험운행 사건을 검사가 직접 피의자 소재를 확인해 진범을 처벌했다.

50대 여성인 A씨와 딸인 20대 B씨, A씨 남동생인 50대 C씨는 2017년 7월~12월 B씨 명의의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혐의로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됐다. 이들에게는 적용될 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공소시효가 5년. 경찰은 2022년 7월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 A씨와 B씨는 범행을 부인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C씨에 대해선 소재불명이란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사건을 송치 받은 당일 C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C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교도소에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어 개인별 교도소 수용현황을 통해 C씨가 실제 해당기간 교도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다시 자동차등록 및 폐차 일시, 의무보험 가입 내역, 운행 적발 장소 등을 근거로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결국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해당 기간 자신이 운행했음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A씨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특사경의 태만으로 5년간 방치되다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둔 사건을 검찰의 신속한 보완수사로 해결한 사건으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때의 이점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5-4] [공소시효 3일 전 잡은 무보험 운전자 사건]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기소중지·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을
검사가 진범을 특정하고 공소시효 내에 진범 기소(원주지청)

특사경은 피의자(C)를 특정하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사건 접수 당일 간단한 조사를 통해 C가 범행 기간 내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진범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교도소 수용현황'이라는 기본적인 객관적 사실 확인조차 누락된 특사경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C의 알리바이를 근거로 재검토하여 A의 자백을 받아내고 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했습니다.



9년간 잠자던 1억 사기사건, 공소시효 12일 전 검찰이 해결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를 3개월 앞둔 1억 원 규모의 사기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 만료 12일 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씨(64세)는 코인 노래방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B씨(47세)에게 2015년 7월~10월 1억 2천 만 원의 돈을 송금했다가 B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억대의 손실을 입었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기 범행의 기초인 자금흐름 추적조차 하지 않은 채 B씨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2016년 4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2025년 7월 검찰(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점검하다가 9년 넘게 방치된 이 사건을 발견했다. 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2025년 10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직접 신속한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우선적으로 30여 개에 달하는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자금 흐름부터 추적했다. 그 결과, 피해자 A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코인 노래방 공사와 무관한 다른 지역 공사 대금 돌려막기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다시 조사해 경찰이 수사 당시 제출 받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을 피의자 B씨가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증 문서였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B씨가 다수의 동종사기를 벌였다는 점은 확인됐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B씨가 벌인 공소시효 만료 사기사건 7건을 확보해 B씨의 범행 수법과 채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를 보강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비록 피의자 B씨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약 2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25일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이었다.

자칫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장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찰이 시효 만료 직전에 되살려낸 사건이다. 피의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경찰이 손 놓았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재기하고, 계좌 추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
●
●
< > ↺ 🔍

↗
☰

[5-5] [공소시효 임박 1억 원대 사기 사건]

피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9년간 기소중지되어 공소시효 완성으로 묻힐 뻔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시효 만료 3개월 전 재기하여 30여 개 계좌를 직접 추적하는 등 신속히 보완수사하고, '돌려막기' 정황을 규명하여 시효 만료 12일 전 피의자를 기소(마산지청)

피의자가 도주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를 찾아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한다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나중이라도 검거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개별 사건 하나만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범죄의 전모가

서로 연결되는 순간, 진실은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각각의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놓쳤던 단서와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상호 보완과 협력을 통해 조각난 퍼즐을 맞춰갑니다.



1 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 168P

2 메뚜기형 사무장병원 연쇄 사기 사건 172P

3 다가구주택 4채 연쇄 전세사기 사건 174P

4 13개 흩어진 사건 병합 100억 코인사기 사건 176P

5 143억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사건 178P

6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180P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120억 상당 비트코인 있다”며 경찰 속이려던 사기범죄, 검찰 보완수사에 철퇴



비트코인 투자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고소된 여러 사건을 검찰이 취합해 피의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5억 원가량임에도 120억 원가량이라고 부풀렸고 투자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음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A씨(30세,무직)는 2018년 10월~2021년 11월 친구들에게 비트코인 보유량을 부풀린 자료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약 3억5천만 원, C씨로부터 약 5억 원을 받아냈다. 또한 2022년 6월~2022년 10월 지인인 D씨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해 60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약 8억3천만 원을 받아냈다. 3명의 피해 액수를 합치면 약 16억7천만 원에 이르렀다.



2022년 5월 9일 B씨와 C씨가, 2023년 2월 20일 D씨가 각각 'A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프리카 세이셸 제도에 본사가 위치한 해외 거래소인 '비트맥스'를 상대로 한국이 영장 집행이 어렵다 여기고 여러 건의 거짓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예를 들어, A씨는 비트맥스 내 비트코인 잔여량을 캡처한 사진을 조작해 제시하거나 앱에 접속해 자신의 비트코인 잔액이 한화 120억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는 조작된 동영상 제출했다.

경찰은 2023년 5월경 두 개의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각각 송치했다. 검찰(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해외거래소를 내세워 범죄 입증이 까다롭다는 판단 아래 2023년 7월 2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A씨는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투자해 현재 비트맥스에 12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트맥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출금을 정지하는 바람에 당장 변제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먼저 2023년 8월 국내 중간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해 A씨의 실거래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분석 의뢰한 결과, A씨가 피해 금액의 일부만 투자했음이 확인됐다.

또 A씨의 은행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9월 해외 거래소 비트맥스에 대한 압수영장도 집행했다. 이를 위해 검사실에서 직접 비트맥스 미국지사의 정보 제공 담당 직원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소통해 영장 집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원 발부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보냈다. 그 결과 A씨가 비트맥스에 보유한 비트코인 잔액이 약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A씨가 본 사건으로 수사 받는 중에도 비트맥스에 접속해 도박성 투자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0월 범행일체를 자백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압수 자료 분석 결과, 피해 규모가 약 2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동종 추가 범행을 막은 사건이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증거조작과 수사회피를 시도한 범죄를 전문적이고 국제적 수사로 그 실체를 밝혀냄으로써 첨단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 사례였다. 또한 검찰 보완수사의 존재이유를 입증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1] [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



비트코인 투자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이 경찰로부터 따로 송치된 사안에서, 각 사건을 병합, 보완수사하면서 피의자가 120억 원 가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변소에 관하여 거래소 기록 분석, 해외거래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등으로 실제로는 5억 원 가량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직구속 기소(안산지청)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그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수사기관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끈질기고 정확한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수사기관까지 기망하려 한 사기범죄가 ‘성공’할 뻔 하였습니다.

▶ 23. 11. 23. 뉴시스 『“비트코인으로 돈 벌게 해줄게”... 檢, 17억 편취 사기 밝혀』 등 보도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경찰이 개별 수사하던 7개의 '사무장병원' 사건 병합해 '메뚜기형' 실체 밝혀낸 검찰 수사

경찰이 수사해 각각 불구속 송치한 '사무장병원' 의심 사건 7건을 검찰이 병합 수사해 병원 개폐업을 반복하며 건물주 등으로부터 병원 개설 지원금 등 7억 6천만 원을 빼돌린 '메뚜기형 사무장 병원' 사기 혐의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A씨(여, 50세)는 의사를 '바지병원장'으로 내세우고 비의료인이 실제 원장 노릇을 하는 사무장병원 운영 및 사기 혐의로 경기도 안산과 수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2021년 4월~2022년 7월 개업의를 앞세워 병원을 설립하겠다고며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해당 병원의 투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경찰은 2021년부터 관련 사건들 수사에 나섰으나 범행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피해자가 분산돼 있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었다. 검찰(수원지검)은 2023년 7월 범행 전모를 밝히고,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7건의 사건을 병합한 뒤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피의자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계좌 내역을 분석해 개별 병원의 요양급여 수급 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또 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해 의사 사칭, 병원 개설 계획의 부재, 피해금원 전용 등 전체 범행 구조와 수법도 낱알이 규명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3년 10월 주범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무장병원들'이 연쇄적으로 얹혀 있는 '메뚜기형 사무장 병원 사기'를 규명해 추가 범죄를 막고 경기 남부 일대에서 성행 중인 사무장병원 브로커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사 기반을 마련한 보완수사의 모범 사례라 하겠다.



[6-2] ['메뚜기형 사무장병원' 연쇄 사기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 수법이 규명되지 않은 채 '사무장병원' 의심 사건 7건이 각각 불구속 송치된 사안에서, 검사가 각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피의자가 의사를 사칭하면서 '메뚜기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폐업하고, 건물주 등으로부터 병원 개설 지원금 등 7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까지 밝혀 직구속 기소(수원지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린 '바지원장'을 내세워 불법 개설한 병원입니다. 이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과잉 진료(예: 평균 입원일수 1.8배)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적발 시, 사무장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수십억 원대)을 연대하여 환수당하게 되는 중대범죄입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인들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23. 11. 23. 뉴스1 「진범 찾아내고 '메뚜기형' 사무장 병원 철폐...檢 우수사례 선정」 등 보도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경찰의 개별 수사사건 4건 묶어 20억 원대 전세사기 주범 구속시킨 검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범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4개 사건을 병합 수사해 전세사기 규모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70대 여성 건축업자인 A씨는 2020년 2월~2023년 11월 무자본 투자자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과 입주할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각각 4채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임대했다. 자기 자본 하나 없이 대출금과 보증금만으로 공사 자금을 충당한 것.

세입자 입장에선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집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담보가치가 없고, 명의자는 기본 자본이 없기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전형적 전세사기 사건이었다. A씨가 다가구주택 4채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거둬들인 전세보증금만 22억이 넘었다. 경찰은 2024년 8월과 10월 4채의 다세대주택 중 3채에 대해 전세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대구지검 포항지청)은 4채 각각에 대한 경찰 개별 수사 자료를 취합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보완수사에 나섰다. 8회에 걸쳐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다가구주택 대출금 및 보증금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무자본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건축비를 초과하는 대출금과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임을 규명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2024년 12월 A씨를 구속했다. 검



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해 피해자들의 진술 권도 보장했다.

개별 사건별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찰 수사사건들을 취합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과 유사 범죄 추가 발생 위험을 알려 주범을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검찰 보완수사의 모범 사례 중 하나라 할만하다. 또 사회적 피해가 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
●
●
< > ↺ 🔍

↗
☰

[6-3] [다가구주택 4채 연쇄 전세사기 사건]

다가구주택 4채 관련 전세 사기 사건이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순차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4개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대출금과 보증금 사용처 등 보완수사로 범죄 전모를 규명한 후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포항지청)

경찰이 각 사건을 개별 수사하며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은, 범죄의 전체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주거 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병합'을 통해 개별 사건으로 분산됐던 범죄의 총 피해 규모(피해자 32명, 22억 원)를 규명했습니다. 또한, '자금 흐름' 및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수사로 건축주(A)가 무자본 투자자(명의자)를 내세워 대출금과 보증금을 편취한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 주범을 구속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경찰이 수사하던 13건, 검찰의 통합수사로 100억대 가상자산 사기로 밝혀져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수법으로 고객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편취하는 바람에 13건으로 분산된 고소사건들을 검찰이 취합해 전체 피해액 규모가 100억대에 이르는 것을 밝혀내 해당 거래소 대표가 구속됐다.

피의자 A씨는 B가상자산거래소 대표로 2019년~2021년까지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현금 및 가상자금을 편취했다. 2019년 1, 2월엔 B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바이백을 실시하면서 고객들 계정의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해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처럼 코인 발생 주체가 해당 코인의 시장가격 유지를 위해 유통 중인 코인 물량을 자사 자금으로 되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9년 1~12월 코인 가격 및 거래량을 부풀려 약 59억 원 상당의 회원 소유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또 2020년 1월~2021년 5월 거래소의 적자 누적을 숨긴 채 안정적 운용사를 통한 관리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약 41억 원 상당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2019년 1, 2월에는 계정에 잔고가 없어도 매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하고, A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구동해 정상적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했다.

검찰(서울남부지검)은 2021년 9월~2023년 5월 경찰로부터 관련 13건(송치 7건, 불송치 6건)의 사건을 접수받은 뒤 지능적 사기범죄가 여러 건으로 분산돼 있음을 발견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IT 수사관 등 우수인력과 가상자산 분석도구를 투입해 코인 거래내역, 거래소 입금 계좌, 전자지갑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추가적 범죄증거도 확보해 피해 액수가 총 100억대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직접 구속한 후 구속기소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 건으로 분산돼 일부 혐의는 누락되는 등 사건의 전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던 것을 검찰의 통합적이고 전문적 보완수사로 실체를 밝혀내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은 사건이라고 하겠다.

[6-4] [13개 흩어진 사건 병합 100억 코인사기 사건]

경찰에서 송치 7건, 불송치 6건으로 흩어져 있던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13건을 모두 병합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1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규명한 후 주범을 직접 구속(서울남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은 각 피해자가 경찰에 별도로 고소하여 사건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들이 사건의 일부를 수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각 사건을 병합하여 보완수사하는 것이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전국 7개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사건, 검찰이 하나로 꿰어 143억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 구속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책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별로 나누어 파편적으로 수사한 것을 발견한 검찰이 이를 취합한 보완수사로 143억 원대 자금세탁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

주소지가 서울인 A씨(남, 30세)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2024년 6, 7월 약 두 달간 2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조직 윗선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기에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사건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각 경찰서별로 피해금액의 흐름을 추적 하다가 A씨가 관리하는 계좌를 발견한 것. 그렇지만 A씨의 정체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에 방조 혐의로 송치하는 게 다였다.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서울서부지검)의 담당 검사는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이송한 9개의 개별 사건이 모두 A씨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검토한 결과, 단일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의 영장발부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A씨를 직접 조사하면서 계

좌를 전면 재분석해 경찰이 누락한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A씨가 상품권 매매업으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해 143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2025년 9월 11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국에 흩어져 개별적으로 수사 되던 사건들을 일괄 수사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한 사례라고 하겠다.



[6-5] [143억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사건]

전국 7개 경찰서에서 개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어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을, 검찰이 모두 병합하고 적극적인 보완수사요구 및 직접 계좌 재분석을 통해, 143억 원대 자금세탁 조직원의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구속 기소(서울서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국 단위 조직범죄는 피해자가 분산되어, 본 사건처럼 7개 경찰서에서 9개 사건이 개별 '단순 사기 방조' 혐의로 흩어져 수사될 경우,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사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 25. 9. 18. 세계일보 「검찰, 보이스피싱 피해금 143억원 상품권 세탁한 30대 구속기소」 등 보도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 전모를 규명한 사례

‘세 모녀 전세사기’ 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피해 밝혀 범죄규명

수도권 일대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주택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은 ‘깡통전세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 모녀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끈질기게 추적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그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주범인 어머니 A씨는 30대인 두 딸 명의의 무자본갭투자로 2017년~2021년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 채를 인수하면서 ‘깡통전세’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왔다. 경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2022년 1월 세 모녀에 대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기록을 검토한 검찰(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임대차보증금 피해자와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5월 세 모녀와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분양대행업체 사무실·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2022년 5월 A를 직접 구속한 후 기소하였다.

이후에도 검찰은 A가 동일 구조의 깡통 전세사기로 219명의 임차인으로부터 497억 원 상당을 추가 편취한 사실과 분양대행업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분양대행업자들이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면서 종합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해 2022년 11월 추가로 기소하였다.

주범 A씨는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 보완수사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구조적 경제 범죄임을 밝혀 엄단한 사례로서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여실히 뒷받침한 대표적인 수사라고 하겠다.



[6-6]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경찰이 송치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피고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추적하여, 추가 피해를 밝혀낸 후 직구속 기소하고, 분양대행업자 등 공범까지 기소(서울중앙)

'세 모녀 전세사기'는 주범인 모친이 두 딸 명의를 이용해 수도권 빌라 수백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대표적인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일반 서민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므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전세계약 체결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22. 8. 18. 법률신문 「'세모녀 전세 사기'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등 6건 '우수 수사사례' 선정」 등 보도

7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



단호한 판단과 신중한 절차 끝에,
직접 구속이라는 무거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점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한 검증으로 지켜가겠습니다.



1 아동학대범 도주·은신 추적 구속 사건 184P

2 감금·협박 강제합의 사건 186P

3 합동준강간 사건 188P

4 연인 행세 금원 편취 사기 사건 190P

5 대규모 불법사금융 조직 사건 192P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

경찰은 단순상해로 불구속, 검찰은 아동학대범으로 구속



처음 본 11살 남자아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피의자를 경찰은 단순 상해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학대와 아동 어머니에 대한 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2022년 8월 피의자 A씨(31세, 배달대행)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햄버거체인점에서 일면식도 없던 B군을 끌고 가려다 B군의 어머니 C씨(43세)가 항의하자, C씨를 밀치고 폭행한 뒤 B군에게 달려들어 신체적 학대에 가까운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9월 B군에 대한 상해죄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기록을 검토한 검찰(수원지검)은 난폭한 범행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판단 하에 보완수사에 나서 목격자와 어머니 C씨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했다. 그 결과, C씨에 대한 폭행과 B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2023년 1월부터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네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2023년 3월 광주광역시 소재 은신처에 숨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잘못했다’거나 ‘검사를 때리고 싶다’며 폭력적 성향을 거침없이 드러내 구속됐다. 검찰은 그해 3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폭력성향과 무분별한 폭행에도 단순 상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한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고 도주하고 은신한 피의자를 직접 체포하고 구속기소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
●
●
< > ↺ 🔍

↗
☰

[7-1] [아동학대범 도주·은신 추적 구속 사건]

아동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경찰이 단순 상해에 의율,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피해 아동의 모에 대한 폭행을 추가로 밝혀내고 아동복지법으로 의율 변경한 후, 은신처에 도피한 피의자를 체포, 직구속 기소한 사례(수원지검)

경찰은 11세 아동에 대한 '문지마 폭행'을 '단순 상해' 혐의로만 판단하여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아동에 대해 문지 마 폭행을 가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였다면 또 다른 아동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범죄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23. 3. 23. 뉴시스** 「초등생 문지마 폭행 30대 재판행...말리는 애엄마도 밀쳐」 등 보도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

경찰은 합의로 불구속 송치, 검찰은 감금·협박 밝혀 구속 기소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해 받아낸 합의라는 것을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A씨(20세)는 B씨(34세)에게 얼굴을 수십 회 맞고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나 같은 날 다시 B씨의 승용차 안에 70분이나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 신고를 무마하지 않으면 밧줄에 묶어 저수지에 던져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합의서를 첨부해 B씨를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기록을 살펴보다가 갑작스러운 합의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를 직접 조사한 결과, 감금 및 보복 협박이 두려워 억지로 합의한 것이며 현재도 보복이 두려워 수시로 연락처를 변경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4월 체포 및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신속히 체포한 뒤 상해죄 외에 감금죄 및 특가법위반(보복협박)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갑작스러운 합의에 의문을 갖고 보완수사에 나서 합의라는 미명 아래 감춰진 추가 범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검찰 보완수사의 또 다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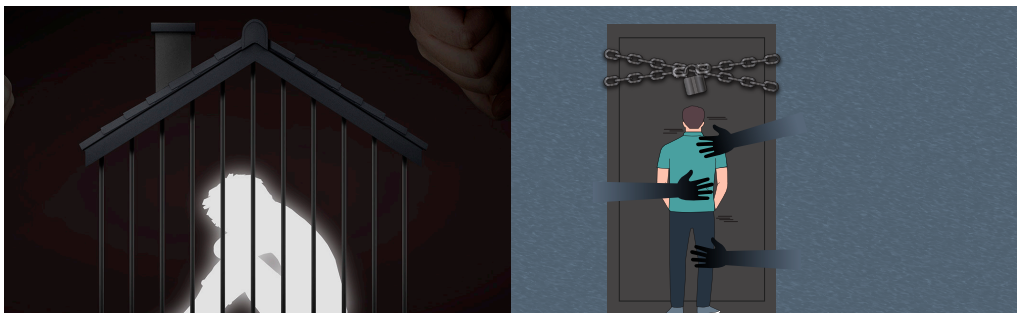


[7-2] [감금·협박 강제합의 사건]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경찰이 합의 경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경찰수사를 무마하지 않으면 저수지에 던져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합의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직접 검거 후 직구속(원주지청)

폭력 사건에서 '합의서' 제출은, 때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피의자의 2차 범죄(협박, 감금)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협박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명백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일반 협박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합의와 무관하게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보복 협박죄'(특가법)에 해당합니다.



경찰 불구속 송치한 형제의 준강간범죄, 검찰 증거 찾아내 구속기소

형의 예비신부를 형제가 합동으로 준강간한 사건에서 검찰이 DNA 증거를 찾아내 파렴치한 패륜범죄를 저지른 형제를 나란히 구속기소했다.

2021년 10월 피의자 A씨(41세)와 동생 B씨(39세) 형제는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의 한 호텔에서 A씨의 예비신부인 피해자 C씨를 합동으로 준강간(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C씨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형제는 모두 간음 혐의를 부인했다. 형인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동생 B씨는 추행만 인정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동생 B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2년 1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 아래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먼저 피해자 C씨의 속옷을 대검찰청 DNA감식실에 보내 DNA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동생 B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는 B씨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검찰은 확보한 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2022년 4월 열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피해자 C씨의 변호사를 직접 참여시켜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합의를 시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피해자 변호사의 호소를 받아들여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은 이를 뒤 두 사람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형제의 패륜범죄를 DNA 정밀 감정이라는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엄벌에 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여실히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영장심문 단계에 피해자 변호사를 참여시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 선례를 남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

↗
☰

[7-3] [합동준강간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합동준강간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안에서, 검찰이 대검에 DNA 감정을 의뢰하여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범행을 명백히 밝혀내 직구속 기소(평택지청)

피의자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추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물증 확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록만을 검토해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DNA 등 과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건이 기소되더라도 유죄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22. 7. 24. 중앙일보** 「예비신부 강간한 형제...경찰이 못 찾은 DNA 검찰이 찾았다」 등 보도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

6명 여성 울린 연애사기범, 검찰의 종합수사에 철렁

피해 여성들이 각각 신고해 분산돼 수사되던 연애사기범이, 사건을 통합해 종합적인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사기 실행 전과 2범인 30대 남성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유혹해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전문적 연애사기범. 그의 유혹에 넘어가 돈을 뜯긴 여성들이 경찰서에 서로 다른 시점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개별사건만 수사하다 보니 피해액이 크지 않다 판단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금 수수, 텔레그램 사용, 피해자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개별 경찰서의 수사는 장기간 지연됐다.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검토하다 관련 사건이 여러 건임을 발견하고 A씨의 상습적인 범행 수법의 전모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흩어진 여러 사건을 묶어 종합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재조사하고, 메시지 기록이 남은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록 분석,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A씨의 범행수법과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다.

이를 통해 A씨가 2021년 6월~2023년 6월 6명의 피해자들을 유혹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코인 투자금, 카페 창업비용,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약 6억 7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검찰은 통신, 계좌, 음식배달,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해 도주 19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진행한 조사에서 목격자와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막으려 한 혐의(보복협박)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4년 8월 A씨를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서 과편적으로 진행돼 실체 규명이 어려웠던 연애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병합 수사해 범행 전모와 전체 피해 규모를 밝혀내 구속기소함으로써 추가범행을 막은 사건이다.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
●
●
< > ↺

↗ ☰

[7-4] [연인 행세 금원 편취 사기 사건]

피의자가 6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나 경찰이 각 사건을 별개로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검찰이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상습성을 입증하여,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던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서울중앙)

연인관계로 행세하면서 그 믿음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방적이고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허황된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

경찰은 "3천만원대 불법 대부업", 검찰은 "33억원 규모 불법 사금융 조직범죄"



경찰이 소규모 불법 대부업 범죄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푼돈에 목
마른 서민들을 올린 33억 원대의 불법 사금융 조직범죄인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업체 등록 없이 서민들에게 소액의 돈을 꾸준 뒤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아 챙긴 소규모 불법 대부업체 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다가 이들이 충북 일대 지역 선후배 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
의 배후에 조직적 금융범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7월~10월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영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현금 약 3억 원,
명품 시계, 대포폰, 영업장부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범 9명을
발견하고 확대 수사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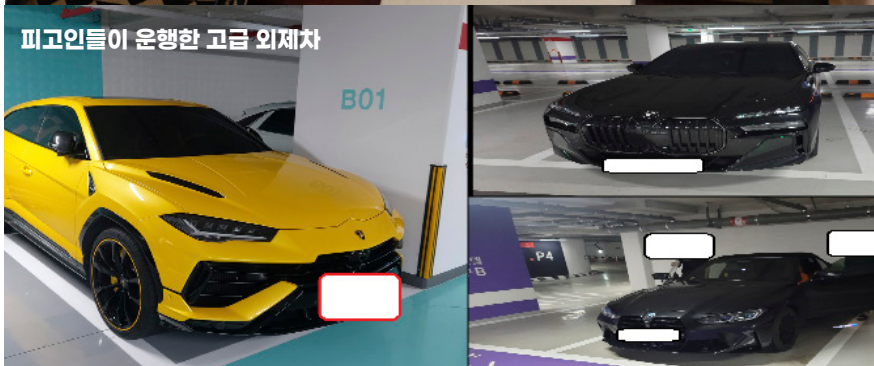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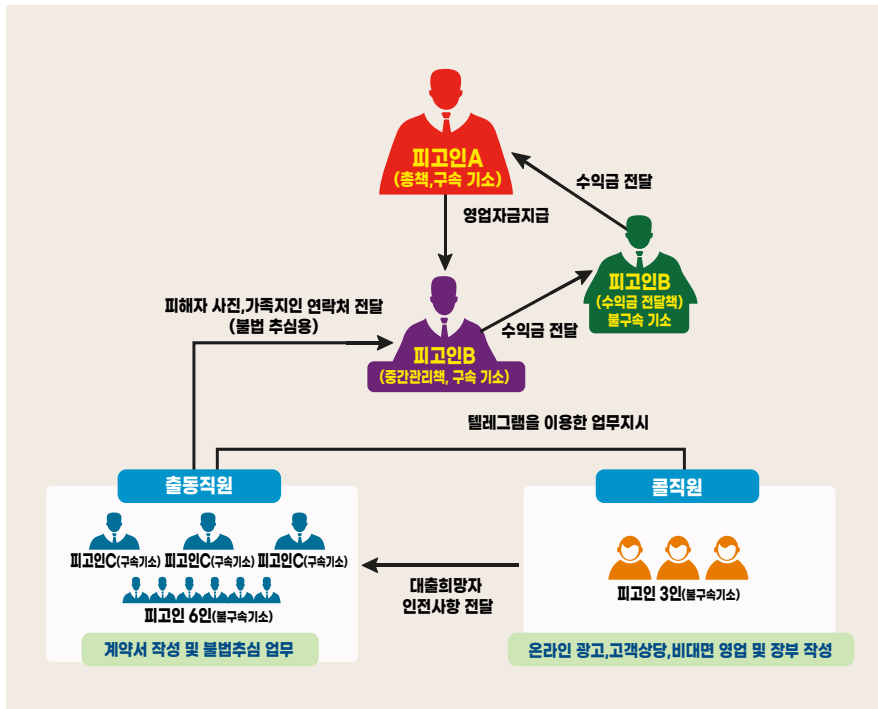
수사 결과, 총괄관리책 A씨(31)는 제천, 단양, 영월 지역 선후배들을 조직원으로 가담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하부조직으로 독립시켜 자신은 자금을 대고 수익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21년 6월~2024년 7월 총 7,570회에 걸쳐 약 59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연이율 1,000%~55,000%) 약 33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생활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10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다음 일주일 후 50~140만 원을 상환 받고, 기일 내 변제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해 폭리를 취했다.

상환을 못 하는 경우, 이자 탕감이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차명계좌로 활용해 범행을 은닉했다. 제 때 돈을 못 갚는 피해자들은 협박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리 상환을 독촉하는 불법 채권 추심도 자행했다.

A씨는 하부조직을 운영하는 중간관리책들이 줄줄이 검거되면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는 등의 조력을 통해 공범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게 하는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입체적 수사로 2024년 10월 중간관리책과 출동직원들을 줄줄이 구속한 데 이어 11월에는 주범인 A씨까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총 33억 원 상당의 초과이자 수익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불법이익 환수의 재원도 확보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법무법인 보관금(약 4억 원), 부동산, 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및 보전 결정을 받은 것.



8

사건 해결에서 사회적 회복으로 정의의 완성을 이룬 사례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그 결과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의 균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사건 해결을 넘어, 사회적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
지향하는 진정한 정의입니다.



1 서울대 노숙자 사건 198P

2 JMS 교주 성폭력 사건 20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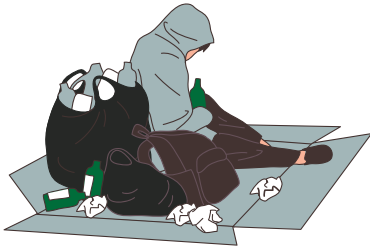
3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208P

4 친부의 자녀 상습학대 사건 210P

5 계부의 의붓딸 성폭력 및 자녀 학대 사건 212P



절도범으로 체포된 서울대 노숙자, 딱한 사연 밝혀낸 검찰 도움으로 새 출발



대학 캠퍼스 일대에서 절도 행각으로 경찰에 구속돼 송치된 60대 노숙자가 12년 째 사망자로 간주된 딱한 사연을 밝혀낸 검찰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새 출발했다.

A씨(67세)는 외벽을 타고 서울대 건물 내에 침입해 음식과 상품권 등을 절취해온 혐의로 2024년 10월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검토하다가 A씨가 20여 년 전 가출한 뒤 실종신고에도 행방이 묘연해 12년 째 사망한 걸로 간주돼 왔음을 발견했다.

담당 검사는 A씨의 처지를 심층 이해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가족과 전화 면담으로 실종신고 취소의사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의 딱한 사정을 파악했다. A씨는 자전거대리점을 운영하다 사업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오랜 세월 노숙자로 연명해왔다고 했다. 그러다 관악산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설상가상 A씨는 12년 전 실종선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런 사연을 접한 서울대학교 교수 등 피해자 10명은 모두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도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갱생보호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신속히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았



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의해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1월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보답하는 길은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육필 감사편지를 전했다. 단순 절도사건으로 보이는 범행이었지만 피의자의 특수상황을 세심히 살핀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자의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준 사례라고 하겠다.

[8-1] [서울대 노숙자 사건]



노숙인인 피의자가 대학 건물 내에 9회 침입하고 음식 등을 절취하여 구속송치된 사안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12년 전 실종선고되어 사망간주된 상태인 사실, 산 속에서 생활하면서 굶주림에 지쳐 음식물 등을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확인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피의자를 구속취소, 석방(서울중앙)

단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사건의 이면에는 피의자의 특수한 공적 신분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피의자는 모든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검찰이 전후사정을 확인하기 못한 채 막연히 구속기소 했다면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은 영영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 24. 11. 8. **노컷뉴스** 「12년간 '사망자'였던 서울대 절도범... 검찰 '기소유예' 선처」 등 보도



피의자가 보내온 감사장

No. _____

저에게 새 삶을 아껴주세요
 저의 재산을 위해 힘을 써주신
 감사님 이하 수사관 분들께 자부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써온 사안이 아르게 살았다는
 그런 자부심 안 됩니다.

감사님, 그리고 수사관님, 실무관님
 감사 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No. _____

존경하는
 414 감사님 의 [REDACTED] 감사님과
 감사진 수사관님 [REDACTED] 실무관님.
 이 고마움은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란 잘못을 저지른 한 인간이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막대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있는 것인지는
 저의 양심으로 삶에 크고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은례에 보람하는 길은 다는 파오를 저지르
 지 않는것이라 생각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에 절실히 느낀점은 나쁜일을 하면 반드시
 잡히게 된다는 것과, 세상에는 따듯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이 계시는 것을 발견
 한것입니다. 바로 감사님과 수사관님들
 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애씀을 어떻게 외면
 하고 다시 감히 나쁜것을 하겠습니까.

과거를 반성하고 아껴해주신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관여 살아보겠습니다.

2024. 11. 7

사건처분 1년 후 다시 받은 편지

Daily Note
M D

존경하는 김사님께.

이제 김사님의 기구는 환기시키기 위해
간략하게 저 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죽은 [redacted] 서울지역에서
사건대장과 사건으로 기구에 최후를
맞고 이 곳 [redacted] 정육으로 음력으로 내려온
[redacted] 입니다.

김사님 ♡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이 망설였지만,
제 마음 속에 김사님이 계셔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못해
늦게나마 감사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내려온지는 여간 길어진 듯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어진 모든 교육을 성실히 이수
하고 (자재자, 운송기 기동작전, 명봉요령, 풍차
기동사 1, 2주, 유기는 기동사 1, 2주 시험준비
및 자격증 취득)
여기 오게 된 김사님께 서약한대로
업종에 기여를 저버리지 않고 나는 바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격증 사본은 동봉합니다.
그래도 작으나마 김사님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연치, 보신그 버려쉬도 외기다)

Daily Note
M D

문영음
모든 사후의 자격은 갖추어
정신인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글 쓰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차가와 사회의 복지는 귀한 노력과 헌신에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김사님.
제 기억속에 있는 따뜻한
문경하는 그 모습에, 항상 전장과
행복이 가득 채워진 아이라
이만 죽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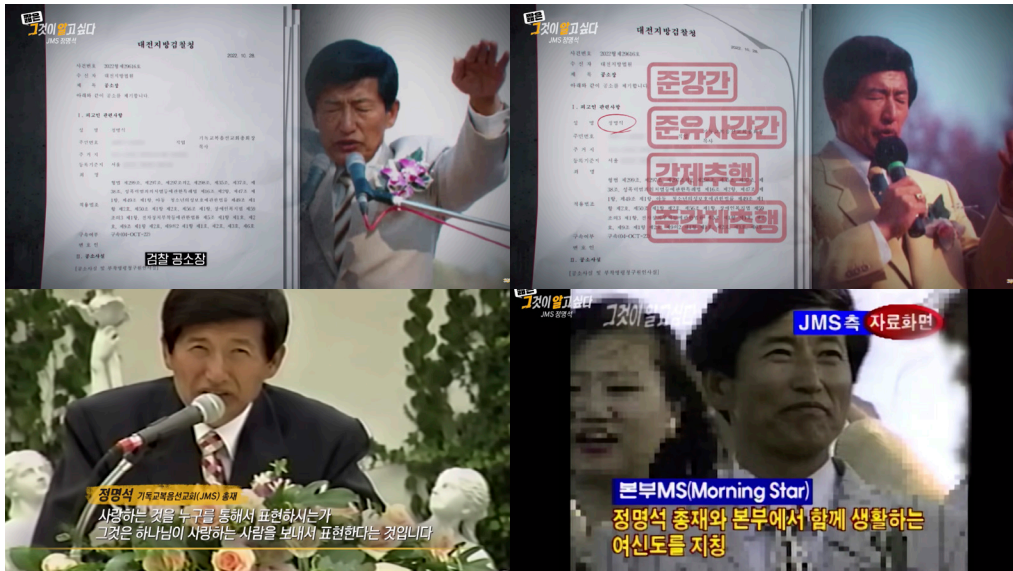
2025. 11. 5
[redacted] 드림.

P.S. 관공로 귀환기로 드립니다.
이/ [redacted]



사건 해결에서 사회적 회복으로 정의의 완성을 이룬 사례

JMS 교주의 상습 성폭력,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협력해 징역 17년형 끝어내



여신도들 성폭행으로 10년 징역형을 살고나온 종교단체 JMS의 교주 정명석이 다시 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후의 보완수사가 큰 도움을 줬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일명 JMS 교주 정명석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 등으로 10년 징역형을 마치고 2018년 2월 형기 종료로 풀려났다. 그는 성폭행 전과로 발목에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2018~2021년 홍콩 국적 A씨와 호주 국적 B씨 두 여신도를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 두 여신도는 2022년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정명석을 구속한 후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대전지검)은 정명석 재구속을 위해선 종교적 세뇌로 의사불능상태를 만들어 성관계 및 성추행을 가했다는 준강간 혐의 소명이 핵심이라 보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 협력에 나섰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2회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담당 경찰관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범죄 사실 구성 및 공판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 후 JMS 여신도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 예방조치에 나섰다. 정명석 담당 보호관찰관의 협조를 받아 법원에 ‘기독교복음선교회 여성 신도 및 해당 단체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과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 사항을 신청해 2022년 4월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9년 정명석 재판에서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종교적으로 세뇌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도 항거불능의 상태로 인정한 판례였다. 검찰은 이 판례를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적극 보완했고, 2022년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검찰은 구속 후 정명석과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직접 조사를 실시해 진술 모순 점을 규명했다. 반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비대면 이메일 조사를 실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상습적인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종교적 믿음 붕괴로 인한 충격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지원 및 법정동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검정의 긴밀한 수사 협력과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정명석은 2025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사회적 공분을 산 종교인의 특수한 성범죄 재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으로 엄벌을 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
●
< > ↺ 🔍

↗
☰

[8-2] [JMS 교주 성폭력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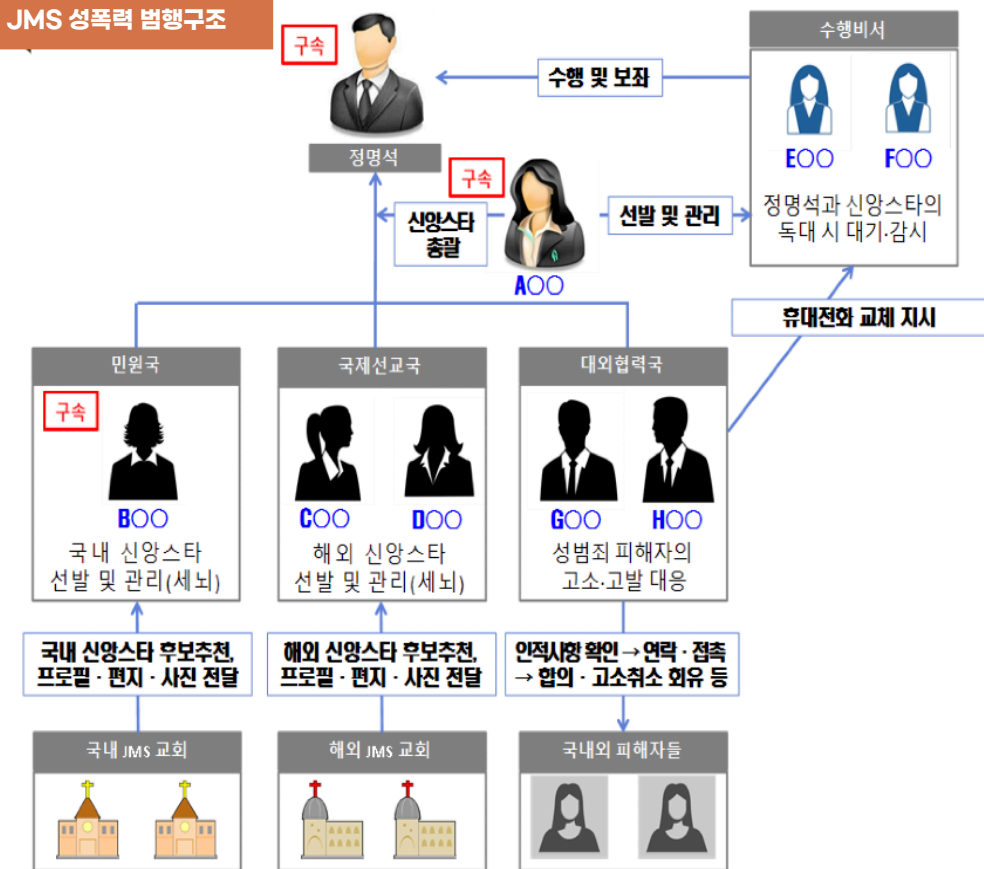
JMS 교주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사건을 경찰이 송치하자, 검찰이 직접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고 추가 범행 예방 조치를 병행하여, 피고인을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연계(대전지검)

종교적 권위 등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심리 지원, 그리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 공소유지를 위해 치밀한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25. 7. 23. **아시아경제** 'JMS 교주 성폭행·돌려차기·계곡살인' 밝힌 檢 보완수사권... 폐지 땀 실제 규명 구명' 등 보도



JMS 성폭력 범행구조



각 교회에서 작성되어 JMS 간부들에게 전달된 신앙스타 후보의 프로필

	이름	서울 교회	나이	세
	소속교회	서울 교회	수료일	
	연락처		혈액형	형
	신장/체중	cm / kg	사이즈	-
	취미		특기	
전도/관리	전도 - 주 / 관리 - 정		단점	자신감부족, 부정적
장래희망	주님 뜻 대로 사는 것		가족	교회 사택
학 교	대 졸업		경제	과외아르바이트
현재사명	서울 모델 교역자		건강	체력이 약함
보고사항	현재 서울 모델 교역자 사명 맡아 열심히 하고 있음, 대학교 졸업하고, 생명을 관리하며 열심히 하고 있음, 주님 다시 될 날까지 기다리며 사할하고 있음.			

범행장소인 월명동 수련원 내 정명석의 침실 및 거실 사진



예수를 '초림예수'로, 정명석을 '재림예수'로 주장하는 JMS 교리



정명석(주님으로 호칭)의 출소(부활로 표현) 기념행사 사진



6남매 키우며 뱃속 아기까지 둔 이주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검찰에 달미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외국인 이주여성 성폭력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추가범행까지 밝혀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 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까지 끌어냈다.

필리핀 국적의 A씨(39세)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남편 대신 미성년 자녀 6명을 홀로 부양해왔다. 그러다 2025년 1월 뱃속에 다른 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자처한 여성목사의 남편인 B씨(56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 남편이 가출해 집에 없는 것을 알고 찾아가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몸쓸 짓을 저지른 것.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 다시 A씨 집으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있던 A씨를 성추행했다.

경찰은 2025년 7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다가 추가적인 성추행 피해 정황을 확인했고,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여 추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B씨를 소환조사하면서 피해자 A씨 휴대전화의 통역 앱 사용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합의된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B씨는 이에 일부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가 자백을 했고 증거도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래서 현재는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6남매를 홀로 부양하면서 출산까지 앞두고 있는 피해자 A씨를 돕기 위한 인권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예방협의회, 지자체 복지정책과, 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회의를 열어 출산 비용



등 총 700만 원 이상의 긴급 비용 지급, 생계비 추가 지원, 자녀 등·하원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아이돌봄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남편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 지원, 피해자와 가족의 한국 적응을 위한 가정 방문 학습 지원 및 법률·통역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및 법정 동행 지원까지 받도록 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이주여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 경찰이 누락한 피해사실까지 꼼꼼한 수사로 밝혀내고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복지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종합적, 지속적 피해 회복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
●
< > ↺ 🔍

↗
☰

[8-3]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외국인 이주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부 혐의만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되자, 경찰이 보완 수사로 추가 피해를 밝혀내고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해자를 엄단함과 동시에 출산·생계·양육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원주지청)

언어 장벽과 사회적 고립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 전부를 온전히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형사 처벌을 넘어, 피해자 가족 전체가 처한 복지의 위기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의 종합적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사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충실한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친부의 상습 학대에 자살 시도까지, 검찰이 추가 학대 밝혀내고 피해아동 보호

구속 송치된 열다섯 친딸에 대한 친부의 학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추가범행을 밝혀내고 친부로부터 두 자녀를 영구분리하기 위해 친권상실 소송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여중생인 A양은 2024년 11월~2025년 8월까지 친아버지인 B씨(42세)에게 죽도 등 위험한 물건으로 맞거나 음식 섭취를 강요당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가 15차례에 이른다는 점을 밝혀 구속 송치했다. B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으며 A양의 남동생(14세)에 대한 별도의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습 학대범이었다.

사건을 송치 받아 기록을 검토한 검찰(울산지검)은 A양 남매를 B씨로부터 영구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완수사에 나섰다. 특히 면담조사 결과, A양이 지속적인 학대로 극심한 불안상태에 있으며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손목을 긋는 등 자살을 시도한 정황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속한 정신감정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A양 남매의 진술과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누락한 4건의 학대 범행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 B씨는 이들 범행도 모두 자백했다.

검찰은 B씨의 친권 상실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대검찰청에 두 가지 분석을 의뢰했다. A양과 B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친할머니까지 포함한 세 사람에 대한 DNA검사였다. A양 남매의 생모는 10여 년 전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됐고, B씨는 혼외자였기에 후견인이 될 A양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맞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DNA 검사는 혈연 관계를 입증해줬다.



검찰은 구속 기소 전부터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와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전문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10개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 정신감정과 심리치료가 이뤄지게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전문위원(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피의자의 성향 및 친권 여부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친권상실(제한) 청구소송 자료로 삼았다.

●
●
●
< > ↺ 🔍

↗
☰

[8-4] [친부의 자녀 상습학대 사건]

친부가 15세 딸을 상습 학대한 사건이 구속 송치되었으나 전체 학대 정황이 불분명하자, 검찰이 피해 아동을 직접 조사하여 4건의 추가 학대 범행을 밝혀내고 10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혐의로 기소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울산지검)

상습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드러난 범행 횟수 외에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아동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즉각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친권상실 청구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바, 사건의 처벌을 위한 실제 규명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 **25. 10. 24. 세계일보** 『"TV리모컨 안 보인다" 죽도로 딸 내리친 40대 아빠, 구속기소』 등 보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의 친자녀 학대까지 밝혀내고 친권상실 청구로 가족보호에 나선 검찰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다른 4명의 자녀들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내고, 범죄자로부터 피해가족을 격리해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A(44세)는 2015년 상반기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7년간 의붓딸인 B양(재혼한 처의 자, 당시 만 9세~16세)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초기 경찰 송치 당시 A씨는 조사를 거부했으나, 검찰(전주지검) 조사에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된 성범죄 외에 숨겨진 상습 성적 학대 및 아동학대 범죄를 밝혀내고, B양에 대한 장기적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B양이 ‘가정이 무너진다면 피해를 폭로한 자신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주입받아 학대에 순응한 가스라이팅 성범죄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다. 또 A씨 참여 하에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카카오톡 캘린더에서 성범죄를 암시하는 내역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추가 성범죄(2022년 1월 11회 성폭력)를 인지하고, 상습적인 성적 학대(음행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친자녀 2명 포함 다른 자녀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혐의도 새로 밝혀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자녀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행위’도 정서적 학대 범주에 넣어 친권상실 청구의 필수적 대상이 되도록 법리를 구성했다.



검찰은 2022년 4월 추가 압수수색과 피해자(자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간, 강제추행, 아동 성범죄,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를 구속 기소했다. 또 피고인이 친권을 보유한 친자녀 4명 전부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와 B양의 친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청구를 했다. 가해자와 피해 자녀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지자체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해 피해 가족에게 신속히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 사건을 중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대상 사건으로 지정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을 신청해 일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범죄수사 뿐 아니라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8-5] [계부의 의붓딸 성폭력 및 자녀 학대 사건]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친 자녀들에 대한 상습 아동학대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내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며 친권상실청구 등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전주지검)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피해 아동들을 가해자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는 친권상실 청구와 가족 전체에 대한 복지 지원 연계 등 형사처벌을 넘어선 종합적인 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22. 6. 1. 머니투데이 '9살 의붓딸 7년간 '몸쓸짓'... '말하면 죽어' 엄마에 말도 못했다' 등 보도

9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



우리는 불송치 결정 뒤의 의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증거를 다시 살피고 기록을 검증하며,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직접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1 경찰 2회 불송치 후 고소인 사망한 6.2억 횡령 사건 216P

2 게임프로그램 개발 투자 사기 불송치 사건 220P

3 오피스텔 분양사기 불송치 사건 222P

4 변호사법위반 등 불송치 사건 226P

5 아파트 수분양자 인도청구 방해 불송치 사건 228P



6 가정폭력 무고 불송치 사건 230P

7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불송치 사건 232P

檢, 고소인 사망으로 문힐 뻔한 6억대 횡령 전모 밝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6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칫 영원히 문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 끝에 범행 전모가 드러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소인 A씨는 B(51세)·C(26세) 부자(父子)에게 백화점 침대 매장의 경영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들은 A씨의 신뢰를 배신했다. 약 2년간 고객들의 현금 결제 주문을 임의로 취소한 뒤, 그 현금을 백화점으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억 2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법리상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약서 등을 검토한 뒤 보관자 지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수사가 3년 가까이 지연되는 사이, 피의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고소인 A씨는 2025년 3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났다.

고소인의 사망으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먼저 A씨의 누나를 면담해 유족의 아픔을 살피고 묻혀있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에서 나왔다. 검찰은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 명의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경찰이 밝



혀내지 못했던 6억 2천만 원 횡령의 전모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B·C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서 법리 오해로 문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을 검찰이 철저한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으로, 이에 유족인 A씨의 누나는 “죽은 동생의 한을 풀어주었다”며 검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
●
< > ↺ 🔍

↗
☰

[9-1] [경찰 2회 불송치 후 고소인 사망한 6.2억 횡령 사건]

경찰이 2회 '혐의없음' 불송치 후 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6.2억 원대 횡령 사건을 넘겨받아, 계좌추적 등 끈질긴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규명해 기소하고 사망한 고소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유족의 감사 편지를 받은 사건 (성남지청)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처럼 겉보기에는 단순히 보여도 혐의 유무를 가르는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계좌 분석 능력과 정교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제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망한 고소인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고소인 A씨 누나의 편지 (발췌)

“검사님께서 특가법으로 법원에 공소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도 기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제 동생이 지난 몇 년간을 매일매일 애를 태우며 이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은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 버려서... 가슴이 아프고 원통해서... 한 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만약 동생이 살아서 이 사실을 같이 듣게 되었다면...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명예회복을 드디어 했다면서 ‘역시 정의는 살아 있다’며...”

“엄청나게 행복해했을 동생의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 오고... 너무나 슬프고 슬펍습니다.”

“제 동생...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 몇 년간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한 채,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가 지연되고... 범죄자가 처벌도 안받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온갖 거짓말과 루머를 퍼뜨리고 공격을 하니 동생은 인간적인 배신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검사님이 저와 변호사님을 면담하고, 우리 하소연도 다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마치 자신의 가족 일처럼 친절하고 너무 자상하게 대해 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지연되었던 동생의 사건을 검사님이 빠른 시간내에 잘 밝혀 주셔서 동생의 한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17일 000 올림



감 사 문

존경하는 ■■■ 검사님 !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형제)에서
수사했던 고소인 C 의 누나, 김이다.

우선, 검사님께 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편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변호사님으로부터 제 동생 사건의 결과가
검사님께서 특약으로 법원에 공소 제기했다는 소식을 받고
너무라도 기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의 지난 몇 년간을 파랗파랗 매를
타고며 이 소식을 간절하게 누누와도 기다리고 있었는지
동생은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 버려서
제 옆에 동생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윤희해서 변호사님 전화를 받고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한없이 울지만 하였습니과.

만약 동생이 살아서 이 사실을 같이 듣게 되었다면,

NO. 2021-9-1171

2021.09.11

제가 너무와 사랑하는 동생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업장하게 좋아하면서 평생회복을 드디어 하고면서 여자
점치는 살아 있다며 자신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밤
마다 하였던 것입니다.

업장하게 행복하였을 동생의 생활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
오고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마음에
너무와 슬프고 슬펐습니다.

제 동생 C가 증인으로 2022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 몇 년간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한 채,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서편 이유인지 알 수 없다. 차일피일 미루지만 확실히,
수사가 지연되고 정소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범죄자가
책벌도 안 받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온갖 거짓말과 우매를
떠드리고 공격을 하니까 동생은 신장적인 비산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업장하게 고통을 받다가 그 정도 많은
착하고 선한 동생은 결국 복통과 우리들에게는 항상
행복했으며 좋았다는 짧은 통화만 하고 열과 의들에게는
차마 전화를 못 했지 (큰형), (작은형)
미안하다 라는 글만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과.

검사님이 저와 변호사님을 면담하고, 우리 하소연도 다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마치 자신의 가족 실처럼
권필하고 너무 자상하게 대해 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3번여의 시간이 결월 정도로 지냈었던 동생의 사건을
검사님이 빠른 시간내에 잘 밝혀 주셔서 동생의
한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검사님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사님께서 배려해주신 배려를 절로 잊어 않고 항상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김수남.

동생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17일

윤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

경찰 못 밝힌 게임프로그램 개발 투자사기, 검찰이 밝혀내



경찰이 덮으려 했던 게임프로그램 개발 빙자 투자사기 사건을 검찰이 끈질기고 치밀한 수사로 밝혀내 범인을 구속 기소했다.

A씨(46세)는 2018년 7월~2020년 3월 피해자 2명에게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총 29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A씨가 “단순히 투자처 계좌를 알려주고 투자를 주선했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는 점을 들어 2020년 12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창원지검 마산지청)은 30억 가까운 피해규모와 A씨가 사기 및 도박 전과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수취계좌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경찰의 보완수사 진척이 미진하자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2년 7월~12월 피해금 수취 계좌와 피해자 명의 계좌 등을 집중 분석했다. 또 A씨에 대한 인터넷 도박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알



려준 수취 계좌 대부분이 투자와 무관한 도박사이트 계좌 또는 대포계좌라는 것을 밝혀냈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29억 원을 도박 자금 용도로 편취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A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검찰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해 A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A씨가 수형 중인 중요 참고인을 면회할 때 녹취록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보복의사를 내비친 점을 확인해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추가 입증했다.

검찰은 무려 2년 10개월 걸친 보완수사로 2023년 11월 A씨의 구속 기소에 성공했다. 3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지만 부실수사로 종결될 뻔했던 대규모 사기 사건의 실체를 끈질기고 치밀한 수사로 규명해낸 것.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여실히 입증한 또 다른 사례라고 하겠다.

●
●
●
< > ↺
🔍

↗
☰

[9-2] [게임프로그램 개발 투자 사기 불송치 사건]

게임프로그램 개발을 빙자한 투자 사기 고소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자, 검찰이 계좌추적 및 심리생리검사 등을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마산지청)

투자금이 유입된 계좌가 대포계좌이거나 도박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는 끈질긴 계좌 추적과 보완수사가 없다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범죄의 실체가 묻힐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오피스텔 분양사기 검찰의 보완수사로 해당 건설업체 대표 구속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해당 건설업체 대표 구속으로 마무리 됐다.

건설업체 대표인 A씨(44세)는 2021년 12월~2022년 7월 강원도 강릉에서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 회사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탁계약 관계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탁사가 아니라 시행사임에도 회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 전등기도 해 주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업체가 인천, 양양 등 이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성공했고, 재무제표 상 부실하지 않으며 분양대금을 오피스텔 관련 용도에 썼다는 점에서 편취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 6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소인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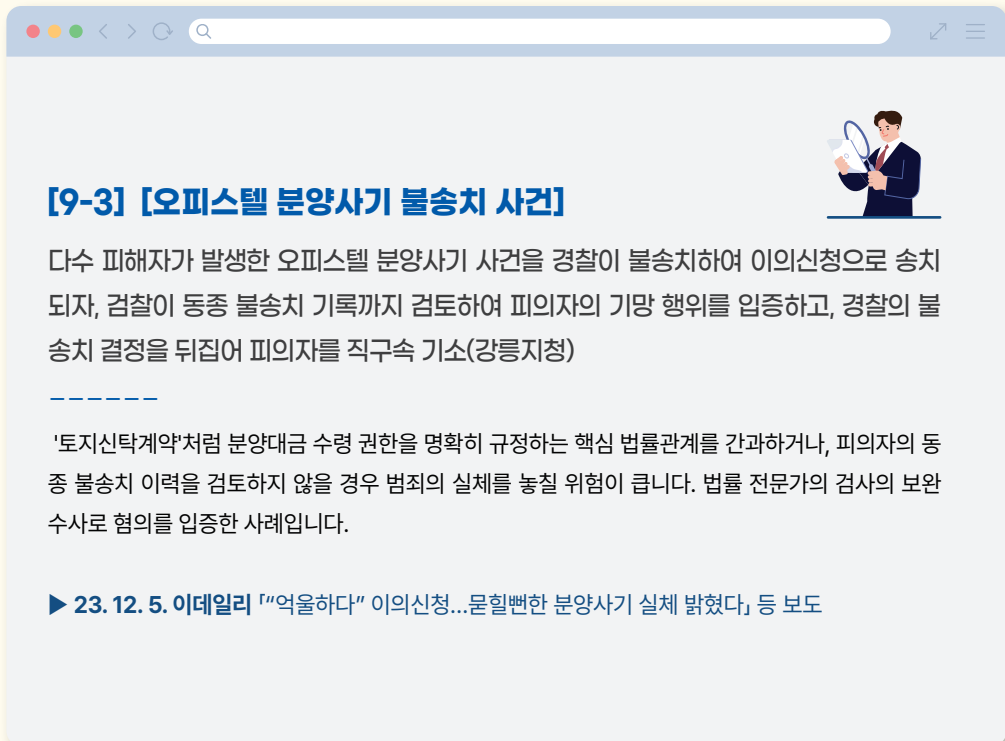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경찰이 분양사업의 핵심인 ‘토지신탁계약 관계’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지의무 위반’과 ‘분양대금 수령 금지 의무 위반’ 등의 법리적 쟁점을 놓쳤음을 발견했다. 또 경찰이 성공했다고 판단한 인천과 양양 등의 오피스텔 사업에서 동종 사기 사건 불송치 전력이 3회나 된다는 것을 경찰이 간과했음을 포착했다.

검찰은 A씨의 종전 불송치 사건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피의자의 다른 분양사업에서 이미 미분양 세대가 다수 존재하고 약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찾아낸 것이다.

검찰은 또 A씨 업체가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해 M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신탁계약 특약사항 상 분양대금 수령은 신탁사 명의의 신탁관리계좌로만 가능하며, 위탁자인 피의자 회사는 분양대금 수령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A씨 업체는 이를 위반하고 직접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신탁계약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업체 계좌로 직접 수령한 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신탁 해지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도 검찰이 밝혀냈다. 투자자들을 속인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명확히 입증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3년 10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간과한 신탁계약 관계와 동종 사건의 부실 정황을 끈질긴 직접 보완수사로 규명해 자칫 암장될 뻔한 8억 원대 분양사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사건이었다.



[9-3] [오피스텔 분양사기 불송치 사건]

토지신탁계약처럼 분양대금 수령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핵심 법률관계를 간과하거나, 피의자의 동종 불송치 이력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체를 놓칠 위험이 큼니다. 법률 전문가의 검사의 보완 수사로 혐의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우편으로 보내온 감사장

감사장

저는 작년 2022년 10월 14일 10월 14일에
오피스텔을 화재로 잃어버린 피해자로서 진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화재로 인해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
다. 3명의 사기를 당했는데 합한 금액이 8억은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3명은 감심하여 함께 고소하려고
하곤 했으나
좋은 것이라 인내하여 생략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대타로 기다렸지만
최종 결과는 불승리 결과였습니다.
아니 ~ 불승리 없는 승리를 얻기 위한 사기가
불승리 결과입니다.
너무나 어이 없는 환란 가운데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주신 정성껏 스토리에 기록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당시에 나의 신척을 했습니다.
정신과를 찾아가서 감사식 302호
[redacted] 감사드립니다
[redacted] 수사관 [redacted] 계장님께
지리 말씀드리고

경찰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전화문의하면
소통이 잘 되었고 알아듣기 쉽게 친절히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쉬지않고 사무실에 근무하며
저희 피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입주자들
여러분에게도 수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며 철저하게 혼신을 다하여
정의를 다하여 정의로운 수사를
하여 주신 덕분에 구공판송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지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곳이 있었다는
것에 얼마나 또 감사하고
호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건에 고생 많이 하여 주신
검사님과 수사관님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전화문의하면
소통이 잘 되었고 알아듣기 쉽게 친절히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쉬지않고 사무실에 근무하며
저희 피해자들과 오피스텔 입주자들 여러분에게도 수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며 철저하게 혼신을 다하여
정의를 위한 수사를 하여주시 덕분에 구공판송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지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곳이 있었다는 것에
얼마나 또 감사하고 호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건에 고생 많이 하여 주신 검사님과 수사관님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

경찰이 놓친 '로비 명목' 금품수수, 검찰 보완수사로 수갑 채워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약 2,000여 만 원의 추가 피해액까지 밝혀내 결국 구속 기소로 마무리했다.

골프장 잔디 관리업체 대표인 A씨(43세)는 사업관계로 알게 된 B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형 감면을 위한 판·검사 로비 비용 명목으로 2020년 9월~12월경 약 2,800만 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2022년 10월 검찰(제주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은 피의자 A씨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구속 상태이던 피해자 B씨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돈까지 A씨가 빼돌린 것을 발견했다. B씨가 처분을 의뢰한 승용차 판매대금 약 1,380만 원과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까지 합쳐서 약 2,400만 원을 횡령했던 것.

반면 A씨 계좌와 휴대전화 상 판·검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했음을 뒷받침하는 수사 결과였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자백을 받아낸 뒤 2023년 3월 A씨를 횡령,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더 나아가 A씨 아내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및 승용차 등의 차명 재산을 발견하고 추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까지 거뒀다.



감옥에 있던 사람을 어르고 등쳐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이 경찰 수사로 그냥 덮일 뻔한 것을 검찰이 보기 좋게 해결하고 범죄수익까지 환수한 사건이었다.

경찰이 놓쳐도 검찰이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 하겠다.

●
●
●
< > ↺ 🔍
↗ ⋮

[9-4] [변호사법위반 등 불송치 사건]

판·검사 로비 명목 금품수수 등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검찰이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추가 횡령 혐의까지 인지하여,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고 차명재산에 대한 추정보전까지 완료(제주지검)

피의자 계좌에 대한 면밀한 추적 없이 초기 진술 등에만 의존해 사건을 종결할 경우, 범죄의 전체 규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차명 재산 추적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기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23. 3. 3. KBS뉴스** 「"판·검사 로비해 줄게"... 수천만 원 받아 쓴 사기범 '구속' 등 보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300세대 아파트 입주 방해사건, 검찰은 배후 중견건설사 대표 기소

시공사와 시행사가 한 통속이 돼 경찰을 속이고 300세대나 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를 방해한 사건을 검찰이 전면 재수사해 시공사인 중견건설사 대표를 기소했다.

울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300여명(이하 수분양자들)은 2020년 10월 부실시공과 공사 지연 책임을 묻는 시행사 상대 아파트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분양자들이 부동산 압류 가집행에 나서자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보일러 컨트롤러를 떼고 전기선을 절단해 수분양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12월 시공사와 시행사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한다며 함께 고소했다. 그러자 시공사도 ‘시행사에 대한 14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법원 집행관과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146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9개월이나 수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며 2021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분양자들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울산지검)이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해 약 2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시공사 대표인 A씨(50세)가 사실상 운영하는 같은 회사라는 것을 밝혀냈다. 시행사의 대표인 B씨(54)는 시공사의 임원이기도 한 ‘바지사장’이었다. A씨와 B씨는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오자 공사대금 미지급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유치권을 주장하며 아파트의 난방 및 전기 부품을



고의로 파괴한 것이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A씨가 약 8개월 간 출석에 불응하자 A씨를 직접 체포한 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A씨를 소송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중견건설업체가 아파트 부실 및 날림 시공으로 300여 명의 서민들을 울린 것으로도 모자라 조작된 채권으로 무고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해 서민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사법당국까지 농락하려 했던 사건이다. 다행히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다.

●
●
●
< > ↺ 🔍
↻

Q

↗
☰

[9-5] [아파트 수분양자 인도청구 방해 불송치 사건]

시공사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아파트 인도를 방해한 사건을 경찰이 두 차례나 불송치 하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여 유치권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범행을 기획한 배후의 시공사 대표 등 주범들을 인지하여 기소(울산지검)

300세대 아파트 입주 방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유치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전면 재수사 결과, 이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사실상 동일 조직으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조작한 범행임이 밝혀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은 허위 유치권 행사 등 부당한 실력행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24. 5. 26. 머니투데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입주방해까지...건설사 사장 '기소'」 등 보도

국제 결혼한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무고한 국제결혼 브로커, 경찰 수사 피했다가 검찰에 들미

무자격 국제결혼 브로커가 중개수수료를 다시 챙기기 위해 국제결혼시켰던 커플을 이혼시키려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무고하고도 경찰수사는 피해갔으나 검찰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인 A씨(62세)는 2023년 한국인 남성 B씨와 라오스 국적 여성 C씨의 결혼을 중개했다. 그러나 B씨와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이 생기자 C씨를 이혼시킨 뒤 다른 한국인 남성과 결혼시켜 다시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시켰다. 2024년 4월 B씨가 C씨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한 뒤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C씨 명의로 경찰서에 제출한 것. 뒤늦게 이를 안 B씨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2024년 11월 26일 A씨 무고 혐의에 대해 C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으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2025년 3월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검찰은 B씨와 C씨 부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가 부부를 이간질해 이혼시킨 뒤 C씨를 재혼시켜 중개수수료를 챙기려 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C씨가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겠고,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소개시켜주겠다’는 A씨 말에 속아 가출했을 뿐 B씨에 대한 고소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주요했다.

피의자 A씨는 검찰 조사하던 중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무심코 자백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계좌 거래내역과 네이버 밴드 게시글 및 채팅 내역을 통해 A씨가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영업을 했음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2024년 8월 무등록 상태에서 ‘라오스 몽족 여행결혼 공유’라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한국 남성



7명에게 라오스 국적 여성을 소개해 주고 국제결혼 절차를 진행해준 대가로 4천여만 원을 받은 것.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5년 9월 A씨를 무고 및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명색이 결혼중개업을 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멸절된 국제결혼 커플을 이혼시키려 했던 ‘결혼파괴범’이 경찰의 수사망은 교묘히 빠져나갔지만 검찰의 보완수사에 결국 덤미를 잡힌 사건이었다. 또 그 결혼파괴범의 범죄에 이용당해 자칫 무고죄로 함께 처벌받을 뻔한 이주여성이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지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9-6] [가정폭력 무고 불송치 사건]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한 허위 고소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자, 검찰이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를 통해 고소를 사주한 인물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임을 밝혀내고, 무고 및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여주지청)

국제결혼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무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인 브로커가 중개수수료를 노리고 허위 고소를 사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무등록 중개 영업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내 무고 및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25. 9. 24. 매일신문 『“한국男과 결혼후 돈벌고 이혼해”... ‘국결업자’ 조연에 허위 가정폭력 고소까지』 등 보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

허위 영수증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금융범죄를 밝혀낸 검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들이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지능적 금융범죄로 경찰 수사를 따돌렸지만 영수증 발행한 업체들이 유령회사임을 밝혀낸 검찰의 보완수사에 조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조직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경찰은 2025년 5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상품권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인 △△티켓 대표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허위 거래 영수증을 내면서 '상품권 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믿고 자금세탁 조직과 무관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만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서울동부지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적 자금세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티켓에 대한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관할 세무서에 매입·매출 증빙내역이 신고 되지 않았음을 밝혀내 △△티켓이 유령 상품권 업체로 자금세탁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7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상품권업체인 OO상품권도 △△티켓과 같은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자금세탁조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총괄관리책 B씨 아래 중간관리책들이 OO상품권과 △△티켓을 이용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온 자금세탁조직의 실체가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토대로 8월 중간관리책 C씨, 9월엔 OO상품권 대표 D씨를 구속한 데 이어 총책 B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금융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수법과 구조를 검찰이 밝혀냈다는 점에서 지능형 범죄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
●
●
<
>
↺
↻
Q

↗
☰

[9-7]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불송치 사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이 허위 거래 영수증을 제출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유령 회사임을 밝혀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어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서울동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은 대포통장, 가상화폐, 상품권 거래 등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는 물론 다시 한번 검찰의 그물로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 **25. 7. 4. 헤럴드경제** 「경찰 교묘히 속였는데... 합수단에 덜미 잡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 등 보도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살피는 정의

수사는 진실을 향한 여정입니다.

사실로 증명하고, 증거로 판단하며,

끝까지 묻고, 끝까지 밝힙니다.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보완에서 정의로

수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법의 보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강력범죄 피해자에서 사회적 약자까지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반드시 사회의 정의와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않게

검찰보완수사 우수사례집

검찰보완수사



우수사례집



www.moj.go.kr